

제**20**대 총선을 통해 본
한국의 정책선거 현황분석

한국방송공사(K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1. 연구 개요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	4
3.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24
4. 경상북도 안동시	40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61
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5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병	89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107
9. 정책쟁점별 선거방송 보도 내역	126
10. 맺음말	130

1. 연구개요

2015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이탈리아, 체코, 벨기에 등의 국가와 함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Flawed democracy)로 선정되었다. 점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의 자유’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치 참여’ 항목과 ‘정치 문화’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Full democracy)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2015). 이러한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주의’, ‘세대 간 양극화’, ‘낮은 여성 대표성’,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등이 한국정치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20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정당, 후보 등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여 선거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참여관찰 방법론을 통한 선거 연구는 지난 2004년 이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참여관찰이 심층적인 사실의 발굴보다는 단편적인 선거과정의 리포트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세부 주제를 확정지은 후 각 참여관찰 대상의 지역구에 가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20대 총선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선거란 정당, 후보자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펼쳐나갈 정책 구상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경쟁하는 후보, 정당의 정책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의 정책이 경쟁자들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방식의 ‘포지티브(positive)’ 선거운동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선거 문화이다(박명호 2003). 이러한 정책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기제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매니페스토’란 “정당이 선거 이후 정권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이다(이현출 2006).

한국 사회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의 남발 등의 후진선거문화를 일소하고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이호영 2009). 많은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니페스토의 형식요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현직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조진만 2010),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에 의하여 정치인들이 수동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하였다(이호영 2009). 또한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지역구도에 기반 한 정당 지지와 후보자 요인이 투표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정책에 대한 고려는 앞선 요인들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연 외 2013; 송건섭 외 2011). 따라서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지양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인지하고 그러한 인지가 투표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정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책 선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주요 권역별로 소수의 선거구를 선택하여 각 선거구 별로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한 아래의 일곱 가지 세부 주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1) 특정 직업군과 학력의 연관성
- (2) 공천경쟁 구도
- (3) 문중대결 및 경북도청 이전 효과
- (4) 사회경제 변화, 선거구 조정
- (5) 무상복지 대 지역개발
- (6) 여성 후보자
- (7) 북한이탈주민

상위 일곱 가지 세부 주제는 관찰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로드맵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참여관찰이 가능하며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는 보다 풍부한 20대 총선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널리 논의되는 이론을 토대로 하여 세부 주제를 확정지은 후 각 참여관찰 대상의 지역구에 가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총 일곱 가지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별 지역구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각 주제에 따라 (1)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3) 경상북도 안동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 서울특별시 강남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 7개의 지역구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총 7명의 연구자가 각각 하나의 지역구를 맡아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의 역할분담

연 번	성명	지역구	주요 내용	비고
1	최규식 (KBS)	KBS	연구과제 선정 및 쟁점별 선거보도	책임연구원
2	민병기 (충남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정 직업군과 학력의 연관성 분석	연구원
3	민 희 (경희대)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공천경쟁 구도 분석	연구원
4	박영환 (영남대)	경상북도 안동시	문중대결 :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문중 표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원
5	윤대엽 (연세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경제 변화, 선거구 조정과 20 대 총선	연구원
6	정수현 (한양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무상복지 대 지역개발	연구원
7	강주현 (숙명여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 후보자와 20대 총선	연구원
8	정희옥 (명지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의 총선	연구 책임자

2. 대전광역시 유성구

■ 특정 직업군과 학력의 연관성 분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 참여관찰

I. 서론

20대 총선에 대한 참여관찰의 결과인 이 글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선거구를 중심으로 정책 쟁점(policy issue)과 비정책 쟁점(non-policy issue)의 중층적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적 쟁점은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을 의미하고, 비정책적 쟁점은 후보자들의 입장이 그들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쟁점 즉 구조적 쟁점을 의미한다(이원규 1993, 245~246).

대전은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전체 선거판도의 barometer 지역으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 동부지역(동구, 중구, 대덕구)과 서부지역(서구, 유성구)의 투표성향이 다르게 확인되고 있다. 즉,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서 진보적인 후보나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강해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선된 바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송석찬 후보가 당선된 바 있고 이후 17대부터 19대까지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3선)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17대 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으나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여 자유민주연합으로 소속을 바꾸어 출마해 당선되었다. 19대 선거에서는 다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대 총선에서 유성구는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분구되었다. 이 중 을 선거구는 유성의 북부지역으로 대덕연구단지과 군사교육기관(각 군 대학)이 위치하는 등으로 인해 그동안 “대전의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를 비롯해 석사 이상 고학력자가 거주 인구 대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구성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후 참여관찰의 주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그리고 벤처기업 관련 유권자들의 선택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 정당이 없고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고학력 연구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정책 쟁점과 비정책 쟁점 중 어느 요인이 후보결정에 더 많은 영향요인이 되었는지 집합적 자료로서 선거결과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참여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관한 참여관찰에서는 후보들의 핵심 득표 전략과 주요 득표대상, 그리고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구의 특성을 중심에 두어 관찰할 것이다. 부연하면,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강남좌파”와는 다른 유성좌파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에 대해서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강남좌파를 김진석과 강준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김진석 2011; 강준만 2011).

“생각은 좌파적인데 생활수준은 강남 사람에 못지않은 사람들로, 꼭 강남에 살지는 않아도 생활은 강남 사람처럼 하되 생각은 진보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실제 생활은 거의 보수와 비슷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식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나 자식들의 교육문제에서는 보수처럼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면서, 의식은 조금 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한 나라당만 아니면 어느 정당이라도 찍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를 좀 더 이론적 차원에서 풀란차스와 같은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들을 “신중관계급”이라고 하고, 네오베버리언들은 중산층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편, 풀란차스는 신중관계급을 구중관계급과 함께 개인주의 및 직업승진,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반감, 그리고 부르주아 지위로의 열망을 갖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양춘 2005, 118).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그간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 혹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고, 그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책(policy)가 아닌 쟁점(issue)과 투표율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투표 참여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된 분석대상과 사용변수는 <표1>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 분석대상은 미시적 혹은 거시적 수준에서 구분되고 변수는 단기적 요인과 장기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구분에서 정책은 단기적이고 미시적 수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와는 달리 김욱(2012)의 연구는 정책투표를 중심으로 그 유형의 확장을 시도한 연구이다. 즉, 정책투표를 모든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는 대신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정책 쟁점에 대한 후보나 정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표를 던지는 행위로서 쟁점투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선거 공간에서 정책의 개념의 확장을 통해 포괄적 수준에서 정책선거를 이해하기에 적절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쟁점(issue)의 확장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선거과정에서 정당 내부

에서 발생한 공천 갈등이나 특정 후보의 도덕성 시비와 같은 비정책 요인과 투표율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1> 분석대상과 사용변수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 구분

구분		관점(분석대상)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요인 (변수)	단기적 요인	후보자 요인 당선 경쟁 정책(이슈) 선거운동/TV토론/광고	정당일체감(지지도) 선거관심도 정부(정치)신뢰도 후보자 선호도(호감도) 선거참여비용(투표소/날씨)
	장기적 요인	인구적 요인(인구수/밀도/인구이동) 도시화(지역별 산업) 지역 경제력(경제지표) 선거제도(선거구제/투표방식)	성/연령 학력/직업 정치적 성향 사회자본 의무감(국가나 체제/지역사회)

출처: 김태완, 2012. “19대 총선 집합자료를 이용한 당선 가능성 예측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2(3). 157.

그런데 쟁점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캠벨(Angus Campbell) 등에 따르면 유권자는 현재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한 후보자의 쟁점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입장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Campbell et al 1960, 180).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쟁점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개별적 노력만이 아니라 정치 agenda 형성의 기능을 갖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20대 총선은 정당들 간의 정책적 특이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원인은 각 정당의 공약이 갖는 유사성이 컸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정당 간 인물교환(이 또한 20대 총선의 특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으로 인해 정책 이미지가 유사하게 되는 효과를 보였을 수도 있다.¹⁾ 또한, 언론 역시 쟁점에 관한 정보의 확산과 쟁점의 구도의 형성자로서 그 역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총선 결과를 대상으로 쟁점과 투표율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들로 압축하여 살펴본다. 강경태(2008)는 횡단시계열(Cross-Sectional Time-Series)분석을 통해 1987년부터 2007년 대선까지 14회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정치요인, 경제요인, 기타변수로 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도저촌고 현상이나 지역주의, 1·2위 정당간 득표율 차이, 그리고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수로 구성되는 정치요인보다 경제요인이 투표율의 변화에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율의 상승과 투표율은

1)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공약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약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이들 정당과 새누리당과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주요 3개 야당 정책 일치도 50% 넘어””. 2016.04.11.; 정당 간 인물교환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들이 상대 정당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비례관계로 나타났고, 고용율과 투표율은 비례관계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후보자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준석과 김민선의 연구(2009)에서는 후보자의 경력이 투표율 상승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도전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종사하던 정치경력도 도전자의 역량의 지표로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의 상승과 더불어 그 도전자의 당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을 주요인으로 상정했지만, 후보자의 이전 정치경력이 역량으로 표현되었다는 측면에서 후보자의 인지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차원에서 도전 후보자의 능력은 비정책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태완(2012)은 투표효능감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는 후보자간 높은 경쟁도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해 유권자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한 표’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권(casting vote)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파악했다. 그의 연구에서 당선가능성 예측과 관련을 갖는 변수는 지역주의, 현역출마 여부, 그리고 후보 수 등 비정책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2. 분석틀

앞서 이 글의 분석방법으로 쟁점투표를 정책 쟁점과 비정책 쟁점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먼저, 정책적 쟁점은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겐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의 입장과 같이 주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안과 그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권과 여당의 업적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책적 쟁점은 후보자들의 입장이 그들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쟁점 즉 구조적 쟁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구조적 외부적 사건사적 요인들로 구성할 수 있는데, 북한요인이나 지역주의, 정당 내 공천갈등, 후보의 도덕성 등을 변수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쟁점의 특성에 따른 분류

구분	단기적 혹은 사건적 특성	장기적 혹은 구조적 특성
정책 쟁점	· 헌안에 대한 논쟁의 강도 · 정당 혹은 후보자 간 정책의 유사성 정도	· 정부와 여당의 업적 · 경제상황
비정책 쟁점	· 공천 갈등 · 도덕성 · 후보의 수 · 선거경쟁의 강도	· 북한요인 · 지역주의

II. 유성구(을)지역의 특성

1. 선거구의 일반적 특성

유성구는 14대 총선까지 인근의 대덕군과 연기군 등에 포함되다가 15대 총선부터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었다. 그 후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가 되었다. 인구분포는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0대, 19세 이상 20대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젊은 유권자가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3> 유성구 을선거구 지역 인구분포

연령대	0~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인구수	45,873	23,835	29,695	33,747	22,296	16,067
(비중 %)	(27%)	(14%)	(17%)	(20%)	(13%)	(9%)

출처: 유성구청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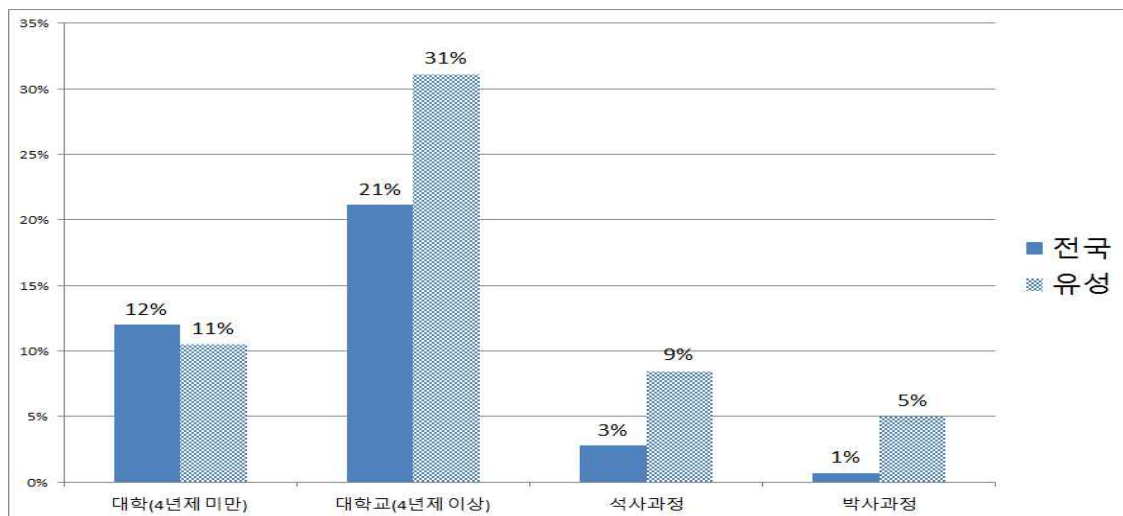
유성구 을 선거구는 노은 2·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등 6개의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다. 각 동별 특성을 살펴보면, 노은 2·3동은 2004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노은동으로 신설되었다가 2015년에 3동이 신설되기까지 아파트 단지가 확장되어 왔다. 노은동에는 대전의 다른 자치구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기존의 신성동이나 전민동과 같이 특정 직업군이 모여 있는 특성을 갖지는 않는다. 신성동과 전민동은 대덕연구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원들이 1995년 이후 이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다수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신성동에는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軍)의 교육기관이 있어 다수의 유권자가 군인과 그 가족인 특성을 갖는다.

구즉동은 유성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농복합형 도시로 인근의 대전 3·4공단과

청주 청원 등에 위치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예정지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평동은 2008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2010년에 구즉동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민간 벤처기업들이 집적된 곳이다. 이와 같이 유성구 을선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단지 종사자들과 제조업 노동자들, 그리고 군인이 집단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직업군의 구성이 다양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성으로 학력구성을 들 수 있다. <그림1>과 같이 대학교(4년제 이상) 학력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0.5배 높고, 석사과정은 3배, 박사과정은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으로 갈수록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1> 인구의 학력별 구성 비율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재구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

이러한 현상은 선거구 내에 충남대학교, KAIST, 침례신학대학교, 그리고 대덕대학교 등 4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그리고 대덕테크노벨리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 등과 연관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젊을수록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진보적일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표 2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와 같이 16대 총선 이후 유성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은 이러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역대 선거결과

1) 지역구 후보 선거결과

유성구 을선거구의 역대 선거결과를 국회의원 선거로 제한하여 살펴본다. 우선, 유성구는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7번의 총선에서 17대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선거결과 다수당과 다른 소속의 후보자가 당선된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지역은 이른바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대부터 15대까지의 경우 신민주공화당이나 자유민주연합 소속 후보의 당선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필이라는 충남 부여 출신의 강한 정치엘리트의 존재의 영향으로 기존의 영·호남 지역주의와는 다른 성격의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6대 선거부터 19대 선거까지의 특징은 해당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3차례 있었고 17대 총선에서는 전국 판세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18대 선거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상민 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여 당선된 것으로, 이 결과가 지역주의 정당의 효과인지 후보자 개인의 득표력인지 명확하지 않다.²⁾ 다만, <그림2>의 역대 비례대표 득표 현황과 비교할 때 개인의 득표력이 정당 득표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7대 선거에서 자민련은 10% 이하를 득표했으나 이상민 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18대 선거에서는 평균 24.6%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다시 당적을 옮겨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한 19대 총선에서는 평균 12.2%의 득표를 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³⁾ 즉,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 유권자의 학력과 연령별 비율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4> 유성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명박
선거결과	전국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전	신민주공화당(4/4)	무소속 2 민주당 2 민자당 1	자유민주연합(7/7)	자유민주연합 3 새천년민주당 2 한나라당 1	열린우리당 (6/6)	자유선진당 5 통합민주당 1	새누리당 3 민주통합당 3
	유성	신민주공화당(이인구)	무소속(이재환)	자유민주연합(조영재)	새천년민주당(송석찬)	열린우리당(이상민)	자유선진당(이상민)	민주통합당(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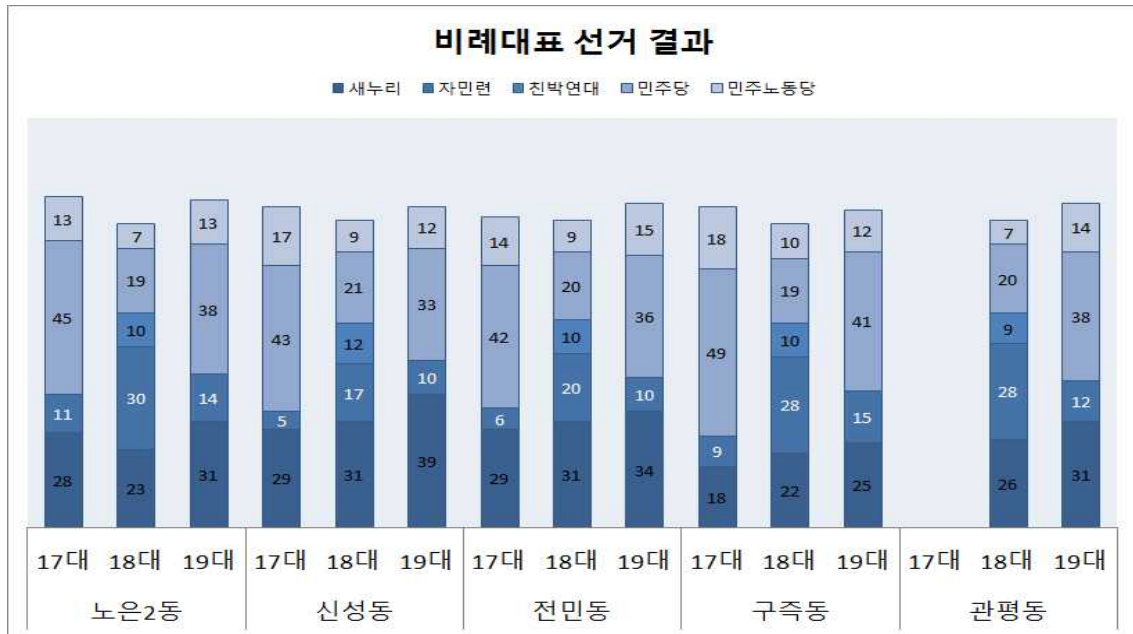
주)13대는 대덕군·연기군에, 14대는 대덕군에 포함. 15대부터 단독 선거구로 분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18대 총선결과, 대전에서 자유선진당 소속 후보가 5명이 당선되었지만 이중 권선택 의원(중구)과 김창수 의원(대덕구)도 이상민 의원과 같이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당적을 옮겨 당선된 사례임. 따라서 신민주공화당에서부터 시작된 대전의 지역주의는 이미 18대 총선부터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이 지역에서의 득표는 분당 사태 이후 당세가 약화된 통합진보당이 받은 13.3%보다 낮은 것이었음.

<그림2> 역대 정당명부 투표결과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유성 을선거구를 중심으로 투표구별 유권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갑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덕연구단지 관련 유권자들이 많은 투표구로 파악되었던 온천2동, 신성동, 그리고 전민동에서는 당선자의 전체 득표율보다 낮고 심지어 최저 득표를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단지 대표 후보를 자처한 후보가 출마했던 16대, 17대, 그리고 18대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19대 총선의 경우 연구단지 출신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진동규 후보(새누리당)가 자신의 평균득표보다 많은 최고 득표를 하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4선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 후보와 이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연구단지 연구원 출신인 정의당 이성우 후보의 출마가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성우 후보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유성구 선거구에 출마해 18.3%의 득표를 한 바 있고, 당시의 득표를 을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구만으로 제한하면 23%의 득표를 하기도 했다.

<표5> 역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득표현황

선거	후보	갑선거구				을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동 (1동)	노은2동	신성동	전민동	구죽동	관평동
16대	조영재(한나라당)	12%	13%	14%			19%	19%	12%	
	이창섭(자민련)	41%	39%	30%			24%	25%	33%	
	송석찬(민주당)	39%	43%	33%			30%	33%	35%	
	이성우(민주노동당)	7%	5%	23%			27%	23%	19%	
17대	이인혁(한나라당)	16%	14%	17%	20%		20%	23%	15%	
	조영재(자민련)	18%	26%	18%	18%		12%	11%	13%	
	이상민(열린우리당)	40%	33%	29%	32%		30%	31%	35%	
	정상훈(민주당)	4%	4%	3%	3%		3%	2%	3%	
	이병령(무소속)	22%	23%	35%	28%		36%	32%	34%	
18대	송병대(한나라당)	20%	22%	22%	24%	19%	26%	27%	21%	
	이상민(자유선진당)	48%	45%	41%	39%	49%	32%	36%	43%	
	조영재(친박연대)	6%	9%	6%	7%	5%	7%	5%	6%	
	정병욱(통합민주당)	13%	12%	12%	12%	11%	16%	13%	13%	
	이병령(무소속)	12%	12%	18%	17%	16%	19%	19%	17%	
19대	진동규(새누리당)	31%	31%	31%	31%	29%	36%	33%	26%	30%
	이상민(민주통합당)	48%	48%	51%	53%	56%	52%	56%	55%	58%
	송석찬(자유선진당)	20%	20%	17%	15%	14%	11%	10%	19%	1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2) 비례대표 선거결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을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구에서의 정당별 득표는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이 대체로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2> 참고)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상민 후보가 당선되었던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44.75%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상민 후보가 자유선진당으로 소속 정당을 바뀌어 출마한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이 24.6%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하지만 이상민 후보가 다시 당적을 바꾸어 출마한 19대 총선에서는 후보가 소속되었던 민주통합당이 37.2%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자유선진당은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민주노동당(19대는 통합진보당)보다 적은 득표를 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5.5%를 득표해 자유선진당보다 두 배가 많은 득표를 했고, 19대 총선에서는 13.2%를 득표해 자유선진당보다 1% point 더 득표를 했다. 그런데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던 민주노동당(19대는 통합진보당)이 17대부터 19대까지 이 지역에서 평균 12%의 득표를 한 것은 다른 정당들과 같이 이 지역에서 민주당류와는 다른 진보성향의 고정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이 자유선진당 이후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이 없는 상황과 함께

비례대표 선거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관찰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3. 후보자와 공약

1) 후보자 등록 현황

20대 총선에는 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고, 소속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이였다(<표6> 참고). 후보자 평균 연령은 55.4세로 전국 지역구 후보자 평균 나이인 53세보다 많았다. 이중 남성 후보자는 4명이고, 여성 후보자는 1명이였다. 학력별로는 박사 1명, 석사 2명, 그리고 학사가 2명이였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2명, 국회의원 1명, 그리고 연구(위)원 2명이였다.

2) 정책공약의 특성

대부분의 후보들이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와 고용안정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표6> 참고). 이는 을선거구가 갖는 특성을 후보들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문제와 노령인구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다. 원자력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공약도 몇몇 후보들에서 제시되었다.

<표6> 후보자 등록 현황

이름	소속 정당	연령	직업	학력	경력
김신호	새누리당	63세	정당인	박사	(전)제6대, 제7대, 제8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전)제57대 교육부 차관
	주요공약	-국가과학교육특구 -인공지능연구소			
이상민	더불어 민주당	58세	국회의원	학사	(현)국회 법사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주요공약	-국가기구에 과학기술정책전담부서 부활 -특허전문도시로 육성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김학일	국민의당	52세	외교국방연 구소 연구위원	석사	(전)대전마케팅공사 사외이사 (현)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주요공약	-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PBS제도 폐지 -노후연금 확충			
이성우	정의당	54세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책임연구원	석사	(전)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전)원자력안전조례공동대표
	주요공약	-연구단지와 유성 살리기 -고용안정법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이경자	노동당	50세	정당인	학사	(전)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 례제정청구운동본부 공동대표 (현)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주요공약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원자력안전법 개정 -탈핵과 재생에너지 장기계획 수립			

출처: 후보자 기본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수정하였고, 주요 공약은 CMB대전방송 (2016.03.29.)을 참고하였음.

3) 지역현안

유성 을선거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현안으로는 과학벨트사업 추진과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 연구소의 타지역 이전문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등 정부과학기술정책 관련 쟁점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내 입주해 있는 원자력 관련 연구소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문제⁴⁾ 등이 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하여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BRT 신설 노선의 지역 경유 요구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

IV. 참여관찰

1. 유권자 사전 인터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4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노은2동과 신성동에 거주하고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이었다. 이중 3명은 배우자가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었고,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주부였다. 그리고 이들 중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가 3명이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1명 있었다.

먼저, 유성구가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된 것에 대해 현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호불호가 명확했지만, 정책 차원의 차별성보다는 보다는 후보자들의 그간의 업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배우자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원외 정당에 투표할 의사를 보였고 그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 즉,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교차투표를 할 의사를 보인 것이다. 오히려 남편이 연구

4) 2015년 12월에 대전 유성구의회에서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가 의결된바 있음. 이는 주민발의에 의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관련 조례제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원인 경우 현역 의원이 그나마 연구원들 사이에서 입장과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인식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예상되는 쟁점에 관해서는 핵문제를 꼽았는데 2015년에 원자력안전 감시기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대 총선에서 유성구 을선거구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의 질문에 대체적인 반응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표가 분산되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전시의 도시이미지로서 언급되는 과학도시에 관한 질문에는 생활의 측면에서 단순히 거주지정도의 의미이지 예전과 같이 공동체 혹은 동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이 큰 의미로 작용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대덕연구단지가 직장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생활의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이들과의 집단 인터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우선, 현재 국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연구단지라는 기능적 집적 공간을 생활의 차원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에 있어 교차투표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낮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후보별 인터뷰

후보별 인터뷰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전후해서 김신호 새누리당 후보의 김OO 사무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김OO 참모와 각 일회씩 진행을 했고, 이성우 정의당 후보와는 선거운동 기간 초기와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걸쳐 2회를 진행했다.

1) 김신호 후보 김OO 사무장과의 인터뷰

후보와의 면담은 일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인 4월 2일에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구 선택과 당내 경선 과정, 주요 정책과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상대 후보와의 비교해서 차별성과 우위성 등에 관해 질문을 했다.

먼저, 선거구 선택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조정에 의한 영입공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당에서 이른바 험지출마를 후보에게 제안했고 후보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입인사의 경우 경선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후보가 상향식 공천방식에 동의해서 1차는 ARS방식으로 2차는 면접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신호 후보로 결정되었다. 상대 예비후보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의원을 역임하는 등 쉽지 않았음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직선 교육감과 교육부차관 등의 경력으로 인해 인지도와 경력에 대한 평가에서 앞섰다는 것을 당내 경선에

서 승리의 원인으로 꼽았다.

본선에서 주요 타겟층으로는 50대 보수층과 교육계, 그리고 30-40대 학부모로 두고 있었으며 국제고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등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3선의 경력이 있는 현역의원과의 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감 시절 보여준 능력과 스캔들 없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강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이상민 후보 김OO 참모와의 인터뷰

이상민 후보 역시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아 4월 2일 선거사무소에서 참모역을 맡고 있는 김OO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유성구 을선거구에 속해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이기도 했다. 질문은 당내 공천이 없었던 관계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김신희 후보 측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먼저, 분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갑과 을선거구 중 선택시 고려 사항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거주지가 전민동인 관계로 을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분구에도 불구하고 갑이나 을중 어느 선거구로 나가도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출마 이유는 연구단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고, 주요 타겟층은 젊은 층, 출연연과 대기업 연구소 연구인력과 고학경의 지식인층, 그리고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나 선거운동은 전략은 특구 기반 정책과 과학기술계를 대변인 역할 강조, 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키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이나 우위지점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차별성으로는 기득권 정당과 대비되는 서민 정당, 그간의 의정경험을 살린 연구단지 성과 사업화, 국가산업단지법 개정, 도시철도(BRT) 지선 연결 등 지역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주5일 상주근무제 공약과 출판기념회 금지 공약도 제시했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후보와의 대비에서 우위성은 인문사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연구현장에서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내세웠다.

3) 이성우 후보

이성우 후보와는 본 참여연구의 목적상 다른 후보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만남의 횟수를 많이 했다. 첫 번째 만남은 3월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낮 시간에 하는 것과 달리 이성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직장에 근무하는 지지자들을 고려한 시간배치였다. 개소식은 중앙당에서 김세균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원 몇몇과 선거 전망과 연구소 내에서 조합원들의 반응 등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여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는 좋다는 대답이 있었던 반면, 연구현장에서는 선거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대답도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후보와는 두 번의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후보가 4월 1일 밤에 선거운동을 마치고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다른 후보들과의 인터뷰와 유사하게 진행했다. 먼저 출마 이유에 대한 질문에 후보는 “퇴행적 정치문화 속에서 노동의 문제,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를 같이 보고 있었다. 노동기본권의 문제 과학기술정책의 실패 등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와 무관하게 연구수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나로서는 체감하면서 왔던 입장이니까 모든 것이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붙어 보자, 주민, 조합원, 시민들의 뜻을 나를 통해서 묶어보자, 당선되면 다행이고 당선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해보자, 그 힘이 모이는 만큼의 여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대답했다.

선거구 선택의 고려 사항으로는 연구단지의 대표성을 주장하며 나온 입장에서 연구단지 노동자들이 많은 을선거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상민 의원과의 정면대결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는 대답을 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추가로 질문한 후보 단일화문제에 관해서는 당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면 공동의 연대의 원칙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당과 정치세력이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민중단일후보 과정에서 지역에서 단일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걸림돌이었다. 그는 이에 관해 “30년 가까이 조합원이었는데, 노동당 쪽에서 민중단일후보 신청을 철회하는 걸로 완주하되 민중단일후보를 포기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민중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단일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쪽이(노동당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의당 후보이지만 민주노총의 후보로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일화 상대가 끝까지 완주할 의사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당과의 단일화에 관해서는 당과 당의 연대의 원칙이 설정되지 않으면 후보 차원에서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대전에서는 공식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단일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대표가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없을 것이고 개별후보에 대한 공세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주요 타겟층에 대해서는 출연연, 벤처, 연구단지 기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40대 건강한 주부들, 원자력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 운동에 같이 했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막연하게 저마다 작은 참여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건강한 시민들, 공공기관 관계자들, 생활협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 등을 제시했다.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전략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단지에서

후보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선거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출퇴근 유세와 SNS를 활용한 방식, 그리고 시민들과 주부 등의 소그룹 단위의 동네 모임을 통한 홍보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구즉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도 사업체 방문과 소모임, 스포츠 동아리 모임과의 만남 등을 진행하는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거대 정당 두 후보와의 비교에서 상대적 우위나 차별화 지점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업적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로부터의 평가를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우위를 강조했다. 특히, 이상민 후보에 대해서는 “이상미 의원은 큰소리만 치고 변죽만 울리는 정도다. 지난 선거에서 연구단지 표가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 많다. 과학기술 정책 산업정책 끝장토론해도 이길 수 있다. 과학기술 정책에서 차별화하고 이미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후보는 20대 총선 출마가 두 번째 출마이다. 첫 번째 출마는 16년 전인 2000년 16대 총선이였다. 따라서 당시 출마와 비교해서 유권자들이나 노동조합의 반응은 어떤지 물어 보았다. 후보 스스로 그때보다 자신감 있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고, 알아보는 유권자들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던 당시와 다른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그때는 (지지율이) 쑥 올라가다가 막판에 떨어진 걸로 보이는 데, 지금은 그때와 사뭇다르다.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명료하진 않다.”고 후보가 느끼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말하기도 했다.

이성우 후보는 2000년 선거의 경험을 의식했는지 사표심리에 대해 많은 경계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선거공보뿐만 아니라 선거명함과 선거유세차량에 “이성우를 찍으면 이성우가 됩니다”라는 문구를 시인성을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이성우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성우 찍으면 김신호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도리라는 대전시의 이미지가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다. 이 지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이병령 박사 세 번 실패, 지난 선거 때는 연구단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구단지 출신이 말아서 하는 봤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간간히 듣는다.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했다 때 역풍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연구단지가 다수는 아니니까 어느 선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성우 후보의 고민은 사표심리 방지와 정책 차원의 우위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홍보전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만남은, 선거 중반인 4월 6일에 대덕특구지원센터에서 있었던 과학기술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이었다. 이성우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과학기술정책 24대 의제와 정치적 실천의 7가지 방향을 129쪽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연구자 출신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덕특구지원센터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기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이성우 후보가 6% 대의 지지로 4위로 나타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이어서 언론의 입장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인터뷰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월 12일 저녁에 이성우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체감한 과학기술계 유권자들의 관심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후보는 “연구소 내 식당이나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관평동 등지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의 말을 걸어오고 관심을 보였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소감을 내어놓았다. 그러면서도 20% 정도의 득표를 기대하지만 표 분산 가능성이나 사표심리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의 일부 시민사회에서 후보단일화를 독려하고 당선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우 후보는 “92년 94년 비판적 지지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것에 위축될 이유도 없고 유성의 정치의식 수준에 기대를 한다.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반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진보정당의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답과 함께, 구즉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이 특별히 부각될 만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날 후보와의 마지막 인터뷰 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만났던 두 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다시 간단한 질문을 해 보았다. 이들은 전국공공연구노조 지부 중 대전 지역에 있는 지부의 간부들이었다. 선거분위기가 지난 3월 중순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조합원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는 않고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3. 후보별 선거결과 분석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1월에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의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역 의원인 이상민 후보의 4선 성공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다.⁵⁾ 반면, 유성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와 경합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⁶⁾ 하지만 선거결과는 현역의 이점에 힘입어 이상민 후보가 56.4%의 득표를 해 26%를 득표한 새누리당 김신호 후보와 큰 표차이로 당선이 되었다.(〈표7〉 참고) 20대 총선에서 이상민 후보의 득표는 후보 본인의 역대 출마 선거 중 가장 높은 득표이기도 했다. 투표율은 대전 전체 투표율이 58.6%을 보인 가운데 유성구 을선거구는 63.8%로 7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5) 경향신문, 2016.01.04., “2016년 신년 여론조사”; 동아일보, 2016.01.01., “2016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

6) 금강일보, 2015.12.27., “[특별기획] 20대 총선 여론조사-(1)대전 중구·유성구.”

투표율을 나타냈다.

<표7> 후보자별 득표율

구분	후보자별 득표율				
	김신호 (새누리당)	이상민 (더불어민주 당)	김학일 (국민의당)	이성우 (정의당)	이경자 (노동당)
합계	26.0%	56.4%	11.1%	4.6%	1.1%
노은2동	27.4%	55.9%	10.3%	4.6%	1.1%
노은3동	25.8%	57.9%	10.8%	3.8%	1.0%
신성동	30.0%	49.8%	12.3%	6.0%	0.9%
전민동	23.1%	59.9%	10.2%	5.1%	1.0%
구즉동	25.5%	54.1%	13.0%	4.8%	1.5%
관평동	23.4%	61.1%	10.0%	3.9%	0.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득표에서도 이상민 후보는 모두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성동의 경우 49.8%를 득표해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17대, 18대, 그리고 19대 선거 결과에서와 같이 가장 낮은 득표를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신호 후보는 30%를 득표해 본인의 득표 중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지역이 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 위치한 군(軍)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는 구즉동과 신성동에서 본인의 득표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했다. 정의당 이성우 후보는 4.6%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본인이 이 지역에서 받은 23%의 득표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후보의 득표는 정의당이 정당명부비례대표 투표에서 받은 1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관련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성동과 전민동에서 본인의 득표 중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을 뿐이다.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는 1.1%의 득표를 했고, 그 중 제조업 노동자 유권자들이 많은 구즉동에서 1.5%를 득표해 본인 득표 평균보다 높은 득표를 했다.

4. 정당별 선거결과 분석

먼저, 대전광역시 전체 결과를 표 0에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30.96%를 득표해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28.19%, 국민의당이 27.14%, 그리고 정의당이 7.57% 순으로 득표를 했다. 새누리당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많은 득표를 했고, 특히 유성구에서 24.23%를 득표해 가장 적은 득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반대로 서구와 유성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고, 이중 유성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유성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1위

를 한 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의당의 득표율에서도 나타나서, 정의당은 유성구에서 10.8%를 득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러한 현상과 다소 차이를 보여 비교적 전체 구에서 고르게 득표를 했다.

<표8> 대전광역시 정당별 득표율

구분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합계	30.96%	28.19%	27.14%	7.57%
동구	35.70%	27.21%	26%	5.37%
중구	35.22%	24.59%	27.98%	5.96%
서구	30%	29.30%	26.82%	7.88%
유성구	24.23%	30.86%	28.08%	10.80%
대덕구	34.36%	26.39%	26.57%	5.6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유성구 을선거구에서의 정당명부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표9>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30.6%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국민의당이 28.5%, 그리고 새누리당은 22%, 그리고 정의당은 11.6%의 득표를 해서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선거결과와도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대전광역시 7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득표결과인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득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선된 후보와 정당 득표 간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기독교민주당의 경우 전국 득표율 2.63%보다 많은 3.1%의 득표를 했고, 노은2동의 경우 4.1%를 득표하기도 했다. 기독교당의 득표와 합칠 경우 3.7%의 득표이다.⁷⁾

<표9> 유성구 정당별 득표율

구분	정당별 득표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교자유당	기독교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합계	22.0%	30.6%	28.5%	11.6%	3.1%	0.6%	0.5%	0.6%	0.3%
노은2동	22.1%	30.7%	27.2%	11.9%	4.1%	0.7%	0.5%	0.8%	0.3%
노은3동	20.9%	31.9%	28.7%	11.4%	3.2%	0.7%	0.5%	0.5%	0.3%
신성동	27.7%	25.5%	28.0%	12.0%	2.8%	0.5%	0.4%	0.7%	0.2%
전민동	20.9%	30.3%	29.2%	13.0%	2.9%	0.5%	0.4%	0.8%	0.2%
구즉동	20.8%	32.3%	27.6%	10.2%	3.3%	0.6%	0.9%	0.4%	0.4%
관평동	20.5%	32.1%	29.9%	11.3%	2.5%	0.5%	0.6%	0.5%	0.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구체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역적 특성으로 신성동의

7) 기독교계 정당은 19대 총선에서 두 개의 정당이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는데 기독교당이 1.2%, 한국기독교당이 0.25%의 전국 득표를 보인바 있다. 이들의 득표를 합치면 1.45%였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두 개의 정당이 후보를 등록했는데 이들의 전국득표율을 합치면 19대 총선보다 3.17% points가 증가한 4.62%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21대 총선에서 서구와 같이 보수적 종교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경우 앞의 후보 득표 결과와 같이 새누리당 득표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적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 득표 결과와 같이 군 관련 유권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의당은 신성동과 전민동에서 많은 득표를 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모두 하락한 반면 새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이 두 정당 지지자의 일정 부분을 흡수했는데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의 흡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는 이전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얻은 득표율과 유사한 득표를 보였다. 이는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민중연합당의 득표율을 감안할 때 이전 진보정당 지지의 흐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참여관찰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성구 을선거구의 20대 총선의 투표에 관한 영향요인은 정책 쟁점으로 과학기술 공약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 간의 논쟁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발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선거구에 비해 높은 투표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 정책 쟁점의 장기적 특성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업적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비정책 쟁점에서 후보의 수와 선거경쟁의 강도를 들 수 있다. 후보의 수가 5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그리고 선거경쟁은 정치엘리트 경험을 갖는 여당 후보의 등장으로 3선의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표 결집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네 번째, 비정책 쟁점에서 장기적 혹은 구조적 특성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기반 정당이 부재한 선거였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정책 선거문화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의 기능이다. 매번 선거에서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와 함께 정책 정보 전달자로서의 약한 기능이 지적되곤 한다. 20대 총선에서 역시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6 총선보도감시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선거관련 전체 기사 중 정책과 후보 검증에 관한 기사는 정책보도가 평균 7.9%, 후보 검증 기사는 평균 2.6%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선거 관련 기사의 평균 60% 이상이 판세와 정당공천에 관한 기사였다. 신문과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국민일보 2016.04.18., 인터넷자료).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투표율 상승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정치교육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제도나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원론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현상에 관한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OO 인터뷰. 유성구 유권자. 2016. 3.15.
- 강경태. 2008. “역대 한국선거(1987-2006) 투표율 분석.” 아태연구, 15(2)
- 강준만. 2011.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경향신문. 2016.01.04.
- 고O 인터뷰. 유성구 유권자. 2016. 3.15.
- 국민일보 2016.04.18.
- 금강일보. 2015.12.27
- 김욱. 2012. “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 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22(1).
- 김OO 인터뷰. 김신호 후보 사무장. 2016. 4. 2.
- 김OO 인터뷰. 이상민 후보 참모. 2016. 4. 2.
- 김준석·김민선. 2009.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구의 투표율과 도전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6(3).
- 김진석. 2011. “부풀려진 진보와 좁혀진 진보.” 황해문화, 통권 제71호
- 김태완. 2012. “19대 총선 집합자료를 이용한 당선 가능성 예측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2(3).
- 동아일보. 2016.01.01.
- 양 춘. 2005. 『사회계층론 서설』. 서울: 민영사.
- 연합뉴스. 2016.04.11.
- 유성구청 홈페이지
- 이OO 인터뷰. 유성구 유권자. 2016. 3.15.
- 이성우 인터뷰. 유성구 을선거구 후보. 2016. 4. 1.; 2016. 4. 12.
- 이원규. 1993. “쟁점투표(Issue Voting)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영국의 포클랜드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1).
- 임OO 인터뷰. 유성구 유권자. 2016. 3.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CMB대전방송. 2016.03.29.
- Blais, André, Daniel Rubenson. 2013. “The Source of Turnout Decline: New Values or New Contex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 95-117.
- Campbell, Angu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Downs, Anthony. 1950.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박상훈·이기훈·김은덕 옮김. 2013.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3.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 야권의 분열, 선거캠페인 그리고 호남 민심: 광주광역시 동남구 을 참여관찰

1. 들어가며

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앞으로 4년 동안 민의를 대표할 정치인을 뽑는 축제의장에서 우리 모두는 적잖이 놀랐다. 국회는 15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였고 그야말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주의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와 부산에서 야권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야권의 불모지인 서울 강남에서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야권의 표밭인 호남에서도 나타났다. 전남 순천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고 전북 전주 유권자들의 표심도 다름 아닌 새누리당 후보에게로 향했다.

그 가운데 호남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야권 분열이 바로 그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면서 야권이 호남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안철수는 천정배, 김한길, 정동영, 박지원 등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국민의당을 이끌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과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인을 영입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에 맞대응 했다.

이와 같은 호남의 선거정치 지형의 변화는 선거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양당은 당 내부의 공천 경쟁뿐 아니라 양당 간 본선 후보 경쟁, 후보 단일화 이슈, 그리고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캠페인 전략 등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양당의 광주 서구(을) 공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5선 경력의 천정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고졸이면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정치 신인 양향자를 공천하였는데, 양당의 현직 의원 대 정치신인의 대결구도는 20대 총선의 핫이슈 중 하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야권재편의 소용돌이는 그 어느 때보다 호남 표심의 향방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게끔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분열된 야당 소속으로 호남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전략과 유권자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⁸⁾에 출마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초점을 맞춘다. 호남에서 광주 동구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동구는 과거 전남도청 소재지가 위치했

던 곳으로 행정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야당 세력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분열된 야당의 후보들은 서로 야당의 뿌리임을 자처하면서 광주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광주 동남구(을)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성을 고찰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동남구(을)의 연령별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특성은 최근 선거결과 자료를 활용한다. 3장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캠페인 전략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후보별 선거공약을 비교하고 선거캠페인 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동시에 이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4장에서는 동남구(을)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선거결과와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20대 총선의 참여관찰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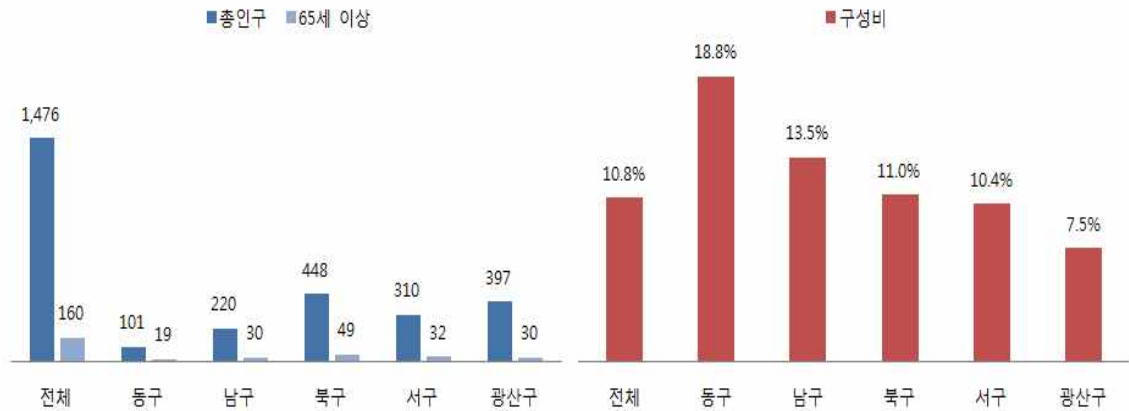
1) 사회경제적 특성

광주 동구는 오랫동안 호남의 정치·경제·문화를 대표해왔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에 앞장서왔는데, 동구는 임진왜란 때 호남의병, 일제 강점기 때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 그리고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25).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힘쓰면서 남도문화를 선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 동구는 경제적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인구수가 꾸준히 하락했다.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03,01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786명으로 2013년에 비해 2,230명이 줄었다. 그리고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1,477,780명의 6.99%에 불과하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26). 반면 고령인구의 비율은 광주에서 가장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광주 인구의 9명 중 1명(11.1%)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해당되는데, 동구 18.8%, 남구 13.5%, 북구 11%, 서구 10.4%, 광산구 7.5%를 기록했다.

8) 광주 동구는 20대 총선에서 남구 일부와 통합되면서 동남구(을) 선거구로 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동남구(을)의 지역적 특성은 주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림3> 광주 고령인구 비중



*호남지방통계청(2015)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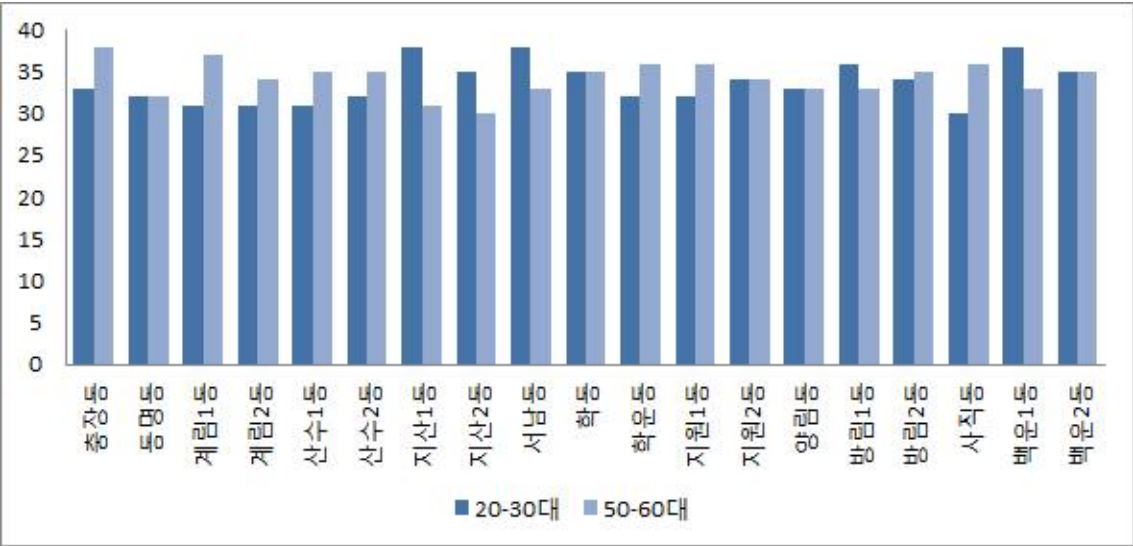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동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산1동(38%), 지산2동(35%), 서남동(38%), 방림1동(36%), 백운1동(38%)을 제외하고 모든 동에서 5060세대의 비중이 높다(<그림2> 참조). 두 세대의 분포 차이가 5%이상 나타나는 지역은 충장동(2030세대: 33%, 5060세대: 38%), 계림1동(2030세대 31%, 5060세대 37%), 사직동(2030세대: 30%, 5060세대: 36%) 그리고 지산1동(2030세대: 38%, 5060세대: 31%), 지산2동(2030세대: 35%, 5060세대: 30%), 서남동(2030세대: 38%, 5060세대: 33%), 백운1동(2030세대: 38%, 5060세대: 33%)이다. 이 중에서 충장동, 계림1동, 사직동은 2030세대에 비해 5060세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영세상가가 지배적인데 이것이 세대 간 분포 차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충장동과 계림1동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충장동의 경우 과거 광주상권의 중심지로서 상가 및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지역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3). 계림1동은 대인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영세상가와 재래식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3). 사직동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영세 노후 밀집지역이다. 또한 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21%로 남구(행정구역상) 평균 13% 보다 훨씬 많으며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및 무료급식소 2개소를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1일 1,500명에 이른다(광주남구 구정백서 2015, 533).

반면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백운1동은 5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의 비중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지역의 대부분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산1동과 지산2동은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법원, 검찰청이 소재하고 있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다수다. 서남동은 동구청, KT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및 산하 6개교와 서석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교육의 중심지이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5). 최근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과 영상복합 문화관의 준공으로 세계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문화허브 역할을 띠하고 있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5). 둘째, 이 지역들은 최근까지 구도심 낙후지역이었으나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의 거주가 증가하였다. 지산1동은 2010년 6월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산휴먼시아 아파트(375세대)가 들어섰다(광주동구 2015, 451). 백운1동 역시 2005년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어 2011년 휴먼시아 3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휴먼시아 1, 2단지와 2014년 우방아이유셀 입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광주남구 구정백서 2015, 563).

이를 통해 볼 때 동남구(을)의 연령 분포는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고령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보다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20대 총선에서 동남구(을)의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광주 동남구(을) 연령 분포 비율: 2030세대 vs. 5060세대 (%)



*광주광역시 동구청·남구청 통계연보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2016년 2월 기준)

2) 정치적 특성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 선거구는 인구수 미달로 인해 남구의 일부와 통합되었다. 그 결과 광주 동구와 남구는 동남구(갑)과 동남구(을)로 재획정 되었다. <표1>은 광주 동남구(갑)과 동남구(을) 지역을 보여주는데, 동남구(갑)은 남구 지역으로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동남구(을)은 동구일원-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학동, 서남동, 학운동, 지원동-과 남구 일부-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

동, 백운1동, 백운2동이 포함된다.

<표1> 광주광역시 동남구 갑과 을

동남구(갑)	동남구(을)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일원(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지산1동, 지산2동, 학동, 서남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선거에서 호남은 야당의 텃밭이다. 광주 동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구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항상 야권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다. <표2>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데, 16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영일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공천을 받은 김경천 후보와 경합을 벌였다. 17대 총선 역시 정치적 맥락은 다르지만 야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존재했다. 노무현 탄핵 바람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 간 대결구도를 만든 것이다.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 간의 경합이 형성되었다. 무소속 양형일 후보와 박주선 후보가 각각 30.61%, 31.55%의 득표율을 얻어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의 선거를 치렀다. 한편 야권 후보들 간 경합이 부재한 경우에 동구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투표행태를 보였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88.73%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18대 총선 최다득표율 당선으로 기록되었다.

<표2> 최근 총선 후보별 득표율 (광주동구, 지역구)

19대 총선	자유선진당 구봉우 1.06	통합진보당 김관희 10.34	무소속 양형일 30.61	무소속 이병훈 18.83	무소속 박주선 31.55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박주선 88.73	한나라당 김태욱 7.63	자유선진당 구봉우 1.59	평화통일가정 당 김공수 2.03	-
17대 총선	새천년민주당 김대웅 42.40	열린우리당 양형일 51.75	민주국민당 류계석 0.92	민주노동당 안상연 4.91	-
16대 총선	한나라당 조봉훈 1.49	새천년민주당 김경천 55.75	자유민주연합 구봉우 0.55	무소속 양희창 5.89	무소속 이영일 32.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선의 정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동구 유권자의 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18대와 19대 총선 시기 광주 동구에서 통합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보여준다. 우선 18대 총선에서는 동구 유권자의 74.62%가 통합민주당에게 표를 던졌다. 이는 통합민주당의 광주 평균 득표율(70.39%)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한편 야당을 향한 동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19대 총선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동구 유권자의 68.06%가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는데 이는 민주통합당이 광주에서 얻는 평균 득표율 68.91%보다도 낮다.

<표3> 18·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광주동구, 비례대표)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합계	70.39	68.91
동구	74.62	68.06
서구	70.55	68.54
남구	71.33	70.17
북구	71.34	70.05
광산구	66.33	67.27

한편 이번 20대 총선과 같이 야당이 분열되었을 경우에 동구 유권자들은 분할투표의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치른 17대 총선이 대표적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구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선택했다. 비례대표 역시 새천년민주당(35.10%) 보다 열린우리당(49.44%)의 득표율이 높았으나 다른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동구 유권자들이 새천년민주당에 던진 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에 던진 표는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17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광주동구, 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합계	31.12	51.55
동구	35.10	49.44
서구	31.26	51.35
남구	34.32	50.31
북구	30.69	52.53
광산구	27.07	52.18

3. 후보별 선거캠페인과 유권자 반응

1) 후보자 정보

20대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야권 재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남 민심의 선택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국민의당에게는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권에게 있어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 공천에서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을 국민의당은 현직의원을 전략 공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의 물갈이 여론을 의식하고 소속의원 107명 가운데 37명(불출마자 포함, 34.6%)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중앙일보 2016년 3월 21일자).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박주선, 박지원 등 현직의원을 재공천 하는 태도를 취했다.

광주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사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 후보들은 광산구의 이용섭을 제외하면 모두가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들이다. 동남구(갑) 최진, 동남구(을) 이병훈, 서구(갑) 송갑석, 서구(을) 양향자, 북구(갑) 정준호, 북구(을) 이형석, 광산구(갑) 이용빈이 이에 속한다. 국민의당은 5명의 현직의원을 공천하였는데 서구(을) 천정배, 동남구(을) 박주선, 동남구(갑) 장병완, 광산구(갑) 김동철, 광산구(을) 권은희 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동남구(을)의 경우 국민의당은 박주선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병훈 후보를 내세웠다. 박주선 후보는 2015년 9월 22일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이다. 그 후 중도개혁 민생실용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2016년 1월 27일 통합한다(한겨레신문 2016년 1월 27일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후보는 과거 광양군수와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덧붙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9대 총선 광주동구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박주선 후보와 경합하였으나 낙선한 경험이 있다.

후보별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두 후보는 인물 차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이에 박주선 후보는 지역구 재선을 포함한 3선 의원으로서 유권자들에게 풍부한 의정경험을 선전하고자 한다. 한편 이병훈 후보는 동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의 공적을 강조하려고 한다.

<표5> 20대 총선 광주광역시 동남구(을) 후보자 정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성명	이병훈	박주선
연령	1957년(59세)	1949년(66세)
직업	정당인	국회의원
학력	전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전) 광양군수	(전) 김대중대통령 법무비서관 (현) 국민의당 최고의원
입후보 횟수	1회	5회

2) 공약

이에 비해 두 후보의 공약은 대동소이 하다. <표7>은 이병훈 후보와 박주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 것인데 두 후보 모두 문화·관광, 지역 재개발·재건축, 노인·보육 복지, 일자리·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별 견해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양자 모두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약속한다. 지역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홍보한다. 노인·보육 복지 분야에서도 역시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한편으로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선전한다. 일자리·경제 영역에서는 청년고용 및 창업과 관련한 공약과 문화관광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두 후보의 공약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정책기조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정한 시장, 혁신적 성장, 함께하는 경제가 국민의당에서는 함께 잘사는 공정한 혁신 경제로 변형되는 정도이다(한겨레신문 2016년 2월 2일자).

오히려 선거 기간 동안 박주선과 이병훈 후보는 정치적 이슈를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두 후보의 선거공보 책자를 살펴보면 박주선 후보의 경우 ‘호남정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이병훈 후보의 경우 ‘구태 정치인 교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20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공보 홍보 전략을 전수 조사한 조희정·이한수·민희(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공보 책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은 경제, 복지, 노인, 육아와 같은 정책적 의제보다도 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데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표6> 참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각 후보들은 선거공보 책자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배치하여 자신이 야당의 뿌리임을 홍보하는 경향도 보였다.

<표6> 20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공보 책자 구성

	전체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정치분야	0.56 (0.82)	0.19 (0.41)	0.59 (0.77)	0.71 (0.87)	1.20 (1.16)	0.46 (0.75)
경제분야	0.26 (0.23)	0.31 (0.21)	0.29 (0.25)	0.27 (0.26)	0.17 (0.16)	0.24 (0.20)
청년분야	0.11 (0.13)	0.12 (0.13)	0.15 (0.13)	0.11 (0.13)	0.08 (0.12)	0.08 (0.12)
노인	0.12 (0.13)	0.14 (0.13)	0.17 (0.12)	0.09 (0.12)	0.05 (0.10)	0.10 (0.13)
육아/교육	0.19 (0.19)	0.24 (0.19)	0.24 (0.20)	0.18 (0.17)	0.17 (0.18)	0.13 (0.22)

장애인/다문화	0.04 (0.09)	0.06 (0.11)	0.04 (0.10)	0.03 (0.09)	0.01 (0.05)	0.03 (0.08)
교통분야	0.24 (0.23)	0.33 (0.25)	0.27 (0.19)	0.22 (0.24)	0.08 (0.13)	0.18 (0.18)
안전분야	0.07 (0.12)	0.10 (0.13)	0.09 (0.12)	0.08 (0.12)	0.02 (0.08)	0.04 (0.10)
기타분야	0.31 (0.28)	0.37 (0.28)	0.34 (0.21)	0.33 (0.30)	0.21 (0.21)	0.28 (0.28)
N	933	248	233	171	51	134

표안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조희정·이한수·민희(2016, 11)

<표7> 동남구(을) 후보 공약 비교-국민의당 vs.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국민의당)	박주선(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	무등산 관광지구 개발 지산유원지 활성화 및 주변 한옥마을 조성 충장로 7080 상설거리 조성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정율성기념 통합관광루트화 사업 적극 추진 국제문화 교류 타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중국 관광객 대상 면세점 및 중국문화원 광주 분원 유치 추진, 게스트하우스 조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 위한 법령 정비 및 국고 확보,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성촌마을 아트컬처파크 조성,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서남동 인쇄타운 등 연계사업 활성화
지역 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공공 임대주택 확충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유지 도로의 보상 및 도로개선 관련법 제정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관 유치	동남구 15개소의 재개발사업과 방림동의 주택재건축사업, 동구 4개소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법 제도 개선 및 국비 예산 확보 푸른길공원 실개천 연장사업 지원 CCTV, 보안등 설치 확대 등 주거환경 안전도모
노인· 보육 복지	어르신과 장애우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구축 노인회관 및 국가운영 소형 복지시설 건립 보육시설 확충 초등학교 창의 특성화 교육 어린이 치유센터 건립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긴급지원 확대, 동구장애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거점 경로당 확대 추진 국공립보육시설 10% 확충, 고교의무교육 실시, 남구 청소년수련원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추진,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추진,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확충, 아동보호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아이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일자리 ·경제	금남로 복합문화 창조단지 조성 청년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개설 관광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인쇄출판단지의 창의적 부활 친환경 주민시설 조성	Made in Korea정책 추진,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공공기관 및 500대 기업 비정규직 폐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 의무화 추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추진, 문화예술형 시장 특화, 대형마트 등 SSM 규제 강화 추진, 마을금융 활성화 지원

*이병훈·박주선 후보 선거공보 책자 참조

2) 선거캠페인 전략

구태정치 청산 vs. 호남정신 부활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캠페인 전략에서도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메시지 내용 역시 선거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된 양상을 취했다. 선거 초반에는 정치신인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구태정치 청산’을, 현직의원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호남정신 부활’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거캠페인 전략은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정치적 선호에도 균열을 일으켰다.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국민의당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큰 호남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에게 제격이었다.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가 만난 노년층의 대부분이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호남을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진정성 없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심판해야 한다” 등과 같이 반문재인 정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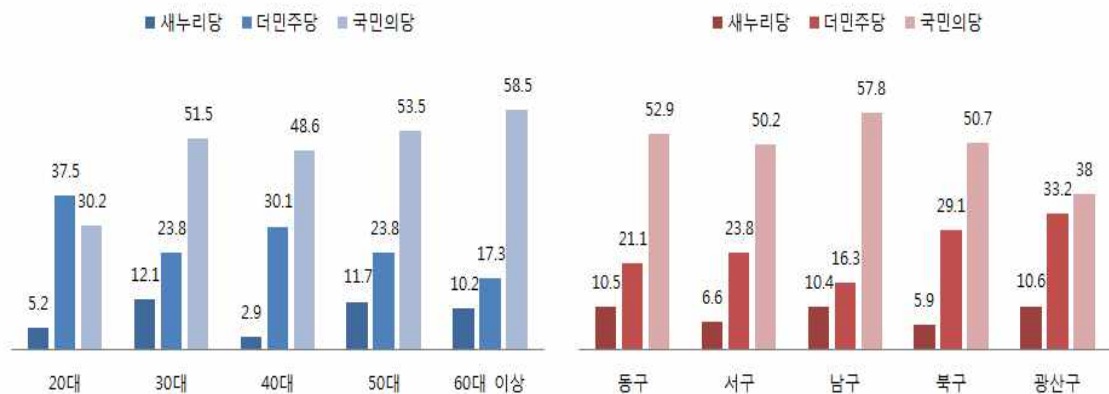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젊은 유권자에게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국민의당의 메시지 전략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당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다(전남일보 2016년 3월 10일자). 이러한 양상에 대해 국민의당 캠프 차원에서는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잘 흡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의 광주 젊은이들은 문재인과 친노세력, 국보위에 참여한 김종인, 공천학살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 전략이 젊은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SNS를 통한 이미지 정치를 잘 구현했다는 것인데,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를 ‘구태정치’로 가공해 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젊은층들은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메시지 보다 다소 젊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젊은층에 맞는 선거캠페인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수 위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국민의당은 창당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 젊은층은 “그래도 정권교체와 대안이 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젊은층과 노년층의 이와 같은 정당 선호의 균열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백리서치 연구소가 광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더욱 선호한다(<그림3> 참조). 특히 동구와 남구의 경우 다른 선거구에 비해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이는 이 두 지역이 국민의당 지지층인 고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 당락에 연령이 미치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5> 광주광역시 연령·선거구별 정당후보 지지도(%)



* 한백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2016년 2월)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 기타 정당 및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다 수치는 그래프에서 제외함

읍소전략 vs. 후보단일화 불가전략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캠페인 메시지 전략을 읍소전략 vs. 후보단일화 불가전략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국민의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거부 전략은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2016년 4월 1주차 기준) 국민의당 지지율이 3월 마지막 주에 비해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방문 전략으로 호남 유권자의 반문재인 정서를 완화시키고자 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방문을 두고 하나같이 “너무 늦었다” 혹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이미지 정치를 해댄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인재영입으로 호남의 민심을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돌아선 호남 민심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의원만이 당선된 사례가 이러한 냉담한 호남 민심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4. 광주 동남구(을) 선거결과

4월 13일 총선은 최종 투표율 58%를 기록했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 3.8%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6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종63.5%, 전북 62.9%, 광주 61.6% 등을 기록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4월 13일). 이를 통해 볼 때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분열이 호남 유권자의 투표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남구(을)은 총 127,632명 유권자 가운데 79,9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63%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표8> 광주 선거구별 투표율(%)

선거구	동남구 갑	동남구 을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 갑	광산구 을
투표율	62.7	62.6	61.4	63.8	59.2	62.9	58.8	61.7

중앙일보 자료(2016/04/1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표9> 참조) 광주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구(을) 역시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54.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후보 간 가장 큰 득표율 차이를 보인 선거구는 북구(갑)으로 국민의당 김정진 후보가 72.2%,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22.2%의 득표율을 얻어 무려 50%의 격차를 보여줬다. 반면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후보는 광산구(을)의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였다. 권은희 후보는 50.1%의 득표율로 43.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약 7% 격차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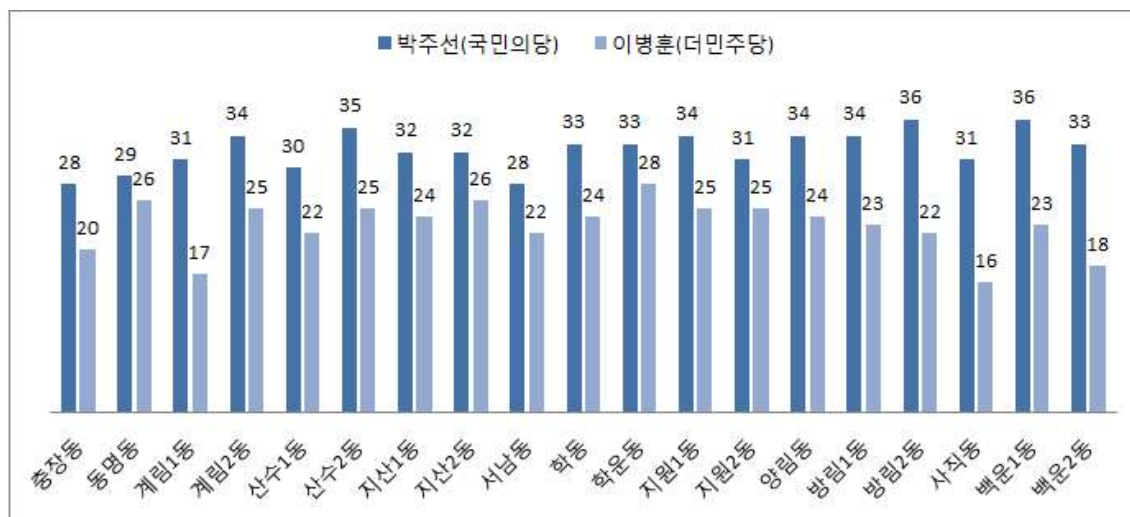
<표9> 광주 선거구별 후보 득표율(%)

	동남구 (갑)	동남구 (을)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 (갑)	광산구 (을)
더불어민주당	최진 29	이병훈 39.6	송갑석 34.6	양향자 31.3	정준호 22.2	이형석 34.4	이용빈 34.2	이용섭 43.3
국민의당	장병완 55.6	박주선 54.5	송기석 57.3	천정배 54.9	김정진 72.2	최경환 56.4	김동철 53	권은희 50.1

이번에는 동남구(을)의 선거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이 글은 야권의 분열이 세대 간 표심의 분열 역시 초래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 중 203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을 5060세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4일자 기사). 더욱이 광주 동남구(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 동시에 동별 연령 구성을 비교해 보면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이와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남구(을)의 동별 후보 득표율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림4>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데 전체적으로 동남구(을)의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에 비해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의 득표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이는 이 지역의 젊은층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후보를 지지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이 그렇다. 지산1동에서 박주선 후보는 32% 이병훈 후보는 24%의 득표율을 얻어 양자 간 득표율 차이는 8%에 그쳤다. 지산2동의 경우 박주선 후보 32%, 이병훈 후보 26%로 6%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서남동 역시 지산2동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박주선 후보 28%, 이병훈 후보 22%로 양자의 득표율 차이는 6%를 기록했다. 반면 2030세대에 비해 5060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 대부분이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이는 이 지역의 노년층이 국민의당의 박주선 후보를 지지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계림1동과 사직동이 그렇다. 계림1동의 경우 박주선 후보 31%, 이병훈 후보 17%로 14%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사직동은 그 격차가 더욱 컸는데, 박주선 후보 31%, 이병훈 후보 16%로 무려 15%의 득표율 격차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구(을)의 젊은층과 노년층의 표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동남구(을)의 젊은층은 국민의당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반해 노년층은 국민의당 후보를 더욱 지지하는 측면을 드러냈다.

<그림6> 20대 총선 동남구(을) 동별 선거 결과(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



5. 결론

이 글은 야권 분열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20대 총선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에서 분열된 야권이 어떠한 선거캠페인 전략을 펼

치고 호남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반응에 중점을 두었다.

선거결과 호남 표심은 국민의당에게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을)에서의 더욱 중요한 발견은 바로 세대별 유권자 표심이 다르게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젊은층은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청산’ 메시지를 지지했고, 노년층은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를 지지했다. 물론 노년층의 이러한 선택을 곧 ‘국민의당이 대안이다’라는 시각과 동일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히려 노년층은 친노 패권주의에 빠져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의 구도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받는 호남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노년층이 친노·친문에 기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통해 소외의식을 동일하게 느낀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당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필자가 만난 호남의 고령의 유권자는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 이렇게 속이 후련한 선거는 처음이다”라는 말로 20대 총선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반해 지금 광주의 젊은층은 호남을 그리고 광주를 과거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투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남의 젊은 유권자에게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이들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큰데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청산’ 메시지가 이러한 젊은층의 마음을 보다 잘 대변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20대 총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선거가 젊은 세대와 장노년 세대 간 대결이었다는 평가이다(헤럴드경제 2016년 4월 14일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정책선거 실현에 보다 힘써야 한다. 20대 총선은 그야말로 정책 실종의 선거였다. 선거 과정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유권자의 선택지는 다양해졌으나 실제 내용은 없었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를 동원하기보다 정치적 차원의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데 급급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러한 동원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두 정당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정책선거를 실현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0대 총선에서 증가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 6% 상승했다(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4일자). 이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젊은층의 정치참여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크다. 사전투표제라는 제도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기여한다. 그 가운데 젊은층이 정당 혹은 정치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의 젊은층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지금의 젊은층은 청년실업,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등

과 같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이슈와 관련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 정치집단에 표를 던질 것이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남구. 2015.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백서」
- 광주광역시 동구. 2015.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백서」
- 유재일·손병권 외. 2009. 「18대 총선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 조희정·이한수·민희. 2016. “총선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와 홍보전략 평가: 제20대 총선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2016. 4. 22.
- 호남지방통계청. 2015. “2015년 광주광역시 통계로 보는 우리고장 어르신들(고령자)의 모습”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보도자료 2015년 9월 24일
-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http://www.namgu.gwangju.kr/>
-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http://www.donggu.kr/main/main.ph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info.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한백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4일자.
- 『전남일보』, 2016년 3월 10일자.
- 『중앙일보』, 2016년 3월 21일자.
- _____, 2016년 4월 16일자.
- 『한겨레신문』, 2016년 3월 14일자.
- _____, 2016년 2월 2일자.

4. 경상북도 안동시

■ 문중의 영향력과 도청 이전 효과: 경상북도 안동시 참여관찰

I.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2000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대한 심판이었다. 과반 의석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은 원내 2당으로 전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당의 지위도 내주었다. 당초 100석도 힘들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로 인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23석을 획득하는 예상외의 선전을 보였다. 무엇보다 호남에서 승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른 국민의당은 38석을 획득하면서 확고한 3당으로 부상하였다. 양당 독과점 체제 대신 3당 체제가 정립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성 정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변화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국적인 선거 결과와 함께 지역적 측면에서도 4·13 총선의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견고해보였던 지역주의 벽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였다. 영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부산 진갑)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가 당선되는 등 여야의 텃밭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지역에서 5석, 경남지역에서 3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그나마 122석을 얻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경북 지역이다. 경북에서 새누리당은 총 13석 의석 전부를 싹쓸이 하였다. 야당과 무소속의 돌풍으로 텃밭인 대구, 부산, 경남에서 새누리당은 고전을 하였지만 경북에서는 이번이 없었다.

이 연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관찰 대상지로 안동시 선거구를 선정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확고한 경북 지역에서 그것도 농업 중심의 산업 기반과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수적인 고장 안동시를 참여관찰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무의미하게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거 참여관찰 대상지로서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안동은 농촌 중심의 사회이자 유교 문화의 본산지로서 향촌 사회의 전통적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어 씨족·문중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둘째, 이번 4·13 총선에서 경북 지역 유일의 3당 대결구도가 형성된 곳이 바로 안동이다. 수도권과 비교하여 여당의 지지세가 견고한 안동에서 3당의 대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의미 있

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신도청 개청식이 2016년 3월 10일 안동-예천에서 열리면서 본격적인 신도청시대가 개막되었다. 신도청 이전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개발과 구도심 지역과의 균형개발 문제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신도청 이전과 같은 대형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적 입장과 공약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후보 상호간 비방을 줄이고 정책적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참여관찰의 대상으로서 안동에 대한 선거적 관심과 흥미를 돋운다. 구체적으로 참여관찰은 각 후보 사무실 방문, 선거조직 참모 면담, 후보의 거리유세 및 집회에 동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안동시 선거구의 지역적 특성 및 인구 구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과 본선에서 후보들의 선거 과정을 세밀히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논의의 요약과 함께 안동시 선거구에서 20대 총선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II. 안동시 선거구의 지역적 특성 및 인구적 구성

1. 안동시의 지역적 특성

안동시의 행정구역은 1읍 13면 10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 1,520km²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다(<그림1> 참조). 안동은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6개 시군과 접해있다. 북쪽으로 영주시와 봉화군, 동쪽으로 영양군과 청송군, 남쪽으로 의성군, 서쪽으로 예천군과 접해있는 안동은 북부의 행정, 교육, 교통, 경제의 중심지이고 예로부터 이들 지역은 안동 문화권으로 속해왔다.

현재 안동과 예천의 경계지인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경상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이 일대에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안동시의 구도심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중구동, 서구동 일대이며 전통시장과 상가들이 밀집해있다. 2000년대 이후 용상동, 강남동, 옥동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 상업지로 개발되면서 이들 지역이 신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용상동은 교육면에서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옥동은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안동은 임야가 전체 면적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경지율은 1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도 많지 않아 공업이 발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상업, 서비스, 농업이 산업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주요 농산물로 쌀, 감자, 고구마, 콩, 보리, 사과, 마, 참깨, 고추, 당배 등이 생산된다. 이중 마는 전국 생산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또 한우 사육 축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안동시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상업과 서비스이다. 안동은 북부 지역의 물자 집산지로서 안동 구시장과 신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물자들이 거래된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예로부터 전통문화의 명맥을 유지해온 곳이기도 하다. 유교문화와 민속문화가 잘 어우러져 사회 곳곳에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유성룡으로 대표되는 유교의 본고장으로서 각지에서 서원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영남 남인학파의 학통을 계승해오고 있다. 한편 안동은 하회별신굿탈놀이, 차전놀이, 성주풀이 등 전통 민속문화가 번성하였으며 전국 시군 단위 중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교, 민속, 애국적 전통이 남아있는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원류라 해도 손색이 없다.

유학 문화와 민속적 전통적 가치가 마을 곳곳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안동 사회에서 문중의 세는 절대적이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안동의 양대 문중인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가문이 국회의원과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⁹⁾ <표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전반기 3번은 안동 권씨 출신인 권오을 전의원이(15대의 경우 안동시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었으며, 안동갑은 권오을, 안동을은 권정달 후보가 당선되었다. 권정달 의원 역시 안동 권씨 출신이다), 그리고 후반기 3번은 현역인 안동 김씨 김광림 의원이 안동시 국회의원 자리를 독식 해오고 있다. 안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표2>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선 4대 - 5대 시장은 안동 김씨 출신의 김휘동 전 시장이, 민선 6대 - 7대 시장은 현역인 권영세 시장이 맡고 있다. 양대 문중의 영향력이 잘 드러난 예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허용범 후보는 안동 지역의 문중 세와 아무런 연결이 없는 후보였다. 무소속의 김광림 후보는 문중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었다. 이것은 문중의 영향력이 정당 공천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양대 문중을 대표하는 예비후보자들(김광림, 권오을, 권택기)이 경선 대결을 펼쳤다. 양대 가문이 정치적 자리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안동 지역의 정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특정 가문들이 정치권과 시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안동신문 2014/3/17).

9) 안동 거대 문중의 영향력은 삼태사에서 비롯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지금의 안동 지역에서 일대 결전을 치를 때, 안동의 토착세력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이 힘을 합쳐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물리쳤다. 훗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그들을 공신으로 인정하여 세 명에게 성씨를 부여하였으며 그들이 각각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된다.

<그림1> 안동시 행정구역



※ 출처: 두산백과. 2016. “안동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2300&cid=40942&categoryId=33922 검색일: 2016/4/20)

<표1> 최근 6대 안동시 선거구 국회의원 명단 (1996 - 2016)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갑구	을구	권오을	권오을	김광림	김광림	김광림
권오을 (조선, 통합민주당)	권정달 (3선, 무소속)	(재선, 한나라당)	(3선, 한나라당)	(조선, 무소속)	(재선, 새누리당)	(3선, 새누리당)

(※ 괄호 안의 정당 또는 무소속은 당선 당시의 소속 정당임)

<표2> 최근 4대 민선 안동시장 명단 (2002 - 2014)

4대	5대	6대	7대
김휘동 (조선, 한나라당)	김휘동 (재선, 한나라당)	권영세 (조선, 한나라당)	권영세 (재선, 한나라당)

2. 안동시의 인구 구성

1975년 약 27만 명이었던 안동의 인구가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구가 감

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6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신도청 이전이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최근에 다시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6년 3월 현재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16만 8천 8백 86명이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6).

<표3>은 2016년 3월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보다 시내 지역의 인구수가 많다. 풍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면 지역의 인구수 분포는 대략 2,000명에서 4,000명 사이이다. 시내의 경우 최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동은 중구동으로서 5,033명이고 최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은 옥동으로서 24,709명이다. 10개 동의 평균 인구수는 12,361명으로서 14개 읍·면의 평균 인구수 3,234명보다 4배가량이 많다. 다른 도농지역과 마찬가지로 안동에서도 도시 지역의 인구가 농촌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농지역인 안동 선거구의 인구적 구성에 있어 또 다른 특성은 농촌일수록 노장층(60대 이상)의 비율이 높고 시내일수록 중년층(40대-50대)과 젊은층(20대-30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14개 읍면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은 약 47-48% 내외인 반면 시내 10개 동의 중년층과 젊은층의 인구 비율은 각각 32-33%, 24-25% 내외이다.

이러한 인구적 구성의 특성이 20대 총선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선과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표3> 안동시 선거구 주민등록인구수 현황(2016년 3월)

행정구역	주민등록인구	20대-30대		40대-50대		60대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안동시	168,886	37,919	22.45	54,070	32.02	45,978	27.22
풍산읍	7,114	1,081	15.20	2,146	30.17	3,171	44.57
와룡면	4,464	658	14.74	1,241	27.80	2,119	47.47
북후면	3,471	520	14.98	1,079	31.09	1,602	46.15
서후면	3,848	665	17.28	1,186	30.82	1,644	42.72
풍천면	4,476	699	15.62	1,331	29.74	1,947	43.50
일직면	3,167	416	13.14	895	28.26	1,574	49.70
남후면	2,014	263	13.06	539	26.76	1,064	52.83
남선면	2,339	411	17.57	761	32.54	945	40.40
임하면	3,323	496	14.93	1,085	32.65	1,453	43.73
길안면	3,093	410	13.26	937	30.29	1,541	49.82
임동면	2,026	267	13.18	621	30.65	984	48.57
예안면	2,092	262	12.52	652	31.17	1,019	48.71
도산면	1,864	233	12.50	568	30.47	945	50.70
녹전면	1,988	257	12.93	561	28.22	1,029	51.76
중구동	5,033	1,133	22.51	1,589	31.57	1,699	33.76

명륜동	5,784	1,450	25.07	1,870	32.33	1,412	24.41
용상동	23,166	6,109	26.37	7,481	32.29	4,451	19.21
서구동	10,401	2,360	22.69	3,275	31.49	2,806	26.98
태화동	14,164	3,510	24.78	4,606	32.52	3,729	26.33
평화동	7,311	1,711	23.40	2,393	32.73	1,923	26.30
안기동	7,208	1,731	24.01	2,487	34.50	1,617	22.43
옥동	24,709	6,624	26.81	8,113	32.83	3,536	14.31
송하동	15,381	4,215	27.40	5,208	33.86	2,393	15.56
강남동	10,450	2,438	23.33	3,446	32.98	1,375	13.16

(※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6)

III. 선거 과정

1. 공천 과정

야권의 불모지인 안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당내 출마 예상자들 간의 경쟁은 없었다. 경선없이 야당들은 공천자를 확정지었다. <표4>는 각 정당들이 확정지은 공천자 명단이자 20대 총선에서 맞붙게 될 각 정당들의 후보자 명단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경쟁은 뜨거웠다. 총 4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지역 언론으로부터 “문중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간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격전지”로 조명을 받았다(경북일보 2016/1/25).

안동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본선보다 여당의 공천이 더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본선 대결보다 새누리당 내 경선 경쟁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6년 3월 10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해 안동시 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00퍼센트 여론조사로 진행될 1차 경선에서 김광림(현역 재선, 안동 김씨), 권오을(전 국회사무부총장, 전 3선 국회의원, 안동 권씨), 권택기(전 18대 서울 광진갑 의원, 안동 권씨), 이삼걸(전 행안부 차관) 예비후보들이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문중의 영향력이 강한 안동 지역에서 양대 가문을 대표하는 예비후보들이 나란히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안동 권씨 가문에서 두 명의 후보들(권오을, 권택기)이 출마를 하였고 여기에도 현역 프리미엄까지 더한 재선 국회의원 김광림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들보다 공천 경쟁에서 한발 더 유리한 위치에 서있었다. 그러나 언론이나 지역 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의 1차 여론조사 경선에서 김광림 예비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2위와 결선 여론조사 경선을 벌일 경우 안동 권씨의 문중 표의 향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3월 13일 발표된 1차 경선 결과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김광림 후보의 손쉬운 승리로 2차 경선없이 공천 경쟁이 싱겁게 끝나버렸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김광림 예비후보가 예상외로 손쉽게 승리를 거둔 비결

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4월 2일 김광림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전략과 선거종합대책 상황을 맡고 있는 김상현 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 김 보좌관의 전언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김광림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추천인단’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있다면 A의 가족, 친지, 동문 및 친구의 순으로 ‘김광림 지지 명단’을 작성하여 지지 책임자 500명을 추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지지 책임자 500명은 각각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총 3만 여 명 규모의 김광림 후보 지지자 명단을 최종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대비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2차 여론조사 경선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낙승을 거두게 되었다.

2016년 3월 3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이 마감되고 3월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면서 안동 선거구에서도 주요 3당 후보자들 간 선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김광림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경력 설명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야권에서는 공천 경쟁없이 바로 공천자를 확정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노 후보는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지난 19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여 김광림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인 끝에 17.51퍼센트를 득표하였다. 이 후보의 경력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4월 2일 이 후보의 거리 유세가 끝난 뒤 가진 면담에서 이 후보는 ‘대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과 ‘안동시혁신협의회’ 위원 등을 거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였다. 바로 시민사회 운동의 경력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역시 경력사항과 정치 참여의 동기가 이성노 후보와 유사하였다. 전 카톨릭상지대학교 교수였던 박 후보의 시민사회 경력은 화려하였다. 전 ‘안동자원봉사센터’ 설립위원 및 운영위원장, 전 ‘안동시 발전협의회’ 위원, 전 ‘안동시 생활체육회 바둑연합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안동시지부장, ‘안동시 애명복지촌’ 운영위원, ‘녹색환경지도자협회’ 대표 등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경험하면서 정치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서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2016년 4월 6일 박인우 후보 선거사무실 면담).

3당의 각 후보자들은 13일 간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선거 공약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노력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후보에 대한 직접 참여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 방식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4> 20대 총선 안동시 선거구 정당별 후보자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자	김광림	이성노	박인우
생년월일	1948.4.28. (67세)	1959.6.14. (56세)	1961.8.20. (54세)
경력	(전)재정경제부 차관	(전)안동대학교 사회적기업	(전)가톨릭상지대학교 교

	(현)제19대 국회의원 (재선)	육성사업단장 (현)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수 (현)녹색환경지도자협회 대표
--	----------------------	-------------------------------	-------------------------

(※ 출처: 각 후보들의 책자형 선거공보)

2. 선거운동 과정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직접 참여관찰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참여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에 연락을 취해 선거일정 확인과, 유세 관찰 및 방문 동행, 면담 일자를 확정하였다. 이하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후보별로 선거운동 과정을 참여관찰한 것이다.

1) 이성노 후보

2016년 4월 2일은 이성노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오후 3시에 개소식이 열리며 개소식을 하기 전 오후 2시에 안동 신시장 육교 밑에서 이성노 후보의 선거연설 일정이 잡혀있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한 유세에서 이성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번 후보인 김현권 전 의성군 한우협회장 선거참모 한 명까지 해서 총 3명과 20명의 선거운동원들 뿐이었다.

안동 신시장은 구시장과 더불어 경북 북부 지역의 물산 집합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이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메우고 있었다. 먼저 찬조연설에 나선 김현권 비례대표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국민과의 소통 부재, 농가 소득 감소 등 안동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현 정부와 여당의 국정심판론에 날을 세웠다. 김현권 비례대표 후보의 찬조 연설에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내용은 이성노 후보의 지역 선거구 당선은 어렵지만 정당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찍어달라는 호소였다. 이어 등단한 이성노 후보의 연설도 현 정부의 민생 경제 파탄과 농가 소득 보전에 주안점을 두었다. 20여 분 동안 지속된 연설은 지역 현안보다 국가적 이슈에 중점을 두었다. 연설이 끝나고 이 후보는 주변에 있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발길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옮겼다.

선거사무소로 향하는 동안 후보와 동행하면서 정치에 참여한 동기와 선거전략, 그리고 안동 지역의 문중의 영향력, 신도청 이전의 문제를 물었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후보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꼈으며 이것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말했다. 선거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정부·여당 심판론이었다. 그리고 삼태사에서 비롯되는 안동 지역의 종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는 이 후보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일방통행식의 지역 정치는 불행만 있을 뿐이라며 힘주어 말하고 양심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150여 명 내외의 지지자가 한껏 열기를 북돋우며 자리를 지켰다. 내빈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 지역 야당 원로 정치인, 경북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의원, 김현권 비례후보 등이 참석하여 이성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지 연설을 하였다.

이상으로 이성노 후보의 선거운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읍·면·동 단위의 기간조직 열세와 선거참모의 부족으로 인해 이성노 후보는 오직 단신으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갔다. 물론 경우에 따라 중앙당이 경북도당의 관계자가 찬조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후보 당선 위주의 선거운동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호소에 더 주안점을 주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보다 국가적 이슈를 쟁점화하는 선거운동을 펼쳐나갔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적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든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라든지, 차별없는 무상급식 지원 등의 강조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2) 박인우 후보

2016년 4월 6일 오전 7시 50분에 박인우 후보의 선거운동 시작은 아침 통근자들로 가득한 경안로 교차로에서의 거리 유세였다.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나가는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 박 후보는 9시에 선거사무소로 돌아와서 6일 하루 선거일정을 체크하였다. 10시에 의성 김씨 종택 방문과 11시 용상동 시장 일대 거리유세에 후보와 동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일정이 시작되는 10시 전까지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박원식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박원식 실장을 통해 박인우 후보의 선거조직이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겨우 2주일 정도밖에 안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지 선거공보 책자에 있는 박 후보의 선거 공약은 구체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안동 지역의 문중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 벽을 깨기가 어렵지만 선거 기간 동안 불기 시작한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과 중도층을 대변하는 3당 체제의 출현을 염원하는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안동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찍어 주이소’라 하면 ‘국민의당이 뭐꼬?’라고 하는데 ‘안철수당’이라 하면 바로 알아듣고 이번에 정당은 ‘안철수당’을 찍는다고 약속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이 ‘안철수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용 명함을 돌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의 주요 선거전략 중의 하나는 새누리당 후보인 김광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었다. 예를 들면 김광림 후보의 예산 부풀리기 실적 문제, 친조카 인사청탁 문제, 안동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시장실 압수수색을 당한 권영진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안동시장 공천을 김광림 의원이 주도했다는 주장) 등을 이야기하면서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박 후보와 함께 차를 타고 의성 김씨 종택을 향해 함께 나섰다. 차를 타면서 동행하는 동안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박 후보는 과거 15개 정도의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이들 시민사회 조직과 연계해서 지지 호소를 펼쳐나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안동은 씨족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문중으로부터 지원을 얻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결혼을 통해 문중의 세가 더욱 확대하는 만큼 문중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성 김씨 종택을 방문하여 문중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며 한 표를 부탁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오전 11시쯤 안동의 신주거지로서 옥동과 함께 인구가 가장 많은 용상동 시장 일대를 방문하였다. 상가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넓혀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사투리가 섞인 정감어린 말투로 친근하게 유권자들 대하는 박 후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인우 후보의 선거운동을 요약하자면 늦게 출발한 선거조직의 한계로 인한 정책적·조직적 준비 부족을 후보 개인의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용,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 확대, 3당 체제 정립을 통한 구태 정치 극복 등으로 만회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는 새누리당 김광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여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강화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3당 후보와 3당인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3) 김광림 후보

박인우 후보와 마찬가지로 김광림 후보도 이른 아침 일찍부터 통근자들과 통근 차량으로 가득찬 경안로 교차로에서 부지런히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4월 8일 오전 7시 50분쯤 김광림 후보가 유권자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러 다니는 동안 신종대 김광림 후보의 비서관과 면담을 나누었다. 신종대 비서관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김광림 후보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에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김광림 후보의 선거조직은 읍·면·동의 기간 조직, 종친회 조직,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현역 재선인 만큼 선거운동에 관련한 김 후보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말하면서 김 후보 스스로 머리를 낮추고 친근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10여명에 이르는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장단기 선거전략을 구상하고 점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하고 재선을 하면서 쌓아올린 후보의 인지도도 높은 만큼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는 전략보다는 안동의 지역 현안 해결과 일자리 및 미래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같은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오전 10시가 되자 8일 장이 서는 풍산읍 전통시장으로 선거연설을 떠나는 김광림 후보를 따라 신종대 비서관과 함께 차로 이동하였다. 안동시의 14개 읍·면들 중 가

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풍산읍은 하회마을은 전통적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김 후보의 유세단과 선거운동원들은 미리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김 후보도 시장 여기저기를 돌면서 상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3선의 고지에 당선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3선이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림 후보의 선거운동은 철저히 지역 현안 해결과 과거 실적을 널리 홍보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맞추었다. 후보 자신이 정책통으로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사·계수조정소위 위원 등을 두루 경험하면서 정책적 비전 제시와 공약의 실천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여당 후보이자 현역 재선의 프리미엄까지 얻어진 높은 인지도와 당선가능성은 모험적이고 네거티브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필요를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의 문중의 영향력, 읍·면·동의 기간 조직과 동문회 조직은 김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조직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였다.

<표5> 참여관찰 진행표

일시	대상자	주요 관찰 및 면담 내용
2016.4.2.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번)	이성노 후보 지지 찬조 연설(안동 신시장 육교 아래)
	윤한정(더불어민주당 이성노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	안동 신시장 육교 아래 이성노 후보 연설 진행, 이성노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진행, 이성노 후보 선거전략 질의
	이성노(더불어민주당 후보)	거리 연설,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 문중 영향력
	택시 기사	문중 영향력, 지역 현안 질의(신도청 이전 문제)
	안동 신시장 상인	문중 영향력, 지역 현안 질의
	김상현(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보좌관)	새누리당 경선에서 여론조사 대비 전략 질의, 김광림 후보 선거전략 질의, 문중의 영향력
4.6.	박원식(국민의당 박인우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박인우 후보 선거전략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 문중의 영향력
	박인우(국민의당 후보)	안동시 경안로 거리 유세, 용상동 시장 방문 동행, 의성 김씨 종택 방문 동행(의성 김씨 문중 어른 만남)
	택시 기사	문중 영향력, 지역 현안 질의(신도청 이전 문제)
4.8.	신종대(새누리당 김광림 후보 비서관)	지역 현안 질의
	김광림(새누리당 후보)	안동시 경안로 거리유세, 풍천읍 전통시장 방문 동행

<그림2> 후보자별 선거 현수막



<그림3> 후보자별 선거 거리유세



3. 선거 결과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선전, 국민의당 약진으로 설명되는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소야대의 등장, 3당 체제 정립 등 정치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안동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선거 결과의 관심은 새누리당 김광립 후보의 3선 달성이라는 뻔한 결과보다 두 야당과의

경쟁에서 김광림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야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감하였는가이다. 또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의 득표율은 얼마나 나왔는가도 관심이다.

<표6>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동시 선거구에 출마한 세 후보들의 유효득표수가 보고되고 있다. 김광림 후보는 총 유효득표수의 68.67퍼센트에 해당하는 5만 5천여 표를 획득하였다. 뒤이어 이성노 후보 1만 2천 8백여 표(16.04퍼센트), 박인우 후보 1만 2천 2백여 표 (15.29%)를 차지하였다. 특히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이번 선거에 처음 출마한 박인우 후보의 득표율은 예상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거의 70퍼센트에 육박하는 김광림 후보의 득표율을 고려하였을 때 김 후보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 후보의 득표율과 비교하였을 때 적지 않은 반대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광림 후보는 82.49퍼센트라는 전국 최다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16퍼센트의 득표율이 이탈하였으며 이 득표율은 고스란히 제3당 후보인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에게 이전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노 후보의 득표율도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약 1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의 선전은 거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에 실망을 한 유권자들의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 투표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약 69퍼센트를 득표하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약 57퍼센트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소의 폭은 미미하지만 약 1퍼센트 정도 득표율이 빠져나갔다(약 14퍼센트에서 약 13퍼센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 나간 지지율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의당은 총 유효득표 7만 8천여 표 중 약 19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4천 5백여 표를 획득하였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기존 정치 세력권의 무능함과 대립에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3당 체제 정립을 바라는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차투표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역구 후보에게는 자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정당 투표에는 국민의당으로 전략적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광림 후보 득표 비율(69퍼센트)과 새누리당 득표 비율(57퍼센트)의 차는 12퍼센트에 달하며, 이성노 후보에게 득표 비율(16퍼센트)과 더불어민주당 득표 비율(13퍼센트)의 차는 3퍼센트에 달한다. 이렇게 이탈한 표들은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광림 후보는 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에서 초강세를 보였다. 득표율의 70퍼센트 후반에서 80퍼센트 초반을 농촌 지역에서 기록하였다. 정당 투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 강도는 낮았다. 새누리당의 읍·면 지역에서 득표율은 60퍼센트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박인우 후보와 국민의당은 시내 10개 동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시가지들을 중심으로 박인우 후보는 10퍼센트 후반의 득표율을 올렸다. 정당 투표의 결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역시 신시가지들을 비롯한 시내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득표율은 20퍼센트 대를 유

지하고 있다.

<표6>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별 유효득표수

읍면동명	김광립(새누리당)		이성노(더불어민주당)		박인우(국민의당)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합계	55,120	68.67	12,878	16.04	12,275	15.29	80,273
거소·선상투표	413	67.82	108	17.73	88	14.45	609
관외사전투표	2,662	52.96	1,598	31.79	766	15.24	5,026
국외부재자투표	20	29.85	42	62.69	5	7.46	67
풍산읍	2,691	76.78	385	10.98	429	12.24	3,505
와룡면	1,786	77.35	234	10.13	289	12.52	2,309
북후면	1,365	78.54	156	8.98	217	12.49	1,738
서후면	1,480	78.18	188	9.93	225	11.89	1,893
풍천면	1,679	77.84	243	11.27	235	10.89	2,157
일직면	1,419	80.90	171	9.75	164	9.35	1,754
남후면	987	83.08	84	7.07	117	9.85	1,188
남선면	967	76.02	157	12.34	148	11.64	1,272
임하면	1,313	77.83	165	9.78	209	12.39	1,687
길안면	1,317	76.88	196	11.44	200	11.68	1,713
임동면	861	79.72	106	9.81	113	10.46	1,080
예안면	854	72.50	153	12.99	171	14.52	1,178
도산면	835	78.85	117	11.05	107	10.10	1,059
녹전면	829	76.62	122	11.28	131	12.11	1,082
중구동	1,889	73.62	296	11.54	381	14.85	2,566
명륜동	1,875	66.35	461	16.31	490	17.34	2,826
용상동	5,979	65.27	1,683	18.37	1,498	16.35	9,160
서구동	3,231	67.89	696	14.62	832	17.48	4,759
태화동	4,155	71.06	790	13.51	902	15.43	5,847
평화동	2,302	70.14	434	13.22	546	16.64	3,282
안기동	2,226	69.45	467	14.57	512	15.98	3,205
옥동	5,583	61.21	1,829	20.05	1,709	18.74	9,121
송하동	3,920	63.16	1,213	19.55	1,073	17.29	6,206
강남동	2,481	62.31	783	19.66	718	18.03	3,982

<표7> 18-19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후보별 유효득표수

18대	허용범(한나라당)		장대진(친박연대)		김광립(무소속)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27,892	34.67	10,029	12.47	39,968	49.68	80,448
19대	김광립(한나라당)		이성노(민주통합당)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63,561	82.49	13,490	17.51			77,051

<표8>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정당투표 유효득표수 (주요 3당)

읍면동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합계	44,462	56.83	10,426	13.33	14,465	18.49	78,239
거소·선상투표	339	57.75	64	10.90	66	11.24	587
관외사전투표	1,918	38.09	1,380	27.40	1,024	20.33	5,036
채외투표	38	38.00	34	34.00	5	5.00	100
풍산읍	2,182	65.53	322	9.67	478	14.35	3,330
와룡면	1,429	66.99	178	8.35	301	14.11	2,133
북후면	1,099	68.77	116	7.26	202	12.64	1,598
서후면	1,225	67.38	156	8.58	252	13.86	1,818
풍천면	1,337	64.84	181	8.78	308	14.94	2,062
일직면	1,163	71.61	115	7.08	178	10.96	1,624
남후면	801	71.58	71	6.34	132	11.80	1,119
남선면	794	64.61	131	10.66	155	12.61	1,229
임하면	1,095	68.14	106	6.60	202	12.57	1,607
길안면	1,065	64.74	151	9.18	209	12.71	1,645
임동면	686	68.81	70	7.02	137	13.74	997
예안면	708	63.27	136	12.15	153	13.67	1,119
도산면	644	63.64	99	9.78	151	14.92	1,012
녹전면	647	63.81	97	9.57	146	14.40	1,014
중구동	1,621	64.07	233	9.21	455	17.98	2,530
명륜동	1,586	57.05	389	13.99	535	19.24	2,780
용상동	4,817	53.56	1,373	15.27	1,769	19.67	8,993
서구동	2,574	54.89	604	12.88	1,013	21.60	4,689
태화동	3,542	61.93	636	11.12	1,036	18.12	5,719
평화동	1,923	59.55	340	10.53	645	19.98	3,229
안기동	1,852	58.50	392	12.38	613	19.36	3,166
옥동	4,486	49.71	1,443	15.99	1,957	21.69	9,024
송하동	3,043	49.67	961	15.69	1,396	22.79	6,126
강남동	1,847	46.75	647	16.38	947	23.97	3,951

<표 9> 18 -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선거구 정당투표 유효득표수(주요 3당)

18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4,423	5.58	40,523	51.15	19,247	24.29	79,227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유효득표수
	득표수	%	득표수	%	득표수	%	
	52,402	69.36	10,905	14.43	4,379	5.80	

IV. 공약과 정책 비교

각 후보들의 공약집과 두 번의 TV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공약의 내용과 정책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 총 7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과 정책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동-예천 상생 방안

신도청 이전으로 지역발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청 이전에 따른 안동-예천의 통합 문제가 지역에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나 입장은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추진 과정 및 문제점 인식 등에서 후보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김광림 후보는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최우선 방안이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안동과 예천이 떨어져 나가면서 행정적 및 정치적 통합이 어렵게 된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김 후보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원화하면서 도로 진입, 공항, 도로 개설, 관광객 유치 문제 등 양 지역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성노 후보는 안동-예천 간 상생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안동과 예천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으로서 김광림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과 같은 정치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인우 후보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도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동-예천 상생이 필수적이며 그 선행조건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선거구 통합의 무산으로 상생의 가능성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점진적인 행정구역 통합방안으로서 박 후보는 주민들의 동질감 확보를 위해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천 공중축제 등 각종 축제를 공동 개최하고, 안동 시청과 예천 군청 간 공무원 인적 교류를 하고, 안동-예천 간 시내버스 노선 공동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책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도심 인구 감소 및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 후보 모든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

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박인우 후보는 구역사 부지에 고급주거 복합단지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도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를 유치하여 원도심 정주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후보는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넓은 주차장 확보와 교통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원도심 유인책으로서 안동 종교문화 타운 건설, 구시장 일대의 글로벌 명품시장 추진, 도시재창조 사업, 구역사 일대 수변 공원 건설, 아파트 및 한옥 건설을 위한 설계비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성노 후보는 특히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이전으로 상권 이탈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차역과 원도심 간 모노레일 건설을 공약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유동 인구의 구도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3.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신도시 배후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 개발과 신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청 신도시 배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광림 후보와 박인우 후보는 북부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산업단지 유치를 주장하지만 그 실현방안에 있어 김광림 후보의 공약이 적실성이 높았다. 이성노 후보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변자이기도 하므로 너무 지역적 개발에 매몰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단 배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찬성을 한다면 풍산에 신재생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광림 후보는 현실적으로 국가공단총량제 실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수요에 기반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안동에 들어와 있는 SK케미칼 백신 공장을 잘 활용하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발맞춰 공단 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성화에 따른 새로운 국가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박인우 후보의 입장은 안동은 낙동강 상류에 있어 도시의 특성상 일반 산업보다는 청정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신소재 IT 융합산업, 의료기기 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4.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촌 경쟁력 강화 방안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 안동에 있어 농업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하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동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그 내용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박인우 후보의 공약은

농촌 문제에 대해 구조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만 그 실현적 방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의문이 든다. 김광립 후보는 원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성노 후보는 특이하게 예산 편성의 개혁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박인우 후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의 관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 농업에 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차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마을 단위의 기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득보전 방안에 대한 공약은 국민소득 대비 농업보조금과 재정투입비를 높이는 것이었다. 국가가 지급하는 연간 보조금과 재정투입을 2013년 기준 일본의 528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광립 후보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농업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로·배수로 확대와 유통가공시설, 생강저장시설, 사과판로시설, 도축현대화시설 건설을 약속하였다. 또 최저생산비는 예산으로 보조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성노 후보는 사회경제의 한 부분으로 농업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산 편성방법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총 예산의 84퍼센트나 차지하는 사업예산과 16퍼센트에 불과한 지급예산을 변경하여 총 예산의 20퍼센트의 불용예산을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5. 안동의 관광·문화 발전 방안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또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 운영이 잘 안되거나 사후 관리가 잘 안되어 안동의 관광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안동으로의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 후보들은 현재 안동의 관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김광립 후보는 관광 시설의 부실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운영을 준 공공기관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천 공항에 비행기 편 신설, 충분한 숙소 및 음식 확보, 대구로 오는 관광객들과 연계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이성노 후보는 안동 관광의 문제점으로 문화재의 자원이 넓게 분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내에 서클 파크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집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박인우 후보는 안동의 관광·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용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 및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안동 탈춤의 경우 기존의 체육관 행사에서 벗어나 안동시민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로 전환하여 안동 시내에서 공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6. 청년층 일자리 문제

청년층 일자리 공약은 후보들의 사회 인식에 따라 공약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먼저 이성노 후보는 경제 문제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안동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도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야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를 반대하여 일자리 창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나라의 경제정책이 특권층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반해 김광립 후보는 청년 실업 해결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산업 문제는 산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현재 청년 일꾼 20만 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청년들 스스로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성노 후보는 지역 교육의 활성화와 취업을 연계시키는 공약으로서 신입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제 강화와 대학의 우수 졸업생을 시 공공기관에 우선적 채용할 것을 공약하였다. 박인우 후보는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안동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동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의료 IT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원격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김광립 후보는 청년들의 눈높이 조정을, 이성노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박인우 후보는 첨단 IT 사업 안동 유치를 주장하였으며 박인우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낙동강 수질 오염문제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과 비소 검출되면서 낙동강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입장이 같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김광립 후보는 상류 지역의 석포 아연제련소, 봉화의 폐광 찌꺼기, 오폐물 저장소에서 침전수 유출 등이 주 오염원임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현재 안동호에 쌓여 있으며 이것을 준설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권위 있는 외국 기관의 조사를 의뢰하는 공약을 내보였

다. 이성노 후보는 낙동강 오염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대기업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담합과 4대강 사업이 어떤 이유로 낙동강에 카그뮴과 비소를 방출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인우 후보 역시 오염원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은 사실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V. 연구 용역결과 활용방안

1.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경선 분석과정에서 살펴 본 김광림 예비후보 캠프의 여론조사 준비 작업은 여론조사라는 시공간적 제한적 상황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의미있는 전략이라 평가될 수 있다. 대표자의 조건이 능력 있고 전문적 분야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과의 소통, 연계, 네트워킹도 중요한 만큼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자질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선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이 보고서의 결과물은 각 진영 후보자의 다양한 선거조직, 선거운동 방식과 양상, 선거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된 결과물은 안동시 유권자의 생생한 입장과 후보자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정치적 연계 강화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와 대표자 간 형성된 긴밀한 정치적 연계는 책임있는 대의정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선거경쟁이 지역적, 특수적 요인보다 정책경쟁적, 현실적 대안 제시 능력에 의해 변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물은 지역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활용될 수도 있다.

2. 정책중심 선거운동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 및 미디어 홍보

이 보고서의 결과물은 각 방송사에 개최한 후보자 간 TV 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미디어나 여론 주도 세력이 어떻게 보고 있고 평가하는지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신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문제, 원도심 공동화 현상, 관광·문화 발전,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이슈를 지역의 여론 주도세력이나 언론 매체가 어떻게 공론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지역 현안의 정책문제가 어떻게 선거경쟁에서 부상을 하고 선거 결과에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안동시 유권자들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투표 선택에 있어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3.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지원

각 후보 선거 캠프에 대한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접촉을 통한 정치적 연계 방식, 지역 현안의 부상과 그 영향력의 추이, 민감한 지역 현안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태도 등이 밝혀졌다. 이렇게 발견된 요인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경쟁에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결과물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용은 후보자나 정당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지역주의에 의존한 선거전략에서 탈피하여 책임정치와 대의정치를 주도하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16.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검색일: 2016/4/20).
- 두산백과. 2016. “안동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2300&cid=40942&categoryId=33922> 검색일: 2016/4/20).
- 안동신문. 2014. “권혁구 안동시장 예비후보 ‘낭비성, 전시성 사업 과감히 정리할 것’.” (<http://www.andongnews.net/coding/news.aspx/1/1/22788> 검색일: 2016/4/20).
- 오종명. 2016. “[4·13총선 열전현장] 안동: 본선 대결보다 당내 경선 판도에 ‘촉각’.” (경북일보: 2016. 1. 25. 발행. 지면 3면).
- 후보별 책자형 선거공보

5.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회경제 변화, 선거구 분구와 20대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참여관찰

1. 20대 총선의 정치

20대 총선은 한국의 정치경험과 정당정치 구도를 크게 변화시켰다. 야당이 분당되면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더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하면서 제1정당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언론, 학계 및 정치권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8석을 확보하면서 제3당으로 등장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지역정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투표에서도 더민주를 앞서 26.7%를 득표하면서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과 서울(28.8%), 대구(17.4%), 인천(26.87%), 경기도(26.9%), 경상북도(14.8%) 등에서 더민주당보다 많은 정당투표를 획득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19대 의회 의석수보다 30석이나 축소된 것이다. 여소야대의 분할정부 구도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 정책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20대 총선결과와 원인은 여러 가지다. 새누리당은 공천과동을 거치면서 서울은 물론 대구, 부산 등 전통적인 우세지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고 중도정당으로의 변신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수도권에서 선전함으로써 제1야당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의 부상은 이전까지의 정치경험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선거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정당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민주당보다 많은 정당투표를 획득함으로써 ‘대안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했다. 새누리당의 몰락, 더민주당의 선전, 그리고 국민의당의 부상이 20대 총선 이후 정당정치 지형을 대폭 전환시켰다.

공천갈등, 야당의 분당과 경쟁 등 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쟁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책현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20대 총선의 중요한 선거쟁점 중의 하나는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해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정치공간’이 생긴 문제였다. 2014년 10월 대법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편차 2대1(상하 $\pm 33\%$)로 조정하라고 판결했다(이재목 2016). 이에 따라 여야는 법정시한을 139일이나 초과하여 2월 28일 선거구를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1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었고 9개 선거구가 통합되어 지역구 의석은 246개에서 253개로 9석이 증가했다. 선거구가 늘어난 지역은 모두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었고 전북(-1), 전남(-1), 경북(-2) 등은 지역구가 통합되어 축소되었다.

선거구 조정은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구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공간에서 각 정당은 어떻게 경쟁했는가? 첫 번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 중의 하나인 인천 연수를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하였다. 연수를 선거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다. 그리고 16대(2000년) 이후 4선을 역임한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의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16년 만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분구대전’을 치른 곳이다. 선거과정에서 분구지역에 대한 양당의 공천갈등, 야권통합과 노력, 그리고 정책공약 등을 중심으로 선거과정을 참여관찰하였다.

2. 분구의 정치와 연수읍의 사회경제 특성

1) 사회경제 변화와 선거구 분구

20대 총선의 첫 번째 쟁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였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가지는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선관위는 2015년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을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 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의 비중을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11월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은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2월 28일 확정된 공직선거법은 인구편차를 2대 1로 조정하여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7석을 늘리는 안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9개 선거구가 통합되었고 대신 1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었다.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신설된 선거구는 아래와 같다.

<표1> 분구 선거구 현황 비교

19대 총선				20대 총선				증감 (비중)*
지역	선거구	선거인수	합계	지역	선거구	선거인수	합계	

강서	갑을	303,867 265,919	569,786	강서	갑을병	209,990 193,340 188,503	591,833	22,047 (3.7%)
강남	갑을	309,776 259,151	568,927	강남	갑을병	198,475 187,035 192,239	577,749	8,822 (1.5%)
수원	갑을병정	292,023 285,964 252,466 274,119	1,104,572	수원	갑을병정무	253,588 235,100 199,056 237,658 262,891	1,188,293	83,721 (7.0%)
경기	양·동 포·연 여·양가	296,916 203,153 268,549	768,618	경기	양·주 동·연 포·가 여·양	162,317 143,953 216,868 220,052	743,190	-25,428 (-3.4)
남양주	갑을	290,008 291,552	581,560	남양주	갑을병	202,221 236,112 220,080	658,413	76,853 (11.7%)
화성	갑을	239,211 279,325	518,536	화성	갑을병	190,715 194,486 224,488	609,686	91,150 (15.0%)
군포		287,462	287,462	군포	갑을	140,891 146,662	287,553	91 (0%)
용인	갑을병	305,278 306,708 290,289	902,275	용인	갑을병정	221,435 222,910 267,685 267,068	979,098	76,823 (7.8%)
김포	-	263,331	263,331	김포	갑을	180,727 171,217	351,944	88,613 (25.2%)
광주	-	267,383	267,383	광주	갑을	153,529 161,228	314,757	47,374 (15.1%)
연수	-	289,171	289,171	연수	갑을	162,155 159,626	321,781	32,610 (10.1%)
유성	-	299,326	299,326	유성	갑을	165,218 171,890	337,108	37,782 (11.2%)
천안	갑을	297,574 277,678	575,252	천안	갑을병	201,861 222,483 183,137	607,481	32,229 (5.2%)
아산	-	276,052	276,052	아산	갑을	153,585 147,267	300,852	24,800 (8.2%)
해운대 기장	갑을	306,144 231,190	537,334	해운대 기장	갑을 기장군	228,440 195,254 153,743	577,437	40,103 (6.9%)
양산	-	267,367	267,367	양산	갑을	147,805 155,751	303,556	36,189 (11.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 전체 선거인(20대 총선) 대비 증감인구 비중임

기존 선거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된 선거구는 서울 1개, 경기 8개, 인천 1개, 부산 1개, 대전 1개, 경남 1개 등 총 16개다. 분구된 선거구가 수도권, 대전, 부산에 몰려 있는 것은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추세와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대 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화성지역으로 9만1,150명이 증가했다. 김포(갑을) 선거구의 경우 88,613명이 증가하였고, 20대 총선에서 4개의 선거구로 분구된 용인의 경우 4년간 7만 6,823명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 이번에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 등의 4개 선거구로 분구되었지만 선거인수는 오히려 2만 5,428명이 감소했다. 군포의 경우에도 20대 총선에서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었지만 인구증가는 선거인수 증가는 91명에 불과하다. 저 중요한 것은 증감인구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선거인수 증가는 4만 5,374명이지만 증가인구가 전체 유권자 314,757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가장 높다. 기존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분구된 해운대·기장 선거구의 경우 증가한 선거인수는 4만 명이지만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유입된 유권자의 상대적 비중은 투표성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

2) 연수구 선거구 분석

(1) 연수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참여관찰 대상 지역인 인천 연수구는 소위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인천은 부산, 대구 등 다른 도시와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15년간 부산은 54,133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대구는 23,847명이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지난 5년간 117,527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측면에서는 3대 대도시로 부상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인천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1.40%, 1.34%, 0.95%, 0.86%로 전국 평균 0.26%, 0.47%, 0.56%, 0.48%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인천광역시 2016, 13).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가 유입되었고, 또 송도국제도시 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기업, 대학 등이 이전하면서 인구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수에서 부산-인천-대구는 약 45만 명의 차이가 나지만 의석수에 있어서는 각각 18석-12석-12석으로 격차가 있었다.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연수갑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1개 의석이 늘어났다.

<표2> 인천시 및 연수구 인구변화(2010~2015년)

구분	2010년			2015.12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부산시	1,773,170	1,794,740	3,567,910	1,735,570	1,778,207	3,513,777
대구시	1,255,170	1,256,431	2,511,676	1,237,291	1,250,538	2,487,829
인천시	1,421,288	1,386,849	2,808,288	1,469,869	1,455,946	2,925,815
연수구	142,215	140,674	282,889	159,287	159,765	319,052

자료: 인천시 통계자료(<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연수구는 지역개발 사업에 따라 인천 지역 및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이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이다. 연수구의 인구는 2010년 282,889명에서 319,052명으로 36,163명이 증가했다. 연수구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2002년부터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영향이 가장 크다. 송도는 청라, 영종도와 함께 2002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왔다. GCF 등 20여개의 국제기구와 연세대, 인천대, 가톨릭대와 같은 국내대학과 유타대, 뉴욕대, 켄트대 등 해외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또 2010년 이후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삼성, 포스코 그룹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만 9,334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증가율이 2.95%로 남동구(3.16%)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젊은 중산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소위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 현재 연수구의 20-40대 인구비중은 47.9%(152,909명)으로 인천시 전체 평균 47.0%보다 약간 높지만 반면 60대 이상 인구는 12.1%(38,495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낮다 (인천 평균은 15.8%)이다.

(2) 연수을 선거구 역대 득표현황

선거구 분구 이전까지 연수구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16대부터 4선을 했다. 20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송도1동, 송도2동과 함께 동춘 1,2동, 옥련 1동이 연수을구에 편입되었다. 연수을 선거구에 편입된 지역의 18대 및 19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18대 및 19대 연수을구 득표현황

[단위: %]

구분	18대				19대			
	통민당 문영철	한나라 황우여	자선당 김성중	평통당 이준도	새누리 황우여	민통당 이철기	자선당 윤형모	진보당 이근선
합계	27.6	59.0	11.5	1.9	53.1	41.0	3.8	2.1
국내부	23.1	64.3	10.4	2.2	40.7	50.4	4.4	4.4
국외부	-	-	-	-	56.9	32.6	7.2	3.3
옥련1동	27.0	60.3	10.2	2.5	53.3	40.8	3.4	2.0
동춘1동	26.6	59.3	12.3	1.7	50.3	43.4	3.4	2.9
동춘2동	31.7	56.5	10.5	1.3	46.8	47.4	3.5	2.3
송도1동	25.5	66.0	7.4	1.0	60.1	35.5	2.9	1.4

송도2동	-	-	-	-	61.9	34.6	2.7	0.9
------	---	---	---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 홈페이지 참조

* 득표율은 연수구 전체 유효득표의 비율임

18대 및 19대 총선에서 황우여 의원은 50%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18대 총선의 경우 59%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송도1동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66%를 기록했다. 19대 선거의 경우 53.1%를 득표했지만 송도1동과 송도2동(19대 선거에서 분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60.1%와 61.9%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연수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송도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매우 높았음을 대변한다. 이전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지지가 높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된 연수구청장, 연수구 시의원 3명 모두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다.¹⁰⁾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연수구에서 4선의원인 황우여의원이 계양구로 지역구를 옮기게 됨에 따라 분구효과가 극대화되었다. 현직효과가 사라진 신설 선거구에서 신인 정치인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분구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 정당은 어떠한 전략을 수립했는가?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설 선거구에서 정책공약, 인물효과, 정당효과 등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쟁점에 주목하여 참여관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과정 관찰

1) 연수을 지역구 예비경선과 후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2015년 12월 15일부터 20대 예비후보 경선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연수구에는 민경욱(52·새누리당·전 청와대 대변인), 민현주(46·새누리당·국회의원), 신호수(60·새누리당·교수), 이만재(63·새·전 국회의원), 이종재(52·새·변호사), 정승연(49·새누리당·교수), 황우여(68·새누리당·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7명, 고남석(57·민주당·전 연수구청장), 박찬대(50·민주당·공인회계사), 이혁재(42·정·지역위원장) 등 1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당의 공천은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중순까지도 결론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연수을 경선후보를 발표한 것은 3월 14일이다. 연수구에서 4선의원이었던 황우여 의원을 서구으로 공천하는 대신 연수을 경선후보로 민경욱 후보와 민현주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발표했다. 민경욱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현직 비례대표 의원인 민현주 후보는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 시절 대변인을 역임한 인사다. 친박 대 비박의 예비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예비경선

10) 연수구청장 당선자는 이재호이고, 시의원 당선자는 정창일 의원, 공병건 의원, 제갈원영 의원 등이다.

후보가 발표된 하루 후인 15일 민경욱 후보는 민현주 후보 측이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현주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민경욱 후보의 논문표절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 ‘대통령 팔아서 나오는 분’, ‘대통령 이름 빨리 얻어먹어서’ 등 민경욱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민현주 댓글의 출처가 민현주 캠프의 비서라고 보도했다(뉴데일리 2016/03/13). 결국 3월 19일 민경욱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이 확정되었다.

한편 더민주당은 2016년 초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윤종기 후보를 단수 전략공천했다. 치안정감을 지낸 윤종기 후보는 경찰출신 인사로는 가장 직급이 높은 영입인사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윤종기 후보가 2011년 9월부터 제주 강정마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오마이뉴스 2016/03/09). 더구나 윤종기 후보는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지낸 1년여의 기간 이외에는 인천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3월 9일 한광원 후보를 연수구에 단수 추천했다. 한광원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중구동구용진군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 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한광원 후보가 단수추천 되면서 임기중 제기되었던 윤리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한광원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사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열린우리당 최고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투표하세요 1219’라고 쓴 여성 사진을 카톡 메시지로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고 문재인 캠프 조직특보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경선 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일부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등의 행위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프레시안 2016/03/09). 결국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민경욱 후보, 전략공천된 윤종기 후보, 그리고 인천을 연고로 의원을 역임한 한광원 후보가 경쟁하게 되었다.

2) 후보자별 주요 공약과 여론

KBS 앵커를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후보는 인지도 측면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고 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더민주당 윤종기 후보는 2015년부터 인천경찰청장을 역임한 것 이외에 연수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이 약점이었다. 한광원 후보는 인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냈지만 소속 정당이 바뀌었고 의원 재임시절 윤리문제가 대두되었다.

<표3> 국회의원 후보현황

구 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 보	민경욱	윤종기	한광원
연령	52세(1963)	57세(1959)	59세(1957)
주요경력	청와대 대변인 KBS 앵커	인천지방경찰청장	17대 국회의원
재산	20.9억	9.3억	8.3억
최종학력	연세대 대학원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인천연고	인천 송도고 졸업	인천경찰청장	인천 동인천고 졸업 인하대 졸업

지역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은 수세적인 여당과 공세적인 야당의 틀에서 정리되었다. 민경욱 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1)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2)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3) 교육국제화 특구 건설, (4)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5) GTX 노선 신설, (6) 인천 문화창조 벤처단지 설립, (7)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시티 조성, (8) 송도국제도시 국제기구 유치지원 협의체 구성 등이다. 송도국민체육센터나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벤처단지 등의 산업시설 유치 등은 생활정치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국제기구 유치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거대 국책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쟁점은 GTX 노선 문제다. GTX 문제가 무산되면서 송도의 지역개발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를 다섯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야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의 기본 논리는 새누리당의 비판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윤종기 후보는 쟁점이 되어왔던 송도현안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 송도국제도시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하거나 (2) 송도유원지 및 대우자판부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은 송도에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문제였다. (3)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을 금지하거나 (4) 송도 국제병원 유치와 같은 공약도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안이다. 그리고 (5) 50만명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단지조성, (6) 인천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7) 국제중고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8) 안심보육 및 여성취업 지원, (9) 안전한 도시, 편안한 도시 건설, (10) 해양경찰청 부활, (11) 인천발 KTX, GTX 신설, (12) LNG 가스저장과 기지 증설 제고, (13) 송도워터프런트 완성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요구는 있었지만 해결은 되지 않던 이유가 새누리당의 문제였고 지역개발 현안을 모두 해결하는 후보로서의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한광원 후보도 송도경제청을 중앙정부로 승격하거나 송도국제병원 설립 및 송도유원지의 의료관광단지 조성, GTX 개통, 송기천 하수처리장의 이전, 그리고 해양경찰청 이전 반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이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과밀학급 해소나 안심보육 및 여성취업 지원, 안전한 도시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재원부족이나 중앙정부의 규제

로 인해 추진되지 않았던 지역현안이 야당의 주요 공약이었다.

한편 3개 정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지역공약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 인천’이다. 강소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복지 및 교육, 원도심 재생사업, 교통체계 구축 등 산업 및 국책사업 중심의 공약이 중심이 되었다 (새누리당 2016). 더불어 민주당은 3월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지방별 정책공약은 중앙당의 정책공약집에 비해 그 분량이나 내용이 매우 간소했다. 인천시 정책공약은 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광벨트 조성, 교육기반 개선, 교통편의시설 개선, 해경본부 이전 반대 및 LNG 증설 억제, 루원시티의 교육타운 개발 등 개발계획이 대부분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지역공약을 발표한 것도 3월 28일이다. 국민의당은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혁신, 교육환경 개선,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 부평 미군기지 개발, 통합예비군 훈련장 도심이전 백지화,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원도심 활성화 등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공약은 중앙공약에 비해 내용이나 구체성이 떨어져있고 특히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단이 발족한 것은 1월 7일이고, 더민주당의 인천지역 총선정책기획단이 발족한 것은 1월 13일이다. 국민의당은 2월 2일 창당 이후 인천시당이 설치되면서 가장 늦게 정책공약 준비에 착수했다.

3) 여론동향과 후보단일화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민경욱 후보의 우세가 보도되었다. 중부일보(2016/03/20)가 야권후보가 단일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경욱 vs. 윤종기의 경합의 경우 46.4% vs. 33.6%, 민경욱 vs. 한광원이 경합할 경우 43.1% vs. 32.2%로 민경욱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당선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경욱 후보 54.0%, 더민주 윤종기 후보 20.8%, 한광원 후보가 9.7%로 민경욱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 43.6%, 더불어민주당 22.3%, 국민의당 9.4%, 정의당 7.3%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격차가 21.3%로 조사되었다. 야권 지지경향이 높은 계층인 30대도 새누리 41.6%, 더민주 24.4%, 국민의당 8.8% 등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8일 여론조사에서도 민경욱 후보는 40.5%의 지지를 얻어 윤종기 후보 27.5%, 한광원 후보 11.6%에 크게 앞서 있었다(중부일보 2016/03/28). 야권후보의 경쟁으로 여권후보의 우세가 전망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야권분열이 여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연대가 논의되었지만 무산되었다. 연수읍에서도 야당후보의 열세가 보도되면서 윤종기 후보는 정의당 후보와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윤종기 후보와 한광원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합의되었다. 경선방식은 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선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법을 둘러싸 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당초 당명을 넣는 여론조사 40%, 이름과 경력만을 넣는 여론조사 60%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지만 한광원 후보측이 100% 이름과 경력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기호일보 2016/04/05).

결국 100% 이름과 경력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월 7일 윤종기 후보가 승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광원 후보는 ‘윤 후보측이 경선 계획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윤종기 후보는 ‘한광원 후보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12일 기각되면서 결국 3당 경쟁체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인천일보 2016/4/13). 한편 새누리당의 4월 7일 기준 선거판세 분석에 따르면 연수읍은 백중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새누리당이 우세 또는 박빙우세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구는 남갑(홍일표), 연수갑(정승연), 부평갑(정유섭), 서갑(이학재), 서을(황우여) 등 5곳이다. 더민주당은 윤종기 후보를 백중열세로 자체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한광원 후보를 열세로 평가했다.

4. 선거결과

연수읍 선거구의 선거는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민경욱 후보는 비교적 수월한 우세가 예상되었지만 선거결과 44.35%의 지지를 받았고 반면 윤종기 후보는 37.05%를 득표했다. 또 한광원 후보도 18.58%를 득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술적으로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 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연수갑에서는 당초 우세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정승연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260여 표차로 패배했다. 국민의당 진의범 후보도 19.14%를 득표하며 선전했다.

<표4> 20대 총선 연수구 선거결과

선거구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지역선거	연수갑	정승연 29,883 (40.28%)	박찬대 30,047 (40.57%)	진의범 14,175 (19.14%)
	연수을	민경욱 32,963 (44.35%)	윤종기 27,540 (37.05%)	한광원 13,810 (18.58%)
	비례대표	48,745 (33.11%)	37,717 (25.62%)	44,353 (25.68%)
전국단위		비례대표 33.50%	25.54%	26.74%

의외의 결과는 비례대표 결과다. 전국적으로 지역투표와 정당투표를 달리하는 교차투표는 20대 총선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비례투표에서 새누리당과 국

민의당이 각각 33.50%와 26.74%에 그친 반면 국민의 당은 26.74%를 득표했다. 연수구 선거구에서도 이와 같은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연수구의 경우 새누리당 정당투표는 민경욱 후보나 정승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33.11%에 그쳤다. 더민주당도 정당지지율이 후보자 지지율보다 낮았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경우 진의범 후보와 한광원 후보 모두 19% 전후의 지지를 받은 것에 비해 정당투표는 25.68%를 기록했다. 교차투표는 일반적으로 후보지지와 정당지지의 격차를 의미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당에 관련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정당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야당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여당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가 선거에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및 함의

19대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진행된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천갈등, 야당분열 등 많은 정치적 쟁점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16개의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신생 선거구에서 정당과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선거구가 분구된 것은 군포나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이다. 아파트 건축에 따른 도시개발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증가시키면서 이와 같은 인구 사회 변화가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수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참여관찰하였다. 아래 표는 20대 총선에서 분구된 16개 선거구의 19대 및 20대 총선 결과다.

<표5> 16개 분구 선거구의 19대 및 20대 선거결과

19대 총선				20대 총선				비고
지역	선거구	당선자	정당	지역	선거구	당선자	정당	
강서	갑을	신기남 김성태	민통당 새누리당	강서	갑을병	금태섭 김성태 한정애	더민주당 새누리당 더민주당	
강남	갑을	심윤조 김종훈	새누리당 새누리당	강남	갑을병	이종구 전현희 이은재	새누리당 더민주당 새누리당	△
수원	갑을병정	이찬열 신장용 남경필 김진표	민통당 민통당 새누리당 민통당	수원	갑을병정무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더민주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
경기	양·동포·연여양가	정성호 김영우 정병국	민통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기	양주동·연포·가여·양	정성호 김성원 김영우 정병국	더민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남양주	갑을	최재성 박기춘	민통당 민통당	남양주	갑을병	조웅천 김한정 주광덕	더민주당 더민주당 새누리당	△
화성	갑을	고희선 이원욱	새누리당 민통당	화성	갑을병	서청원 이원욱 권칠승	새누리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군포		이학영	민통당	군포	갑을	김정우 이학영	더민주당 더민주당	
용인	갑을병	이우현 김민기 한선교	새누리당 민통당 새누리당	용인	갑을병정	이우현 김민기 한선교 표창원	새누리당 더민주당 새누리당 더민주당	
김포	-	유정복	새누리당	김포	갑을	김두관 홍철호	더민주당 새누리당	△
광주	-	노철래	새누리당	광주	갑을	소병훈 임종성	더민주당 더민주당	○
연수	-	황우여	새누리당	연수	갑을	박찬대 민경욱	더민주당 새누리당	△
유성	-	이상민	민통당	유성	갑을	조승래 이상민	더민주당 더민주당	
천안	갑을	양승조 박완주	민통당 민통당	천안	갑을병	박찬우 박완주 양승조	새누리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
아산	-	이명수	자유선진	아산	갑을	이명수 강훈식	새누리당 더민주당	△
해운대 기장	갑을	서병수 하태경	새누리당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	갑을기장군	하태경 배덕광 윤상직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양산	-	윤영석	새누리당	양산	갑을	윤영석 서형수	새누리당 더민주당	△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당선자 정당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지역은 경기도 광주다. 19대 총선에서는 노철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모두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경기도 광주는 19대 총선보다 32,610명의 선거인이 증가하여 유권자대비 증가인구 비중이 15.1%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인구변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연수읍을 포함하여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정당구도가 변화되었다. 연수구의 경우 16년간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되었지만 연수읍에서는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된 반면 연수갑에서는 더민주당의 박찬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동일하게 3당 후보가 경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연수구에서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강남을, 김포 갑, 천안갑, 아산을, 그리고 양산을 선거결과와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여당의 지지가 높았던 강남지역의 분구 이후 처음으로 전현희 의원이 당선되었고, 김포에서도 김

두관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되었던 천안에서는 분구 이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반대로 전통적인 여당 우세지역이었던 양산에서는 더민주당 서형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이 대부분 젊은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 변화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구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양하다. 분구 선거구는 현직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공간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전체 유권자의 5~15%가 새로이 유입된 인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는 기존 선거행태와의 단절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결과는 개인차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음을 대변한다. 지역투표와 정당투표가 다른 교차투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지역투표 행태는 인물효과, 정책공약, 계층효과, 또 정당 일체감에 기반 한 이념투표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의 교차투표 비중이 높았던 것은 공천갈등이나 정치 갈등 등 정치문제에 대한 인식이 작동한 결과다.

이러한 선거과정의 특성은 정책공약을 우선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모두에 함의를 제공한다. 정책공약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일종의 상품이다. 더구나 전체 국회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하다.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공약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력이나 쟁점의 지배적인 구도 하에서 지역차원의 정책공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 차원의 정책공약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제도나 거버넌스가 거의 전무하다. 지역에 기반 한 정당체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공약은 소수의 선거캠프 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지방정부, 기초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체계화되지 않음으로서 비용, 가능성, 필요성에 대한 지역합의 없이 정책공약이 난발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당의 지역공약은 선거를 앞두고 2-3개월 만에 만들어졌고 중앙공약에 비하면 구체성이 떨어졌다. 둘째, 정책과 정치의 혼선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정책공약은 정치이기 전에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득표를 위해서 거대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공약을 난발하는 행태는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되었다. 특히 야당의 정책공약은 정책인식보다 정치논리를 배경으로 한다. 이 때문에 반여당 정책이 난발되었고 정책의 현실 가능성은 적어졌다. 셋째, 정당정치의 한계다. 공천갈등, 야당분당 등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현안이 주목받으면서 지역차원의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매니페스토에 기반 한 정책선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를 포함하여 정치체제 전반의 개혁과 발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반대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와 같은 정치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의당. 2016. “국민의당 인천시당 10대 공약.” http://kookminic.kr/bbs/board.php?bo_table=04_01
- 더불어민주당. 2016.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서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 새누리당. 2016.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서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이재목. 2016.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동서연구』 28(1): 175-202.
- 인천시 통계자료 <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 정희옥. 201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 정당학회보』 11(2): 125-15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 『기호일보』, 2016년 4월 5일자.
- 『뉴데일리』, 2016년 3월 13일자.
- 『오마이뉴스』, 2016년 3월 9일자.
- 『인천일보』, 2016년 4월 13일자.
- 『중부일보』, 2016년 3월 20일자.
- _____, 2016년 3월 28일자.
- 『프레시안』, 2016년 3월 9일자.

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무상복지 대 지역개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참여관찰

I. 서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유권자들이 1인 2표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적절히 표를 안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을 심판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는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와 부산 등의 영남권에서도 나타났지만 수도권에서는 그 성향이 더욱 명확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5석, 40석, 7석을 얻은 반면에 새누리당은 각각 12석, 19석, 4석만을 획득하였다.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단 2석(서울 노원구병과 관악구갑)만을 가져갔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받은 비례대표제 득표율은 각각 28.83%, 26.96%, 26.87%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여타 수도권과 달리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49,714표를 득표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44,546표와 20,257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와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를 이기고 4선에 성공한다. 이는 중원구가 인근의 수정구와 함께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점과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손학규 전의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진적이 없는 분당구 갑과 을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 아닌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상진 의원은 정부 여당에 대한 역풍 속에서도 4선에 안착할 수 있었는가? 왜 은수미 후보는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와 필리버스터로 얻은 대중적인 지지도에 불구하고 당선하지 못했나?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선거 관련 각종 자료들을 이용하여 성남시 중원구의 선거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관찰은 탐구대상이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일반인들과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치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김용호 2011). 본 연구는 선거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유권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반응과 중원구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정책들을 알아보고 이를 신문기사의 내용과 유권자들의 투표경향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후보자의 지역기반과 공약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유추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성남시 중원구의 정치적 특성과 제17대 국

회의원 선거 이후 선거구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살펴보았다. 3장은 세 명의 후보자들의 약력과 공천과정을 알아보고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선거공보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4장은 올해 3월 이후 주요 일간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지지율 추이와 실제 선거결과를 분석하고 신상진 후보의 당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5장은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항들을 요약하고 성남시 중원구의 선거결과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I. 선거구의 특성

한국의 시민운동과 재야세력에게 중원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71년 ‘광주대 단지사건’은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이주한 청계천 철거민들이 졸속 이주정책에 반발하여 일으킨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빈민 투쟁으로서,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청계천 철거민들, 성남공단 노동자들, 호남 출신 주민들을 중심으로 야권세력이 형성되어 진보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경기동부연합은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도시빈민운동을 하여 세력을 확장했으며 중원구는 전국에서 통합진보당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다(한겨레 16/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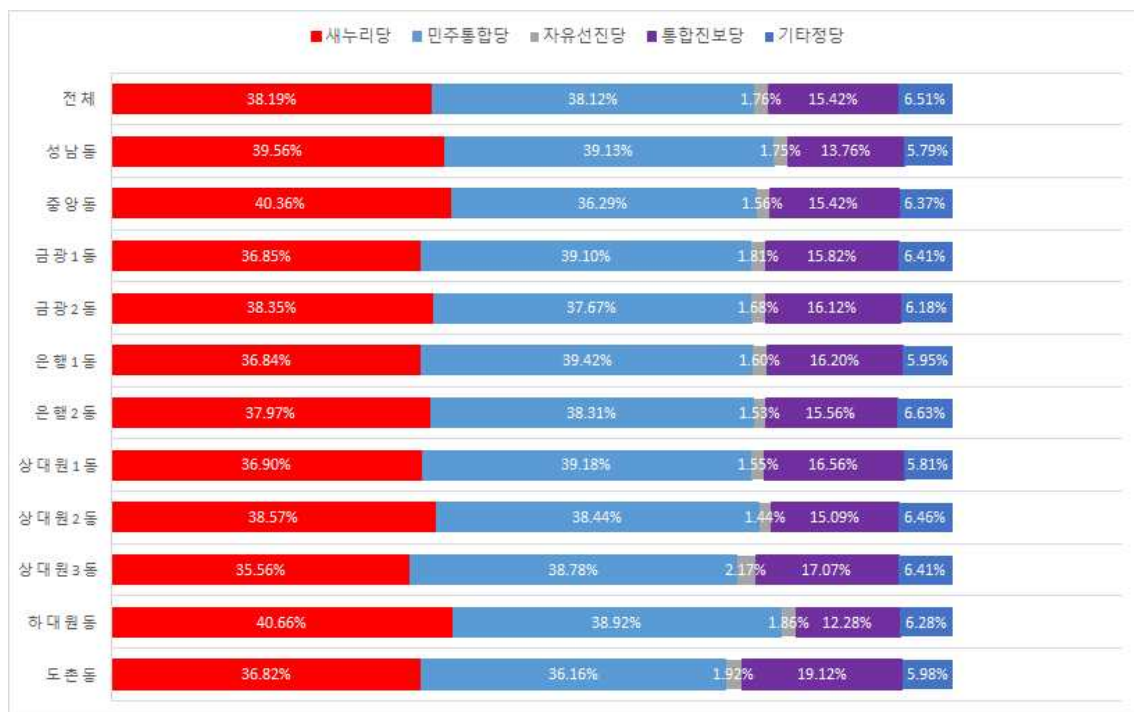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원구의 정치적 성향에 변화가 나타난다.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접전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된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당적을 보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진보당, 새누리당으로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지 못한다(<표1> 참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단일후보였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불과 645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김미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2015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신상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1>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중원구 당선자와 차점자 (2004년 - 2015년)

정당	당선자	득표수 (득표율)	선거	득표수 (득표율)	차점자	정당
열린우리당	이상락	42,770 (39.21%)	2004년 총 선	27,032 (24.78%)	신상진	한나라당
한나라당	신상진	20,435 (34.72%)	2005년 재 보궐선거	16,120 (27.39%)	정형주	민주노동 당
한나라당	신상진	34,546 (42.96%)	2008년 총 선	29,446 (36.61%)	조성준	통합민주 당
통합진보 당	김미희	46,062 (46.77%)	2012년 총 선	45,408 (46.11%)	신상진	새누리당
새누리당	신상진	36,859 (55.91%)	2015년 재 보궐선거	23,490 (35.63%)	정환석	새정치 민주연합

<그림1>은 중원구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정당별 득표율을 동별로 보여준다. 처음에 눈에 띄는 특징은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에서 어느 정당도 전체 지역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투표자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투표한 비율은 각각 38.19%와 38.12%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포함시킬 경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보주의 성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진보주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얻은 득표율은 53.54%인 반면에 보수정의 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얻은 득표율은 39.95%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2012년 총선과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의 득표율은 소속 정당의 득표율보다 8-18%정도 높은 것으로서 신상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지기반을 구축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별로 정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산업단지가 위치한 상대원1동과 상대원3동은 타지역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이 높았지만 힐스테이트 1,2차, 롯데캐슬 등 중산층 이주민이 많은 중앙동과 분당구 야탑동에서 가까운 하대원동과 성남동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높고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낮았다.

<그림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정당별 득표율 (성남시 중원구)



Ⅲ. 후보자들의 공천과정과 공약

중원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총 세 명이었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로 당선되고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3월 25일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과 야권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다(경기일보 16/03/28). 이번 절에서는 세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천과정, 공약 등에 대해 기술하겠다.

1. 후보자들의 약력과 공천과정

먼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원구에서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한 신상진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해서 발표한다. 신상진 후보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다니다가 1984년 성남공단에 취직해 노동운동을 하면서 지역구와 인연을 맺었다. 1991년 학업을 마친 뒤에 상대원 시장에서 병원을 개원하였고, 2000년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역임했을 때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것을 계기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한겨레 16/03/24). 비록 당시에는 낙선했지만, 이듬해 이상락 의원이 선거법 위반(허위학력기재)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총선과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하여 중원구에서만 3선 의원이 된다. 중원구 주민에 따르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이나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 자주 등장하여 주민들과 친근하고 공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초선 은수미 의원과 전 대검 중수부 검사 간의 경선이 있었고 그 결과 1차 경선에서 76.6%를 득표한 은수미 의원이 공천이 확정된다(연합뉴스 16/03/15). 은수미 의원은 노동전문가로서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농맹) 핵심인물로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간 복역한 적이 있었다. 출소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6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세 번째 발언자로 10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마지막으로 3월 9일 국민의당은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나섰던 정환석을 단수후보로 공천한다. 정환석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에스케이캐주얼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으며 2012년과 2014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성남중원지역 선거대책위원장과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 재보궐선거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서는 지역위원장으로 오랜 지역 기반담기를 토대로 45.1%의 득표율을 얻어,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은수미 의원(34.3%)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18.6%)을 이겼었다(뉴데일리 15/03/14). 하지만, 지난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 성남중원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3월 29일에는 야권단일화의 여론에 대해 다른 성남시 3개 국민의당 후

보와 함께 “어떠한 형태의 선거연대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연합뉴스 16/03/29).

2.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예비후보자의 선거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쟁점은 ‘무상복지’였다. 2016년 1월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른바 ‘3개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대해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와 무소속 김미희는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한 반면 새누리당 신상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성남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파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천여 명의 산모에게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인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복 사업은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28만5천65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여 반대해 무산된 사업이었다(한겨레 2015/03/03). 하지만 2015년 9월 18일 성남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 없이 가결한다(연합뉴스 15/09/18).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와 같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재정상의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성남시는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의 명목으로 25만원, 중학생 교복 구입비로 15만원, 만 24세의 청년에게는 분기당 12만 5천원이 지급된다(연합뉴스 16/01/04).

이와 같은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 강행에 대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3대 무상복지 예산안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연합뉴스 16/02/16; 16/03/17). 또한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은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성남사랑 상품권’들 중 일부가 인터넷에서 속칭 ‘상품권깡’ 용도로 거래된다고 보도하고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으로 비판한다(조선일보 16/01/21).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에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후보와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한 반면에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개발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성남시 유권자들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원구의 중심지인 종합시장 부근과 중장년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남한산성 유원

지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보았다. 가장 먼저 스타벅스에서 만난 30대 가정주부 두 명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한다고 답하였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가진 이 주부들은 이재명 시장의 원래 약속 금액인 50만원조차도 산후조리원 몇 차례만 이용할 수 없는 적은 액수라고 말하면서 육아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그러한 지원도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적어도 내가 접촉한 지역구 유권자들 가운데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다. 가정주부를 제외한 직장인들과 노인들, 심지어 청년 유권자들조차도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30대의 여자 학원 강사는 왜 자신의 세금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만난 70대의 할아버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정부 운영에 대해 한참을 비판하시다가도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면서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다. 특히 1월에 지급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전형적 포퓰리즘에 눈 가리고 아웅식 편법 행정”이며 이 중에서 청년배당은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성남시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하셨다는 50대 택시운전사 역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얼마 전에 청년배당으로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맥주를 마신 인증 사진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무상복지정책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언급했다.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 이대명 전임시장의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성남시가 LH나 국토해양부 등에 진 채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급유예를 발표했다(한겨레 14/01/27). 2014년 1월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천명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만일 무상복지에 무분별하게 성남시 재정을 사용한다면 또 다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그러면 성남시 유권자들은 중원구의 가장 중요한 혹은 시급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많은 이들은 재개발의 빠른 추진과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즉,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등 성남시의 구도심권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산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으로서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재개발을 무작정 추진할 경우 이들이 터전이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현재처럼 더디게 진행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높일 뿐이라면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자들 역시 지역개발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공약의 우선순위에 둔다.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에 나타난 공약들을 요약한 <표2>, <표3>, <표4>를 보면 신상진 후보는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을, 은수미 후보와 정환석 후보는 성남 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안한다. 특히,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산업과 함께 세 명의 후보자 모두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또한 신상진 후보와 정환석 의원은 재개발 추진과정 중에 예상되는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킬 정책을 약속하였다. 반면에 예상과는 달리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은 후보자들 공약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공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보자는 정환석 후보뿐이 없었으며 그마저 공약 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졌다. 예비후보 운동 기간 중에 무상복지 정책을 지지했던 은수미 의원은 선거공보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들 간에 찬반논쟁이 격렬한 복지정책보다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견이 없는 지역개발 정책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표2> 신상진 후보의 “중원발전 7대 공약”

	세부공약
I. 4선 의원의 힘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신사-위례선 지하철 연장사업」
	2. 재개발 지역 주민부담 최소화 및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3. 성남법조단지(법원, 검찰청) 본시가지 존치 관철
	4.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성남동 이전 백지화 관철
	5.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원구 7개 전통시장의 국가지원 확대
II. 중원구 기반시설 확충	1.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여수역사」 유치추진
	2.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도촌동 방향 진·출입 IC 개설 추진
	3. 성남종합스포츠센터(성남동) 조기 완공
	4. 성남시립의료원 조기건립 및 대학병원 위탁 운영
	5. 다세대주택까지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열배관 공사 추진
III. 안전한 중원	1. 밝고 안전한 골목 문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2.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유관단체 지원 확대
	3. 노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국·도비 지원
IV.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및 대상 대폭 확대
	2. 치매관리 및 치료비, 노인틀니, 인공관절 등 국가지원 추가 확대
	3.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
	4. 시니어행복센터 건립
	5. 노인복지청 신설
	6. 국·공립노인요양원 건립
	7.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지급액 인상
	8. 다문화가정 교육 및 생활안정 지원

	9. 간병비 부담완화
	1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1. 서민 대출부담 완화
	12. 임금체불 원천봉쇄로 근로약자 보호
	13. 가맹점 올리는 불공정행위 근절
	14.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15.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V.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1.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인하
	2. 상대원공단 「근로자 임대아파트(기숙사형)」 건설
	3. 서민 임대아파트 확대
	4.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노후상수관 교체비용 지원
VI. 어린이와 학생을 위해	1. 「어린이전용 마을 도서관」 건립 및 놀이터 설치·개선
	2. 학교 주변 안전한 환경 조성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공교육 지원
	4. 초·중·고 냉난방 시설비 지원
VII.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국회 통과 추진
	2. 어르신일자리 확대(노인 친화기업 인증 도입 추진 및 재능나눔일자리 활동기간 연장)
	3. 취약근로자 직업훈련지원 확대
	4. 시간 선택제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표3> 은수미 후보의 “은수미가 중원에 드리는 7가지 약속”

	세부공약
1. 성남 산단의 중원경제 심장부 재생, ‘활력중원’ 복원	1. 일반 산단 경쟁력 강화산업의 성공을 위한 ‘활력중원 민간추진위원회’ 설립, 운동
	2. 신호부부용 스마트 주택/ 청년용 세어하우스 건립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
	3. 의료기기 클러스터(IT/SW+의료 기기 제조업+디자인 플래닛) 조성
	4. 신규 입주기업의 ‘지역민 우선 고용제’ 도입
2. 대중교통 NO! 맞춤형 대중교통망을 구축!	1. 성남1호선 트램 착공 추진
	2. ‘위례-신사 연장선’ 성남시 원안 지속 추진
	3. ‘수서-광주복선전철’의 모란-여수·도촌용 신설 추진
	4.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3. 21세기 창의혁신 문화·교육특구 중원!	1. 중원구 ‘21세기 창의혁신 문화·교육특구’ 지정 추진
	2. 역사, 문화, 산업, 체험학습센터 건립
	3. 학교 시설 현대화 및 교육여건 개선
	4.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
4. 미래세대를 위	1.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를 위한 성남위원회

한 안전·친환경·생태 중원 추진	회' 출범
	2.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 대한 안전도 전수조사/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3. '친환경·생태 놀이터' 유치
	4. UN이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5. '삼대(三代) 희망 일자리·복지'로 '100세 시대 행복 중원'	1. 중원구 관내 대학에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유치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원구 유치
	3. 성남 거주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4. 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
6. 진짜 '상권 활성화'로 중·소상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1. 시설 현대화 대상요건 완화 및 무등록시장 지원 확대방안 법제도 개선
	2. 중소 상인들을 위한 '중소상인 살리기 4대 패키지' 법제도 개선 추진
	3. '청년마켓' 조성·확대 등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청년문화 축제 개최
	4. 지하철 8호선 역이름의 중원구 명소 병기 추진
7.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사는 중원	1.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산정 기준 주민 공개
	2. 경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중원구 유치
	3. 발달장애아동 '학습전교육' 확대 추진
	4.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교체 확대

<표4> 정환석 후보의 주요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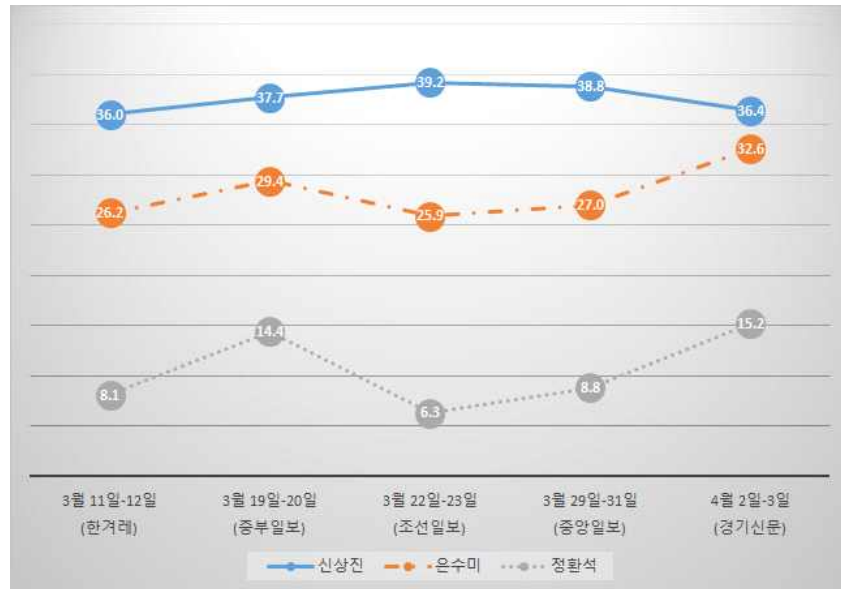
	세부공약
1. 중원구 성장 동력 2대 거점 마련	1. 성남 2·3공단 혁신산업단지를 위한 구조고도화 및 종합문화센터 조기 확정 및 완공
	2. 성남시민축구단 주경기장 성남종합운동장 이전 조기 완료
2. 국가지갑 지키기 공약	1. 전통시장 상권, 골목상권 활성화 및 현대화 본격 추진
	2.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인하 세금 감면
	3. 전·월세 상한제 도입
	4. 세액공제율 5%인상 월급쟁이 국민지갑 지키기
	5. 재벌특혜법인세 정상화 매년 10조원 이상 재원확보 복지투자
	6. 최저임금 8천원으로 인상 및 실버일자리사업 확대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교통 취약계층에 교통비 바우처 제공
3. 교통공약: 사통발달 삼각축 지하철 시대	1. 위례 신사선 지하철 본시가지(남한산성-을지대-신구대-공단-광주)구간 연장
	2. 도촌-여수-시청앞-모란-수서 전철 신설
	3.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시청-판교역)
	4. 서울통행버스 첫차 막차 시간 재조정
4. 주거공약: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지역난방 전면 도입	1. 주민부담 줄이며 지역난방 확대 - 도정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확보
	2. 2단계 금광1, 중1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부담 완화

	3. 금광3구역재건축, 일성·성지·궁전·은행주공재건축 추진
	4. 2단계 및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원
5. 교육·보육·공공의료 등 복지공약: 성남의 3대 복지는 달려야 합니다	1. 시립의료원 조기완공 및 협진방식 운영, 장례비, 간병인 등 기존 대비 반값 운영, 선택 진료비 폐지 본인부담 진료비 40% 절감
	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지원
	3. 체험학습 확대, 친환경급식 확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단계적 확대 초등 학습준비물 센터 활성화,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4. 고등학교 학비 국비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 정환석이 중원에 드리는 약속!	1. 동별 시민 경찰대 신설, CCTV 확대 등 범죄안심동네 조성
	2. 단독, 연립주택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설치
	3. 시장 및 상권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모란민속 5일장, 성호시장, 금광시장, 종합시장, 지하상가, 하대원도매시장)
	4. 재개발사업 지원 및 주민부담 완화 추진
	5. 순환도로, 희망로, 사색로, 원터길도로망, 보행로 확장 및 확보

IV. 여론조사와 선거결과

<그림2>에 나타난 주요 일간지와 지역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상진 후보는 예비후보 운동 기간부터 상대방 후보보다 훨씬 앞섰다. 3월 11일-12일 한겨레와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36.0%의 응답자가 신상진 후보라고 답하였으며 은수미 후보와 정환석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6.2%와 8.1%였다. 참고로 당시 예비후보였던 무소속 김미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비율은 5.1%로서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전후에 있었던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의 여론 조사에서는 각각 38.8%, 17.0%, 8.8%의 응답자들이 신상진 후보, 은수미 후보, 정환석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하였다. 이는 3주전 한겨레의 여론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하지만, 4월 2일과 3일 실시된 경기신문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신상진 후보가 36.4%, 은수미 후보가 32.6%, 정환석 후보가 15.2%의 지지율을 보임으로써 신상진 후보와 은수미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일간지들이 주관한 여론조사보다는 지방 일간지들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3>에서 보듯이 실제 선거결과에 더욱 근접한 결과였다.

<그림2> 성남시 중원구 여론조사 결과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그림3>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중원구의 후보자별 득표율과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 후보자별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신상진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의 43.41%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38.90%와 17.69%의 득표율을 얻은 은수미 후보와 정환석 후보를 이기고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신상진 후보는 도촌동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은수미 후보를 앞섰으며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전통적으로 야당성향이 강했던 은행2동과 상대원2동, 상대원3동에서 은수미 의원에 10% 내외로 크게 앞섰다(<그림1> 참조). 후보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신상진 후보와 은수미 후보 모두 개인 득표율이 소속정당의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보다 약 10%이상 높은 반면에 정환석 후보의 득표율은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보다 10% 정도 낮았다. 이는 많은 선거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선택하고 비례대표제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이며 신상진 후보의 경우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정당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3> 성남시 중원구 후보자별 득표율과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

	새누리당 신상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국민의당 정환석		
	득표율	정당득표율	개인-정당	득표율	정당득표율	개인-정당	득표율	정당득표율	개인-정당
전체	43.41%	32.92%	10.49%	38.90%	28.33%	10.57%	17.69%	27.55%	-9.86%
성남동	41.85%	32.89%	8.96%	39.08%	27.66%	11.39%	19.09%	28.82%	-9.73%
중앙동	45.23%	35.16%	10.07%	37.15%	26.37%	10.78%	17.61%	27.30%	-9.69%
금광1동	46.12%	35.06%	11.06%	36.81%	27.53%	9.28%	17.07%	26.68%	-9.61%
금광2동	42.76%	32.72%	10.04%	40.12%	28.94%	11.18%	17.12%	26.71%	-9.58%
은행1동	43.14%	32.55%	10.59%	39.87%	29.71%	10.16%	16.99%	26.59%	-9.60%
은행2동	45.94%	33.25%	12.68%	37.09%	28.07%	9.02%	16.97%	27.31%	-10.34%
상대원1동	43.89%	33.36%	10.53%	38.16%	28.58%	9.58%	17.95%	27.64%	-9.69%
상대원2동	46.76%	38.60%	8.16%	34.27%	26.17%	8.10%	18.97%	25.62%	-6.65%
상대원3동	46.78%	36.93%	9.85%	34.94%	26.82%	8.12%	18.29%	26.59%	-8.30%
하대원동	46.98%	34.38%	12.60%	36.59%	27.42%	9.17%	16.44%	27.88%	-11.44%
도촌동	38.73%	27.67%	11.06%	44.80%	29.17%	15.64%	16.46%	30.18%	-13.72%

그러면 신상진 후보가 당선된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신상진 후보의 탄탄한 지역기반과 은수미 후보에 대한 낮은 지역민으로서의 공감대이다. 2015년 은수미 후보는 재보궐선거 중원구 후보로 나서면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현역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역 인지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서 당시 지역위원장이었던 정환석 후보에게 졌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지역기반을 다져왔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신상진 후보는 1980년대 초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원구 지역에 거주하면서부터 줄곧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하였다. 비록 정부 여당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지만 이러한 신상진 후보의 탄탄한 지역기반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신상진 의원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번째, 신상진 후보가 2015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신상진 후보를 낙선시키기에는 1년이라는 임기는 너무 짧았다. 신상진 후보가 의정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좀 더 긴 시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지역구민의 의견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원구는 분당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정구에 비해서도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지역개발은 중원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성남 지하철 시대 초짜로는 어렵다”는 신상진 후보의 선거문구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가슴에 와 다가왔을 것이다. 더욱이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하철 사업 같은 토목사업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성남시와의 협력 하에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대원2동과 상대원3동에서 신상진 후보가 은수미 의원보다 10%이상의 득표율의 더 얻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야권연대의 실패였다. <그림3>에서 보듯이 은수미 후보와 정환석 후보

의 득표율을 합하면 과반수인 56.59%이다.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설령 후보단일화로 인해 이탈하는 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상진 후보보다는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 기간 초반부터 야권연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정환석 후보에 대해서 은수미 후보는 아쉬움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정환석 후보 입장에서는 17.89%이라는 초반 여론조사 결과보다 두 배 이상의 득표율을 얻음으로써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지와 함께 다음 선거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연구자가 만난 많은 유권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 성남시의 가장 큰 정책 이슈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는 무상복지가 후보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세 명의 후보자 모두 교통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모두 다 자신이 지역개발을 이끌 최고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런 선거운동 전략은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가정주부와 같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유권자들은 성남시의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외의 다른 유권자들은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재정낭비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무상복지 정책으로 정책적 우위에 설 수 없던 더불어 민주당의 은수미 후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중원구에 탄탄한 지역기반을 가진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지역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지역 유권자가 됐을 때는 국회의원의 국정공약보다는 지역공약, 전국적인 명성보다는 지역구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여부에 근거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지적하듯이 정치인은 특정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직에 당선되고자 하기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 후보자들로서는 선거구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에 더 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Downs 195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슨은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재분배되는 복지정책보다는 모두의 경제적 이득이 확대되는 개발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에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eterson 1981; 1995).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성남시의 현 상황은 아이러니하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 국회의원과 지역의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학술 논문 및 서적>

김용호. 2011. “한국의 선거 참여관찰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1호: 231-249.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Peterson, Paul E. 1981. *City Limit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05. *The Price of Federalism*.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일간지>

김기성. 2014. “성남시, 3년6개월만에 “아듀, 모라토리엄”.“ 『한겨레』 (1월 27일).

_____. 2015. “성남시, 신입 중학생 무상교복 재추진.” 『한겨레』 (3월 3일).

김병규. 2016. “복지부-경기도 손잡고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연합뉴스』 (3월 17일).

김지훈. 2016. “‘제2 호남’ 옛말.성남 중원, 야 분열때 연패 전력.” 『한겨레』 (3월 24일).

김현중. 2015. “새정치, 4.29 성남중원에 정환석 선출.” 『뉴데일리』 (3월 14일).

문민석·강현숙. 2016. “성남중원 무소속 김미희 불출마 선언…” 『경기일보』 (3월 28일).

손덕호. 2016. “성남시가 나눠준 ‘청년배당’, 하루만에 ‘상품권깡’으로…이재명 “그럼 현금 줄까.” 『조선일보』 (1월 21일).

이우성. 2015.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시의회 통과…복지부 수용할까.” 『연합뉴스』 (9월 18일).

_____. 2016. “경기도 ‘성남시 무상복지 정지’ 대법에 신속결정 요청.” 『연합뉴스』 (2월 16일).

_____. 2016. “성남 4개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 “선거연대 없다.” 『연합뉴스』 (3월 29일).

임형섭·이정현. 2016. “더민주, 10곳 중 4곳 현역 탈락…유승희·김경협·은수미 본선 진출.” 『연합뉴스』 (3월 15일).

7.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여성 후보자와 20대 총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참여관찰

1. 서론

20대 총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이번 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예측은 거의 모두 빗나갔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여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신당인 국민의 당이 호남에서 선전하면서 국회 내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고질적이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주의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에서 여성 의원 당선에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어긋났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통해 당선된 여성 후보자는 총 26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된 여성 의원까지 합치면 총 51명의 여성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로써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7%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 지역구 여성 당선 의원의 수는 17대 10명, 18대 14명, 19대 19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였지만 올해 총선에서 이러한 증가세 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 여풍은 강력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98명 중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19대를 기준으로 볼 때 7석이 증가되었다. 특히 야당에서 여성 의원의 배출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 경기도가 7명, 전북, 광주, 경북이 각각 1명씩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야당 모두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여성 의석의 증가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4.13 총선에서 최대 이번 지역 중 하나는 강남 벨트이다. 강남 3구의 전체 8개 선거구에서 5명의 여성 정치인이 당선된 것이다. 이 중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선거구는 바로 강남에서 야당의 깃발을 쏘으면서 동시에 여성 의원을 배출한 강남 을 선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여당 남성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온 보수적인 강남지역에서 어떻게 여성 후보가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강남 을에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는 야당의 후보로 어떻게 여당의 텃밭인 강남 지역을 공략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2장을 통해 강남을 지역구의 선거구 특징과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

천 과정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새누리당의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역구 참여 관찰의 내용을 논의한다. 4장은 두 후보자의 공약과 tv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선거 결과와 함의를 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2. 선거구 특징 및 후보자 공천

1) 강남을 선거구 특징

강남은 80년대 부동산 상승과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반발로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유로 여당 내에서는 ‘강남에서 공천은 곧 본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남은 여당에서 공천되면 바로 여의도로 직행하는 이른바 ‘꽃가마’ 선거구였다. 따라서 강남은 여당 내 공천이 전쟁수준이다. 지난 총선의 경우 거물 정치인 정동영 전 의원이 강남 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에게 패할 정도로 새누리당의 지지가 강한 지역이다. 또한 강남 을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성 후보자에게 공천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지역으로 여성이 당선된 적이 전무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에 영향을 받은 곳이 바로 강남 을이다. 최근 선거구 획정을 통해 강남 병이 분구되면서 강남을 선거구에는 개포동,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이 남게 된 것이다. 특히 강남을 지역구 중 이번 선거 기간 중 가장 주목을 끈 곳은 세곡동이다. 세곡동은 보금자리 주택 개발이후 인구가 급등한 곳으로 지역 편의시설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한 곳이다. 강남 을의 각 동 인구 구성을 나타낸 <표1>을 살펴보면 세대수와 전체 인구에서 볼 때 세곡동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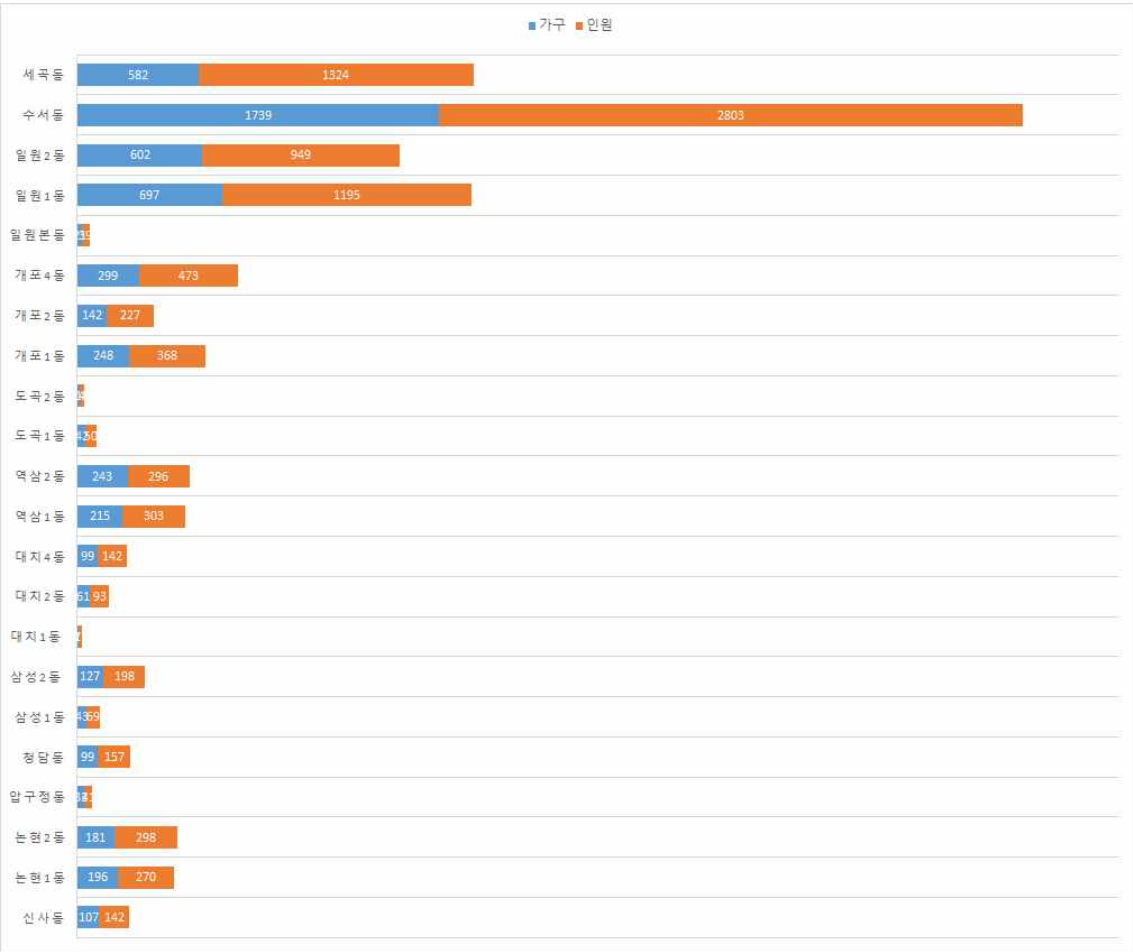
<표1> 강남을 인구 구성

	세대수	남성	여성	인구 합계	65세 이상 고령자
개포1동	8,605	10,619	11,544	22,163	2,455
개포2동	12,720	16,144	17,332	33,476	2,595
개포4동	9,631	11,366	11,811	23,995	2,017
일원본동	8,320	12,280	12,715	24,995	1,857
일원1동	7,405	8,687	9,193	17,880	2,317
일원2동	7,124	9,073	9,426	18,499	2,024
수서동	7,380	7,352	8,739	16,064	2,924
세곡동	13,018	17,340	18,554	35,894	4,033

출처: 강남구 통계정보서비스, 제 30회 강남통계연보. 2015 참조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강남 지역구에 비해 강남을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남에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이곳에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강남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수서동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몇 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월등히 높으며, 세곡동과 일원동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역시 다른 강남에 비해 매우 높다.

<그림1> 강남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출처: 강남구 통계정보서비스, 제30회 강남통계연보. 2015

마지막으로 강남을 지역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 교통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강남구에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각 동에서 설문을 한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이 설문 결과가 강남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설문을 통해 일정 부분의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 강남구 중 교육 환경과 교통 환경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

은 곳은 수서동과 일월동으로 모두 강남 을에 속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2> 강남구 생활환경 만족도

	교육 환경				교통 환경			
	불만	보통	만족	사례수	불만	보통	만족	사례수
신사동	8.1%	31.2%	60.7%	156	12.7%	60.5%	26.8%	156
논현1동	0.3%	25%	74.7%	260	0.4%	31.3%	68.3%	260
논현2동	0.2%	37.1%	62.7%	188	0.2%	72.6%	27.2%	188
압구정동		20.1%	79.9%	191	0.4%	56.1%	43.5%	191
청담동	2.8%	32.5%	64.7%	219	0.7%	40.7%	58.7%	219
삼성1동	2.7%	35.6%	61.8%	111		16.8%	83.2%	111
삼성2동		10.8%	89.2%	238	2.3%	33.5%	64.3%	238
대치1동		8.2%	91.8%	105		5.5%	94.5%	105
대치2동	2.2%	13.1%	84.7%	268	1.9%	32.2%	65.9%	268
대치4동		7.9%	92.1%	189		98.3%	1.7%	189
역삼1동	0.4%	22.5%	77.1%	395	0.3%	10.4%	89.3%	395
역삼2동	3.2%	28.2%	68.7%	263	11.1%	75%	13.9%	263
도곡1동	2.7%	37.9%	59.4%	136	0.6%	30.1%	69.4%	136
도곡2동		2.6%	97.4%	242		7.8%	92.2%	242
개포1동	3.8%	24.4%	71.8%	142	21%	22.3%	56.7%	142
개포2동	6.3%	26.3%	67.5%	194	14.8%	29.5%	55.7%	194
개포4동	5.4%	39%	55.6%	157	8.7%	29.2%	62%	157
세곡동	0.3%	40.6%	59.1%	251		39.1%	60.9%	251
일원본동	2.3%	20%	77.7%	137	5.9%	21.4%	72.8%	137
일원1동	7.7%	42%	50.4%	101	33.9%	17.1%	49%	101
일원2동		3.6%	96.4%	120	1.5%	2%	96.5%	120
수서동	39.8%	43.1%	17.2%	114	14.4%	11.8%	73.7%	114

출처: 강남구 통계정보서비스, 2015 강남구 사회조사보고서

강남을 지역구 참여 관찰을 통해 만난 세곡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였다. 세곡동 일대에는 지하철역이 없어 교통 대란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리고 밤고개길이라고 불리는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교통 체증을 매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세곡동에 학교가 너무 없어 아이들이 먼 거리까지 통학해야한다고 했다.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환경이 다른 강남 지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강남구청장이 강남의 분리 독립을 선언할 만큼 서울시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2) 후보자 경선 및 공천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두고 새누리당 내 경선은 매우 치열했다. 강남 을은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로 유명한 김종훈 의원의 지역구이다. 초기 경선에는 현역

의원인 김종훈 의원을 비롯하여 원희목, 권문용, 심동섭, 이귀영 등 다수의 예비 후보가 나왔다. 이들 중 특히 김종훈 의원, 원희목 전 의원,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경합을 벌였다. 김종훈 의원은 2007년부터 4년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다가 19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에 영입되어 강남 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강남을 19만 명 중 1만 7천명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록자라고 개발이 더딘 곳도 다수 있으며 강남 도심 개발로 상대적 피해를 입은 맏한 게 많은 주민이 대다수이다, 지역 내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서발 KTX 역세권 조성, 세곡동 보금자리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등이 해결해야 과제”라고 했다(MK 뉴스 2016/03/15).

권문용 예비후보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지냈으며 강남구청장 재직 시 양재천 복원, 강남구 인터넷 수능 강의 도입, 전국 최초 CCTV 관제센터를 설치했다. 권문용 예비후보는 서초 갑 최양오 예비후보와 강남과 사초 지하 경전철 사업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국제뉴스 2016/03/17). 원희목 예비후보는 18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대한 약사회 출신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원 예비후보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8가지 실천을 약속하고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 결과는 현역 의원인 김종훈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강남 을에서 새누리당이 치열한 공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는 경선 없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민주당이 3월 초 서울지역 전략 공천 1호로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전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19대 총선에서 강남 을에서 정동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으나, 경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에게 패배한 뒤 당 지도부의 송과 갑 전략 공천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전현희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을 위해 강남을 지역구를 오랫동안 다져온 ‘강남 바라기’ 여성 후보가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현희 후보에 대해 “야당의 힘이 바로 서울의 강남인데, 19대 총선 때부터 강남에 나가겠다고 사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 비례대표로 당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힘지에 출마하는 것이 도리라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이제 강남이 바뀌고 있다. 지난 4년간 강남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에서 발로 댄 결과, 주민들이 마음을 주고 계시다. 총선에서 진 지역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 지역 대부분에서 승리했다. 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강남에 야권의 깃발을 꽂겠다고 했다(아시아경제 2016/03/02).

3. 선거운동 및 지역구 참여 관찰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

당의 김종훈 후보는 37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제 통상 및 대외관계 전문가로서 특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 정동영 전 의원을 이기고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종훈 후보의 이번 총선의 전략은 바로 자신이 현역 의원으로 지역구에서 맺은 성과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종훈 후보의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면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김종훈 후보는 자신이 현역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매월 1-2회 지역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90여회이며 자신이 맺은 정책적 결실이 다음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의원으로서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했으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을 자치구세화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강남의 재정자립도를 높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역구를 보다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에 당원들과 자연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강남 지역 청소년 학생들과 멘토의 결연을 통해 그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지역별로 김 후보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먼저 개포동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를 받았으며, 2014년 11월 구룡마을 화재 시 이재민들에게 소화기 200개를 전달했다고 했다. 수서동에서는 수서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획득했으며 수서주공아파트 배란다 사시 시공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수서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모듈러 주택 건립 사업 중단을 요청했으며 밤고개로 확장에 따른 한전주,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확정했다고 했다.

세곡동에서는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의 세곡동 이전 철회를 관철시켰으며 아우디 정비공장 건립을 반대했고 리엔파크 5단지 앞 커뮤니티 민자 사업 중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은곡마을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조정하고 세곡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하는 등 세곡동의 주변 기반 시설 건립에 노력했다고 했다. 일원동의 중동중학교 급식실 신축을 확정했으며 소금재역 신설을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했다.

<표3> 주요 정당의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김종훈	전현희
소속정당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1952년 5월 5일	1964년 11월 4일
직업	국회의원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의료법학 석사
경력	(현) 강남구 을 국회의원 (전)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현) 변호사 전현희 법률사무소 대표 (전) 18대 국회의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력을 가진 여성 엘리트로서 18대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공천을 원했으나 당시 정동영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당 내 공천에서 떨어졌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 나선 박지원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머무르며 강남을 표밭을 오랫동안 다져왔다.

전현희 후보의 선거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현역의원인 김종훈 후보에 대한 책임론과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홍보이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해서는 강남을 지역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을 연계시키며 책임을 물었다. 먼저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다. 구룡마을 재개발 문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문제, 학여울역 SETEC부지 서울 제2시민청 건립방식 문제 등에 있어 강남구는 서울시와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가를 지적했다.

다음은 세곡동 문제이다. 세곡동은 개발부터 잘못된 지역으로 SH와 LH가 개발지역을 분리해 광역교통망과 학교와 같은 기간 시설 조성 없이 개발하여 세곡동에서 수서역까지 밤고개길은 출근길 교통지옥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아이들은 근처 학교가 없어 수서지역까지 통학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은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이다. 각종 규제에 묶인 개포동 재건축, 일원동, 개포동, 구룡마을 등 장기 거주 세입자와 서민들의 주거대책에 대해 현역 의원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한 수서역 교차로 행복주택 44호 건립문제는 왜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선거 캠페인과 선거 공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자 했다. 전현희 후보는 본인을 변호사 시절 초기 AIDS에 감염된 어린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공익 소송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송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여 거대 제약회사와 로펌에 대항해 10년간 법정 투쟁을 한 끝에 대법원의 인과관계 판결을 받아낸 신념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 후보는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인 보건, 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약한 점을 강조하였다.

전현희 후보의 선거 참모 인터뷰를 통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먼저 전 후보는 강남을 지역구 공천 받기 전부터 이 지역을 오랫동안 다져온 해바라기로 상징되는 강남 바라기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길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주 중에는 각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당원과 자원봉사자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한다고 했다. 주말에는 보육원 바자회, 여성 단체 행사와 같은 지역 행사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정 방문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후보는 선거 전략으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고 했다. 전 후보는 각종 방송과 신문에서 요청하는 인터뷰를 활용하여 후보자 본인과 본인의 선거 공약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 후보만의 전략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남을 지역구 중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곡동 주민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세곡동 주민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지하철 역 건설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본인의 집중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총선 전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표4>를 살펴보면 세 차례의 언론사 여론조사 모두에서 김종훈 후보가 전현희 후보를 최소 15% 정도 이상 차이로 선두를 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수준의 차이였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강남을 지역구를 경합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분류하였으며,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가 강남 을에서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표4>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조사 시기	김종훈	전현희	조사방식	표본수	조사기관
3월 23일	44.2%	27.7%	유선전화 75%, 무선전화 25%	600	중앙일보
3월 25일-26일	41.9%	25.8%	유선전화 100%	500	한국일보, 코리아리서치
3월 31일, 4월2-3일	45.2%	30.1%	유선전화 100%	510	MBN·매일경제

그러나 이러한 선거 관세 분석에 대해 전현희 후보 측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언론사 여론조사는 대체로 유선 전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년, 노년층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했다. 이에 더하여 안심번호를 사용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현희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거나 오히려 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여성 후보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 후보는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성 후보로서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을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여성 후보로서 힘든 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여성 후보자로서 세심함과 소통을 무기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전 후보는 여성 이미지 보다는 치과의사와 변호사 경력 때문에 능력 있는 엘리트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언변도 좋은 점이 강점이라고 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나이와 남녀에 상관없이 전 후보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점에서 본인의 인지도와 지지가 상당히 높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후보로서 여성 정책은 부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어보니 전 후보 측은 강남 엄마로서 세곡동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과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특히 학교 지역에 CCTV 설치 강화나 방지턱을 더 많이 만들어 학교 주변을 안전화 지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도서관 건립과 더불어 도서관 도우미 설치 등을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선거 기간 동안 강남을 지역구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 먼저 김종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지지 요인 대부분은 정당 요인과 현직 효과였다. 50대 남성 회사원 김씨는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믿음이 간다. 과거 한미FTA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하는 등 국가 중요 사안을 맡아봤기 때문에 능력 부분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 후보자인 전 후보 평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전 후보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60대 사업을 하는 남성은 김종훈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하며 본인은 “항상 새누리당을 뽑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볼 때는 “야당은 싸움만 할뿐 하는 게 없다”고 했다. 70대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는 강씨는 김종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당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당에서 당선자가 나올 경우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덧붙여 새누리당의 성향의 자신과 맞는다고 했다. 여성 후보인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았다면서 “나는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성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종훈 후보를 지지자들 중 여성인 경우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았다. 61세 주부 이모씨는 김 후보를 지지하며,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김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했다. 전 후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무게감이 부족하고 했다. 본인이 가까이에서 전 후보를 만나 봉사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의료와 법률 전문가 이미지가 강하며,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입지는 부족한 느낌”이라고 했다. 60대 여성 주부는 김종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전현희 후보는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후보 지지층은 김종훈 후보의 지지층보다는 젊은 20-50대 유권자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았다. 30대 후반 주부 나씨는 전현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정당은 상관없다. 강남에서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집권해 왔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투표이고 정치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를 통해 세곡동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관심 있는 공약을 전현희 후보가 내걸어서 내가 지지하는 것이다. 자녀가 어리다 보니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공약이 와 닿는다.”고 했다.

50대 중반 주부 도모씨는 여성 후보자인 전현희 후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강남

에 올인하는 후보라고 들었다. 집으로 배달 온 공보를 보니 똑똑한 여자인 것 같다. 다만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이 지나치게 희망적이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만약 전 후보가 당선되고 공약 이행이 높으면 강남에서 오랫동안 집권해 온 여당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편이어서 전 후보의 성품을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 경험에 있으니 잘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 주씨 역시 전현희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또한 “전현희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인 수서 KTX 역세권 유치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20대 초반 여대생 김씨 역시 전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지하철 유치 공약 때문”이라고 했다. “전 후보가 강남을 지하철 유치 공약과 함께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또한 역세권 개발과 같은 지역 개발에 힘쓰는 인상이 깊었다”고 했다.

우리의 예상을 깨는 지지자도 존재했다. 70세 남성 김씨는 전현희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이념과 정책이 나와는 맞지 않으며 전 후보는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곡동에 필요한 것을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여성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정책 수행 능력이지 성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차별적인 평가나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 중 인터뷰를 꺼리거나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30대 여성 회사원은 “선거에 관심이 없다”며 “선거 공보조차 보지 않았다”고 했다. 30대 초반 남성 양씨는 “투표는 할 생각이나 공보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치에 관심 없어 투표 전에 대충 생각하고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 문제만 빨리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60대 남성 역시 본인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위에 사람들이 다 썩었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반문했다.

4. 정책: 선거 공약과 토론회 분석

김중훈 후보의 공약은 크게 국가차원의 공약과 지역차원의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가 전체 관련한 김 후보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분단과 북핵문제에 대해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과 우리의 안보 역량의 강화를 주장했다. 경제 부분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두텁게 해 나가겠다면서 각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 행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선택적 복지의 기초 아래 제한된 소중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부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책임정치가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소수의 발목잡기 근거 조항을 제거하고 의사진행방해연설인 필리버스터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20대 국회 의원이 되면 어르신을 위한 노인 복지청을 신설할 것이며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과 관련된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며 이중언어학교 자율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이며 면세점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는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관련된 김종훈 후보의 공약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진행형인 개발사업과 도시 재생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서KTX 역세권 복합 개발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의 조화로운 개발,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지원, 마을별 중상향 숙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본래 목적이 무의미해진 수서·세곡지역 그린벨트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서울 동남권 관문에 걸맞은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밤고개길 확장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천에서 북정까지의 동서철도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을 통과하도록 할 것이며 위례부터 신사까지는 경전철의 노선 일부를 변경 및 추가하고 수서역세권과 세곡동을 경유하는 판교 IT밸리 연결하는 전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공약은 교육 및 문화에 관련된 것이다. 보금자리와 행복주택 지구 내에 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며 부족하고 낙후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세곡동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의 희망시설을 수용할 것이며, 열악한 학교 급식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창업동아리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공약은 복지과 관련된 내용이다. 수서와 일원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 직업재활센터 내 장애인 작업장을 확충하며 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공약은 주민과의 소통과 관련된 공약이다. 강남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캠프를 정기적으로 갖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안보침병 강남’을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 능력 있는 정부를 위한 강남의 제언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키움과 나눔’의 균형을 찾기 위한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표5> 주요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후보자	정당	정책공약
-----	----	------

김중훈	새누리당	1.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가속화 2. 서울 동남권 관문에 걸맞은 교통망 확충 3. 교육·문화의 도시로 만들 4. 수서·일원 지역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캠프” 정례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1. 세곡 New City 완성 2. 시립병원 유치 3. 재건축·리모델링. 주민이 원하는 대로 4. 지하철 역 유치 5. 수서역 KTX 역세권 청년일자리SOHO 건립 6. 생활체육 시설확보 및 동호회 지원확대 7.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들 복지혜택 확대 8. 아이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강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약

김중훈 후보가 국가 및 지역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반면, 전현희 후보는 지역구 관련 공약에 집중하였다. 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진심 공약이라고 하며 총 8개의 공약을 표명했다. 전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세곡 신도시 완성이다. 세곡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세곡 지역에 지하철 유치 또는 별도 추가 노선을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고려해 중학교를 신설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으로 세곡의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며 토지임대부 아파트 입주자들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세곡 지구는 신도시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민 편의시설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편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세곡 천을 양재천 이상의 종합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쉼터 강남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며 성남 공항,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활소음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방음터널 설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은 바로 시립병원 유치이다. 타 지역으로 이전된 강남 시립의료원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세곡지역에 새로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공약은 각종 규제에 묶인 강남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장기거주 세입자와 상가들을 위한 우선거주 대책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 등 장기거주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 등 주택 지구단위 개발 종상향 문제를 적극 지원하며 공익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네 번째 공약은 지하철이 없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강남을 지하철역 유치이다. 자곡로, 현릉로, 소금재, 개포동 지하철역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수서역 KTX역세권에 청년일자리 SOHO(Small

Office+Home Office)건립이다. 수서역 KTX 역세권 행복주택 예정지에 공공임대주택, 청년벤처 창업센터, 쇼핑, 문화시설 등이 함께하는 복합주거문화 SOHO 클러스터를 설립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공약은 생활체육 시설 확보 및 동호회 지원 확대이다. 생활체육 전용 축구장을 건립하고 기존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등 축구장 시설을 지원할 것이며 배드민턴, 족구장, 풋살, 탁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및 동호회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일곱 번째 공약은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들 복지혜택 확대이다. 전 후보 자신이 18대 국회의원으로 노인틀니, 치과 스케일링과 유아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적용에 앞장섰던 보건 복지 전문가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동네 이웃들의 복지혜택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소 확대, 원스톱 노인 종합 문화 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시설 개선 및 복지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장애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적극 지원 등이다.

마지막 공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강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내신 사교육지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며 아동보행권이 지켜지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스쿨존을 설치하고,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하여 뛰어 놀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 공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선거 공약과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TV 토론회를 통해 강남을 지역구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입장과 총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토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기초연설을 통해 김종훈 후보는 본인이 당 내 경선과정을 거쳐 후보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4년 동안 외교, 통상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주민과 당원과 함께 지역구 환경 미화에 힘쓰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날은 민원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강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전현희 후보는 기초연설을 통해 강남이 바뀌고 있다면서 강남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세곡동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통학을 하며 교통 문제가 심각하여 출퇴근길이 지옥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을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의 전세 값이 너무 높아져 서민들의 삶이 황폐화해졌다고 했다. 본인은 강남에서 치과의사, 변호사를 하면 딸을 초, 중, 고등학교를 보낸 강남엄마이며 강남이 본인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강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강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여기어 18대 국회의원 시절 우수 국감의원, 우수 입법위원으로 선정될 만큼 의정 활동이 우수했음을 강조했다.

TV 토론회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20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현희 후보는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청년 실업 증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친박/비박으로 나누어 날을 세우지 말고 국민 민생을 최고로 생각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김종훈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19대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경제에 필요한 많은 법들이 민주당의 소수 독재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며 이번 20대 국회에는 국회 선진화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충 질문으로 전 후보는 김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한 이유를 질문했고 이에 김 후보는 세월호 법의 내용 중 묵비권 조항에서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반대했다고 대답하였다. 김 후보는 전 후보에게 국회선진화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전 후보는 국회선진화 법이 국회에서 반복되었던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법이므로 정부법안의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 후보는 19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편이 그 증거이며 여당이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 일자리 창출 혹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김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은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숨통을 트이고 서비스 산업을 증대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3%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는 각각 7%와 4%였으나 실제 경제 성장률은 2.9%에 그쳤다고 하며, 서민 경제를 살려야 경제 발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재벌 중심의 경제라는 데 있으며 서민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돌아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였다.

보충 질문으로 김종훈 후보는 서비스 산업 중 대표산업인 관광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학교 옆에 호텔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후보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학교 옆에 호텔을 짓는 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전 후보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대형마트 휴업에 반대했는데, 이것은 영세상업인을 죽이는 일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종훈 후보는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며,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질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 후보는 본인이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하면서 먼저 국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전국에 마더 센터를 두어 어머님 돌보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충질문으로 전 후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3D 업종의 구직란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말꼬리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히려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기존 시각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전 후보의 생각을 물었고 전 후보는 선택적 복지는 국가 예산의 문제라며 가장 필요한 곳에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복지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방대한 국방 예산, 낭비적인 자원 외교 예산에 너무 치우치니까 복지 예산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인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강남 읍은 개발과 도시재생이 진행형인 곳이라며, 대표적으로 KTX 역세권 개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교통망 확충 등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강남 읍에는 구룡마을과 같은 판자촌이 있다고 하면서 이 곳을 국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했다.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해 전 후보는 이 지역은 다른 강남 지역에 비교해 볼 때 서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 된 세곡동 주민들은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하철과 같은 교통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주민편의 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충질문으로 김종훈 후보는 2008년과 2009년 보금자리 주택 건설 때 전현희 후보는 국회의원이셨는데, 그 때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했다. 전현희 후보는 당시 본인은 비례대표였지 지역구 의원이 아니었다고 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영향력에 볼 때 차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는 오히려 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 지역 문제에 있어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는 자신은 2012년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쯤 세곡동으로 이사 왔으며, 본인은 세곡동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영향력 밖의 일이라고 했다. 오히려 전 후보가 FTA 협상 당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김 후보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많이 하셨는데, 세월이 지난 후 보면 그 때 논평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면서 반문했다.

두 후보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지속하였는데, 전 후보가 김 후보가 시민단체 낙선, 낙천 후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 후보는 한미 FTA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한미 FTA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입법 발의를 무더기로 했다가 폐기되는 식의 발의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 11개의 입법 발의를 했고 통과된 법안은 7개이므로 50%이상의 통과율을 가지고 있다. 공동 발의는 200건이 넘는다고 했다.

전 후보는 김 후보가 세곡동 교통 인프라가 왜 없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입장인데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세곡동의 급속한 인구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개발 당시에는 주택 보급에 역점을 두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전 후보가 당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전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한미 FTA는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협상 과정이 반드시 대등해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는 본인 역시 통상 무역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대등한 협상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전 후보가 의원 당시 임기 전 무더기로 발의해 놓고 나중에 폐기되었는데, 이러한 입법 방식은 이른바 ‘보여주기 식’ 입법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 건수는 몇 백 개라고 하면서 본인이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야당 소속 의원이다 보니 실제로 통과 되지 않은 법안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틀니나 의료 관련 법안들은 많이 통과되었다고 답변했다.

5. 결론: 선거 결과 분석 및 함의

총선 날 전까지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측과 달리 대역전극이 일어났다. 전현희 후보가 48,381표로 51.46%를 득표함으로써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것이다. 김종훈 후보의 득표는 41,757표로 득표율은 44.41%였다. 사실 총선 개표 전까지 전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선거 당일 오후 6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이상 기운이 감지되었다.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가 48.3%, 전 후보가 48.2%로 그야말로 접전을 보인 것이다. 결과는 전현희 후보의 승리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텃밭인 강남벨트가 무너졌다는 것, 더구나 야당 여성 후보가 강남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마치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된 것처럼 여당 야당 양측에 모두 놀라움 그 자체였다. 야당 후보가 강남을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홍사덕 위원 당선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여성 의원 선출은 최초의 기록이므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전 후보는 당선 확정 후 다수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강남을 지역구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사교육 절감 공약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제 강남에서 여성 돌풍을 일으킨 전현희 후보의 승리 요인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자. 먼저 전 후보는 지역구에 대한 철저한 민심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구 맞춤형 공약을 세밀하게 잘 설계했으며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후 전 후보는 당 지도부로부터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략공천을 뿌리친 ‘강남 바라기’ 후보였다. 전 후보가 이번 총선을 위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한 진심이 유권자들에게 통했다. 참여관찰을 통해 만난 많은 주민들은 전 후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교통, 교육, 시설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했다. 특히 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역구에서 표심을 공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익숙한 분위기였다.

다음 성공 요인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역의원인 김종훈 후보에 대한 불만 표출과 이를 활용한 전 후보의 선거 전략이다. 대개 여당의 국회의원은 강남이 오랫동안 여당의 텃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구의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의도 정치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곡동 주민들은 정부 여당과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컸다. 주민 대다수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느냐며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전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었다. 현역 의원이 해결하지 못한 다수의 지역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방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선거구 조정 효과 및 세곡동 변수를 전 후보가 매우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도곡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만이 강남 을에 남게 되었다. 특히 세곡동의 인구가 최근 4년간 급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곡동을 비롯한 수서와 일원 지역은 강남이지만 강남 같지 않은 주민들이 대거 모여 사는 곳이다. 이들은 다른 강남 지역 주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더구나 강남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교통과 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급등하여 삶의 만족도가 다른 강남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주민들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강남 주민들과는 다른 정치적 정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번 선거를 통해 전 후보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였다. 전 후보는 세곡동을 잡는 것이 곧 선거에서 승리라고 할 만큼 세곡동 민심의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표심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집중 공약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전 후보는 야당 여성 후보로서 여당 현역의원인 김종훈 후보보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고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가 가질 수 있는 단

점은 최소화하고 여성 후보가 가진 장점은 최대화시켰다. 전 후보는 여성 후보가 일반적으로 능력이나 경력이 남성 후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이력을 가진 후보였다. 치과의사 출신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라는 엘리트 이미지가 전 후보가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상쇄시켰다. 또한 18대 비례의원이자 당 대변인으로 일한 경력 역시 전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성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지역 주민에 대한 세심함과 뛰어난 소통을 적극 활용했으며, 더구나 본인 스스로를 강남엄마로 칭하면서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를 적극 자신의 정책으로 수용한 점이 돋보인다.

4.13 총선을 통해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후보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여성 의원 당선에 전무한 강남을 지역에서 전현희 후보가 현역 여당 남성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서 대단한 일이다. 전현희 후보의 승리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전 후보가 지역구 주민들에 의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워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파고든 전략이야말로 전 후보가 야당 여성 후보로서 철웅성 같은 강남 벨트를 무너뜨린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본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 정치 인재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민심에 기반을 둔 공약 구축과 정책 입안이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제뉴스』, 2016년 3월 17일자.

『아시아경제』, 2016년 3월 2일자.

『MK뉴스』, 2016년 3월 15일자.

8.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의 총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참여관찰

1. 서론

최근 개성공단 중단과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등의 사건들로 인해 북한 관련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북 관련 이슈는 이전의 선거에서 꾸준히 주요 쟁점으로 여겨져 왔으며 20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들이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의 핵문제, 개성공단과 관련된 공약들을 발표하며 대북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¹¹⁾

한편 한국 사회에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유입되어왔으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26,634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주민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지역 중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2016년 기준으로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에는 약 1,78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통일부 2016), 남동구 갑 지역의 유권자 수는 211,260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동구 갑 유권자의 0.84%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수치상으로는 남동구 갑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남동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며 현역의원인 박남춘 의원을 비롯하여 역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¹²⁾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19대 현역의원이었던 박남춘 의원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한 관련 이슈는 남동구 갑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갑과 같은 특징적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정책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사회에서 정책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된 시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20대 총선은 정책 선거의 현주소를 파악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정책에 기반을 두어 투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중요성을 가지며(조진만 2008), 궁극적으로는 정책 선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정책 선거가

11) 북한과 관련된 각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이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경협 재개”,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공동선언 계승”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경향신문 2016/04/06).

12)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윤성 후보는 “새터민 재할 정착프로그램 추진”을 5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중요한 이유는 정책 논쟁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며, 이는 대중들이 선거 이후에도 정책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다는 점이다(중앙일보 2016/04/11). 다운스(Downs 1957)는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공약을 내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 유권자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교환관계를 형성하며,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선호를 잘 반영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합리적 유권자의 모습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유성진 2014, 98).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남동구 갑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동구 갑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참여도나 공약 이해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남동구 갑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선거가 자리매김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의 한자는 공약과 정책을 마련하는 정당과 후보자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남동구 갑 지역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는 공약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선거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거구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논현1동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는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이 포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확정상황에 따르면 남동구 갑의 읍면동수는 9개이며 확정된 선거인수는 210,708명이고, 인구수 대비 선거인 비율은 80.1%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아래의 <표1>과 <표2>는 남동구 갑 지역구의 만 19세 이상 주민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¹⁴⁾ 210,509명의 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은 50.2%이며 남성은 49.8%로

13) <http://ic.nec.go.kr/ic/icnamdonggu/sub1.jsp> (검색일 2016년 3월 26일)

14) 남동구청 인구현황 자료(<http://www.namdong.go.kr/main/introduction/present/population.asp> 검색일 2016.4.20)를 기반으로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분류해놓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여성의 거주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또한 연령별 현황을 보았을 때 39세~48세인 중년층의 비율(22.4%)이 가장 높았으며, 29세~38세의 주민들이(20.8%)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남동구 갑 지역에는 29세부터 58세까지의 유권자가 63.7%의 비율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인천 남동구 갑 유권자 현황(성별)

동	남성(%)	여성(%)	계(%)
구월1동	12,090(49.1)	12,524(50.9)	24,614(100%)
구월3동	11,366(50.0)	11,365(50.0)	22,731(100%)
구월4동	7,713(49.9)	7,734(50.1)	15,447(100%)
간석1동	10,551(49.3)	10,863(50.7)	21,414(100%)
간석4동	12,156(50.1)	12,090(49.9)	24,246(100%)
남촌도립동	10,030(50.8)	9,720(49.2)	19,750(100%)
논현고잔동	14,477(49.2)	14,919(50.8)	29,396(100%)
논현1동	12,846(49.9)	12,910(50.1)	25,756(100%)
논현2동	13,544(49.9)	13,611(50.1)	27,155(100%)
계(%)	104,773(49.8)	105,736(50.2)	210,509(100%)

출처: 남동구청 인구현황 자료(2016년 3월 31일 기준) 재구성

<표2> 인천 남동구 갑 유권자 현황(연령)

	19세 ~28세	29세 ~38세	39세 ~48세	49세 ~58세	59세 ~68세	69세 이상	계
인구 수 (%)	36,226 (17.2)	43,771 (20.8)	47,208 (22.4)	43,168 (20.5)	22,756 (10.8)	17,380 (8.3)	210,509

출처: 남동구청 인구현황 자료(2016년 3월 31일 기준) 재구성

2) 정치적 특성

남동구 갑 지역은 아래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18대 총선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15대부터 18대 총선에서 모두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네 차례의 선거에 걸쳐 16년 동안 이윤성 의원의 계속해서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윤성 의원은 18대 총선까지 평균적으로 53.2%를 득표해 승리하였다.¹⁵⁾ 이렇듯 남동구 갑 지역의 경우 민주화 이후 18대 총선까지는 현 새누리당과 궤를 같이한 정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특징을 보였고, 이를 뒷받침하듯 19대 총선 당시 한 선거 참모는 “남동 갑 선거구의 경우 시청, 교육청, 경

15) 이윤성 후보의 역대 총선 득표율을 보면 15대 54.18%, 16대 54.89%, 17대 45.77%, 18대 57.81%였다(조진만 2012).

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운집되어 있고,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수준도 높기 때문에 보수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조진만 2012, 351).¹⁶⁾ 하지만 19대 총선에서는 이윤성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재선에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가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지역 내 이념적 교체가 이루어졌다.

한편 아래의 <표4>는 18대 총선과 19대 총선 결과를 읍면동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내·외 부재자투표를 포함해 모든 동에서 고르게 후보의 지지율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에서는 이윤성 후보의 공천 탈락으로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의 지지가 높아졌고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와는 박빙이었으나 선거구 내의 모든 지역에서 박남춘 후보를 고르게 지지해 결국 박남춘 후보가 당선되었다. 즉, 남동구 갑 지역구내에서 동별 지지성향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았을 때 남동 갑 지역구는 보수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번 당선되면 계속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후보가 신인후보보다 선거경쟁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에 의해 설명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황아란 2015). 실제로 19대 총선 결과를 보았을 때,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재선 비율)은 43.9%였고 서울은 27.1%, 경기 42.3%, 대구 41.7%, 인천 지역에서는 50%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¹⁷⁾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천 지역에서는 재선비율이 높아 비 현역 후보보다 현역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인천 남동구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선거 결과	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당선자	이윤성	이윤성	이윤성	이윤성	박남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4> 18대, 19대 총선 읍면동별 득표현황¹⁸⁾

[단위: %]

후보자 읍면동	18대	19대

- 16) 하지만 조진만(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남동구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점을 들어 남동 갑 선거구에서 보수적 지형만큼 진보적 지형도 형성되어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당선인 통계 자료(<http://info.nec.go.kr/> 검색일: 2016년 4월 26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구 의원 246명 기준이다.
- 18) 20대 총선과 18대, 19대 총선의 남동구 갑 지역구에 속하는 읍면동이 달랐기 때문에, <표4>에는 20대 총선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월2동, 간석3동이 포함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19대 총선에서는 논현동이 논현1동, 논현2동으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였다.

	통합민 주당 신맹순	한나라 당 이윤성	민주노 동당 신창현	평화통 일가정 당 차윤희	새누리 당 윤태진	민주통 합당 박남춘	무소속 성하현	무소속 이윤성
국내부재자투표	18.7	53.6	11.9	14.0	35.8	37.7	5.5	18.6
국외부재자투표					23.3	60.0	5.7	10.5
구월1동	25.7	56.2	11.7	5.4	34.5	48.9	2.2	13.6
구월2동	27.5	57.5	10.1	4.0	38.5	47.5	2.6	11.0
구월3동	26.0	59.5	9.6	3.7	40.5	43.9	2.1	12.9
구월4동	26.7	55.6	11.0	5.6	39.2	44.6	2.3	12.5
간석1동	28.7	58.6	8.1	3.7	39.5	46.2	2.2	11.6
간석2동	27.0	59.5	8.8	3.7	41.5	44.0	2.3	11.7
간석4동	29.7	57.2	8.2	3.9	40.2	46.9	2.0	10.2
남촌도립동	26.6	55.6	12.4	4.4	39.9	44.2	2.2	12.9
논현고잔동	26.4	57.4	11.5	3.7	37.0	49.7	1.5	11.0
논현1동					36.0	47.0	2.1	14.0
논현2동					37.3	49.1	1.6	11.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정당별 후보 공약 및 선거 쟁점

1) 20대 총선 공천 과정 및 후보자 등록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 많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정당들이 약속한 방식대로의 공천이 가능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점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연합뉴스 2016/03/26). 남동구 갑 지역구 공천 역시 이러한 평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역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단수공천 되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나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문대성 후보를 단수공천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는 지난 2012년 박사논문 표절로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 사하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2014년 복당했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단수공천 되었다(연합뉴스 2016/03/14). 그러자 이윤성 전 의원은 “예비후보가 7명이나 나선 지역구에서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후보를 단수추천한 당의 이번 결정이 과거의 밀실공천, 나눠 먹기식 공천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재심을 요구했다(경인일보 2016/03/14). 그럼에도 문대성 후보의 공천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출마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남동구 갑 지역에는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

민의당 김명수 후보, 민중연합당 임동수 후보 총 네 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아래의 <표5>는 후보자들의 연령, 경력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박남춘 후보가 57세로 가장 연령이 높았으며 문대성 후보가 39세로 가장 연령이 낮았다. 또한 문대성 후보와 박남춘 후보는 19대 현역 국회의원이고 김명수 후보는 정당인, 임동수 후보는 노동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후보자 등록 현황

연 번	이름	소속 정당	연령	직업	학력	경력
1	문대성	새누리당	39세	국회의원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현)부산 사하을 19 대국회의원 (현)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2	박남춘	더불어 민주당	57세	국회의원	영국 웨일즈대학교 국제운송 이학석사	(현)인천 남동구갑 19대 국회의원 (전)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차관급)
3	김명수	국민의당	52세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현)한국노동경영연 구원 원장 (전)한국산업은행 노 조위원장
4	임동수	민중연합당	53세	한국 GM 노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 지구과학교육과 중퇴	(현)인천비정규노동 센터 대표 (전)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 역대 후보들의 공약 및 처리법안

아래의 <표6>은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 및 처리법안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의 이윤성 후보는 5대 공약에서 “새터민 재할 정착프로그램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러한 공약은 18대 국회에서 「해외체류 새터민의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중국의 새터민인권보장 및 강제송환중단 촉구결의안」 등의 입법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의 박남춘 후보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강화”, “새터민, 사할린 통포, 다문화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화: 가임기 탈북여성을 위한 '24시간 육아시설'”, “새터민 직원 채용과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박남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네 차례에 걸쳐 꾸준히 발의해 선거 공약이 입법 활동으로 연결된 점을 볼 수 있었다.

<표6> 인천 남동구 갑 18~19대 국회의원의 새터민 관련 공약 및 처리법안

18대 이윤성(한나라당)	
5대 공약/선거공보	처리법안
- 새터민 재활 정착프로그램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의원 등 20인): 대안반영폐기. 제안일자 2009.12.16. 의결일자 2011.03.11. - 해외체류 새터민의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유기준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제안일자 2010.10.04. 의결일자 2011.03.10. - 중국의 새터민인권보장 및 강제송환중단 촉구결의 (유기준 의원 등 11인): 대안반영폐기. 제안일자 2011.10.05. 의결일자 2011.10.10.
19대 박남춘(민주통합당)	
-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강화 - 새터민, 사할린 동포, 다문화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남동구 -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화: 가임기 탈북여성을 위한 '24시간 육아시설'(새터민 직원 채용)과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 확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좌현의원 등12인): 소관위심사. 제안일자 2015.05.0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심사. 제안일자 2013.11.2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의원 등11인): 소관위심사. 제안일자 2013.12.2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등10인): 대안반영폐기. 제안일자 2014.03.18. 의결일자 2014.05.0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곤 의원 등 12인): 소관위심사. 제안일자 2014.08.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portal/VtMain.do>) 홈페이지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고자 선거 공보를 참고하여 아래의 <표7>에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했다.¹⁹⁾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는 노인 바우처 실시, 노인 복지관 건립 등의 노인 복지 공약에 집중했으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중연합당의 임동수 후보도 문대성 후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복지 정책에 집중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

19) 19대 총선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공보 및 5대 공약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5대 공약을 제외한 선거공보만을 후보자에게 수집하여 부득이하게 선거공보를 통해서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3월 23일 전화문의).

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역의원원이었던 박남춘 후보의 경우 “새터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 또한 “새터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다.²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 남동구 갑의 현역의원인 박남춘 후보는 19대 총선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화” 등의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였으나 20대 총선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7> 20대 총선 후보자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 비교

후보자(정당)	공약
문대성(새누리당)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새터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김명수(국민의당)	새터민 교육지원 사업 추진
임동수(민중연합당)	-

출처: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

4. 선거 과정

1) 선거 과정

3월 31일, 각 정당의 후보들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는 지난 4년간 남동구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으며,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는 유년시절을 남동구에서 보냈으며 정부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을 테마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 갑 지역의 큰 쟁점이었던 사안은 야권 후보 단일화였다. 출정식 전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는 “우리 남동 구민 모두가 행복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길을 만들고 끝까지 함께 뛰겠다”는 말로 단일화 없이 총선을 완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경인일보 2016/03/29).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현수막, 선거운동차량 등에 ‘야권단일 후보’라는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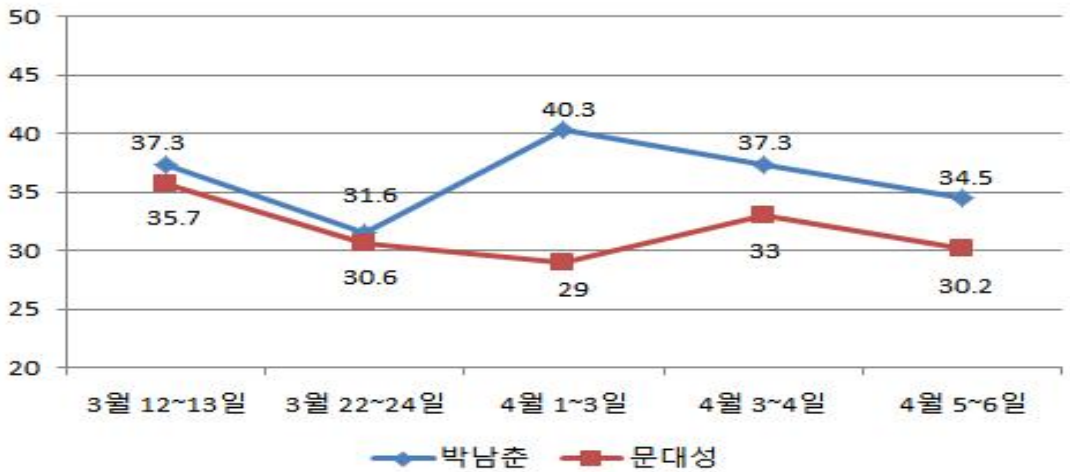
2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약을 제외한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문대성 후보는 학교 노후 시설 보수 등을 비롯한 교육환경 조성, 도시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 공약을 주장하였고 인천을 관광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박남춘 후보 또한 도시철도 건설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공단의 리모델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임동수 후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집중해 ‘맘대로 해고 방지법 제정’, 남동공단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출처: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

현을 사용했고 4월 2일, 김명수 후보는 박남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남동구 선관위에 고발했다(서울일보 2016/04/03).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의 ‘야권 단일후보 확정’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간에 단일화를 이룬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2016/04/04).

남동구 갑 선거구가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19대 총선에서 당선자의 정당교체가 있었던 만큼 지역구를 다시 탈환하려는 여당과 텃밭을 사수하려는 야당 간의 접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인천일보 2016/04/05). 아래의 <그림1>을 보면 3월 12일~3월 13일에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 박남춘 후보는 37.3%, 문대성 후보 35.7%였으며, 3월 22일~24일 조사된 결과는 박남춘 후보 31.6%, 문대성 후보 30.6%로 두 후보간 지지율의 격차가 1.0%포인트에 불과해 치열한 접전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져 약 10% 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선거법상으로 여론조사 발표가 종료될 시점에는 다시 접전의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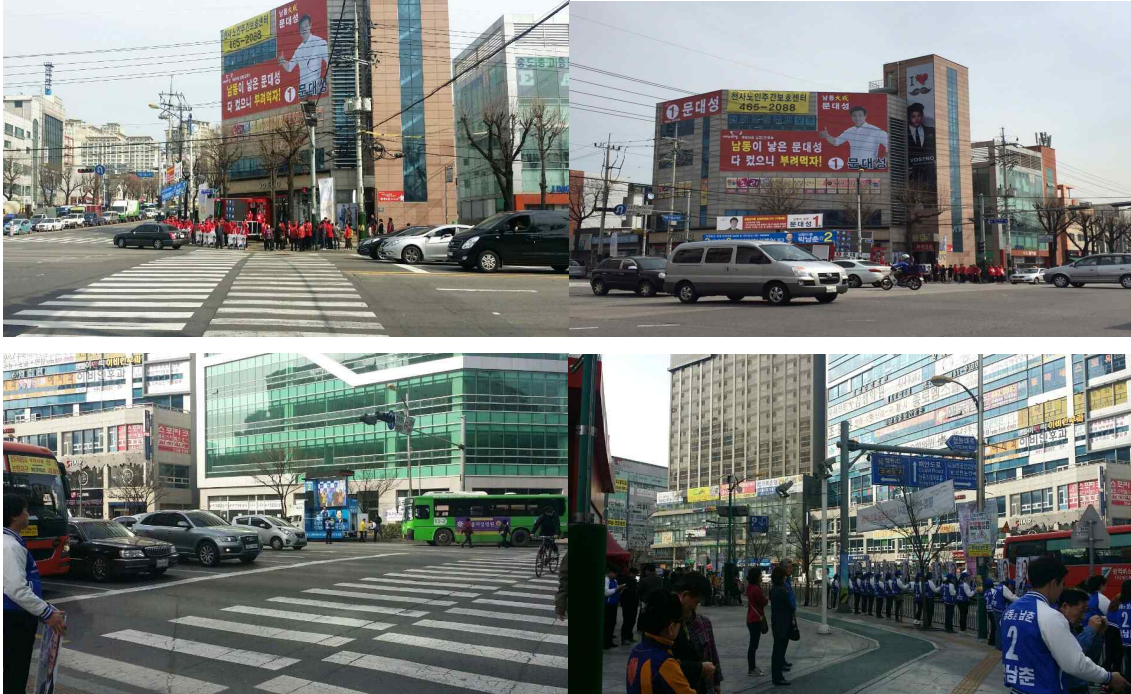
또한 4월 3일 YT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후보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문대성 후보의 지지율이 29.0%, 박남춘 후보가 40.3%였으나, “귀하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대성 후보가 38.6%, 박남춘 후보가 37.5%로 엇갈려 선거 결과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했다(경인일보 2016/04/05).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으며 유권자들 또한 선거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림1>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재구성

<사진> 문대성, 박남춘 후보의 출정식(2016/03/31)



2) 인터뷰 내용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도, 공약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해보았다.²¹⁾ 아래의 <표 8>은 인터뷰를 실시한 일반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한 내용이며, 유권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2016년 4월 8일 논현동 일대에서 이루어졌다.²²⁾

<표 8>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일반 유권자)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1	오**	여	43	부동산업	논현1동
2	이**	여	86	주부	논현1동
3	김**	여	58	주부	논현고잔동
4	김**	여	54	주부	논현고잔동
5	한**	여	22	대학생	논현고잔동
6	송**	여	82	주부	논현1동

21) 인터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질문하고자 했던 모든 질문들을 하지 못했고 인터뷰 내용 정리에 있어 물어 보지 못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였다.

22) 남동구 갑 지역구의 경우에는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1동, 논현2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수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논현1동이고, 지리상으로 구월동, 간석동, 남촌도림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논현동 일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7	장**	여	25	대학생	논현고잔동
8	김**	여	46	주부	논현1동
9	전**	남	34	직장인	논현고잔동

먼저 “평소에 투표를 하십니까?”,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투표를 하셨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등의 정치 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는 편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한**(22세/여/대학생)씨, 김**(58세/여/주부)씨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김**(46세/여/주부)씨, 오**(43세/여/자영업)씨는 있긴 있으나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 “이번 20대 총선에 남동구 갑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고계십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기억에 남는 공약이 있습니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후보 네 명의 이름 모두를 아는 유권자는 없었으며 후보 3명의 이름을 알았던 유권자는 1명이었고, 2명 이상의 후보 이름을 응답한 사람이 1명, 후보 1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한 사람은 2명,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전**(34/남/직장인)씨는 “딱히 지지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뽑으면 안 되겠다 싶은 후보의 반대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당제 느낌이 나서 어느 당이 독재 느낌이 되어버리면 전혀 상대방 당의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라고 말했고, 김**(58/여/주부)씨는 “박남춘, 이분은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살고, 여기서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문대성은 여기서 살았는데 부산에서 나와 가지고 왜 여기서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두 분 중에서는 저는 박남춘을 지지해요”라는 말로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의 공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선거 공보를 보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한편 오**(43/여/부동산업)씨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공약에 대해서는”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와 비슷하게 한**(22/여/대학생)씨는 “사실 마음에 드는 공약은 그 민중연합당 후보의 그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좀 없어보여서 그거는 좀..아, 재벌세”라고 응답해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에 있어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거주하시는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평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자들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이나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거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이 많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이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감정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응답이 2명,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명 있었으며 한 명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중 이**(86/여/주부)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자기들끼리만 살아서 접촉할 기회가 없으며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해 남동구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1명,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2명,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명이었다.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김**(46세/여/주부)씨는 “내가 중학교 때 느꼈던 거는 이게 놀라웠거든. 아 이게 되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책이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그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련)프로그램이 매주 관리자들이 계속오고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생각 했어요 그때”라고 응답했다.

요컨대 남동구 갑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 갑 지역이 북한이탈주민 최대 거주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북한이탈주민)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1	유**	여	40	연구소 대표	논현1동
2	정**	여	25	대학생	논현1동
3	A	남	40	자영업	논현1동
4	B	여	23	대학생	논현1동

위의 <표9>는 인터뷰에 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한 표이다.²³⁾ 유**(40/여/연구소 대표)씨에 대해서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세 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는 유선 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씨는 앞으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가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새터민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거,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북한 체제에서의 교육이 한국 사회의 교육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역사 교육을 비롯한 시민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씨는 “새터민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나 슬퍼요’가 아니라 뭐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100퍼센트 행정이에요. 하나센터는 행정기관은 아니거든. 행정기관에서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기관으로 가는데. 이게 돌아서 들어가니까 시간 낭비, 인력낭비 되는 거야.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센터 하는

23) 인천 남동구 갑 지역에 거주하는 네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인터뷰했고, 그 중 두 명은 이름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아 A, B로 구분하였다.

일을 구청으로 넣고 하나센터 없애버려도 새터민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라는 말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행정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이 공약으로 반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씨는 “지금은 취업이 생산직, 서비스직에 편중이 되어있어. 그런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못살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왔다고 하면 우선 사는 사람이에요. 상위 10%가 북한에서 대학을 가는데 북한에 대학을. 그 10% 중에 1%가 교사가 돼요. 그 교사를 대우해주는 거가 군인하고 동급이에요 그게 국회의원보다 높아요”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가 교사를 비롯한 엘리트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한국 정부가 훌륭한 인적자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활용한다면, 새터민 지원 사업에 있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게 가보면 다문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90%이상이 다문화 업무, 새터민 부분은 딱 구석에 2명뿐이에요. 다문화는 몇 만 명이고 새터민은 명수가 적긴 하지만. 그렇지만 체계의 문제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도 구청소속으로 되어있어요. 새터민은 구청에서 새터민 확인서 그거 하나 해줘요. 새터민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구, 시에서 뭐한다고 하면 남의 얘기에요”라는 말로 행정체계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질문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정치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서 B(23/여/대학생)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A(남/40/자영업)씨 또한 20대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70여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25/여/대학생)씨는 정치 전반에 관심이 없어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에 대한 질문에 B씨는 후보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투표를 하기보다는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를 먼저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그 공약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약은 탈북 이후 사후 관리에 주목해 연령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즉, 젊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 고령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씨는 자신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말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을 문의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수급자 위주의 탈북자 복지 정책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선 질문에 대해 자신은 새누리당 지지자이지만,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 같다면 지지 변경을 고려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²⁴⁾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받아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거나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약에 대해 A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와 사회에 진출할 때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명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들만 잘 네트워크화하고 관리해도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큰 통일만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탈북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표10>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후보자들)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1	문대성	남	39세	국회의원
2	박남춘	남	57세	국회의원

위의 <표10>은 이번 참여관찰 과정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인천 남동구 갑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한 표이다. 남동구 갑 지역구 후보인 새누리당 문대성,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당 김명수, 민중연합당 임동수 후보에게서 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문대성, 박남춘 후보에게서만 답신이 왔기에 부득이하게 나머지 두 후보는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먼저, “후보자께서 인천 남동구 갑에서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문대성 후보(이하 문 후보)는 “남동구는 인천 정치의 1번지이자 남동공단을 보유한 인천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향이기도 합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남동을 만들고, 세계 속의 남동구와 인천을 만들고자 출마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후보(이하 박 후보)는 “어릴 적 살던 삶의 터전임. 내 고향 남동과 인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오랜 공직생활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의 출마 배경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자신의 고향이 남동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는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특히 주력하는 유권자 집단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유권자 집단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20대에서 40대 유권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취약 연령이기도 한데, 같은 젊은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젊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참여로 당락은 물론 남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에 주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후보 또한 선거캠페인은 별도 유권자 층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의정 성과 및 공약 중심으로 진행하였다고 응답하면서, 별개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24)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새누리당 이외의 정당은 웬지 ‘중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꺼려진다고 응답하였다.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지속하였다고 밝혀 젊은 유권자들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최근의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강경대응은 물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응답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입주기업들에게 피해만 가중.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과 피해가 없도록 외교대응 노력이 필요”라는 의견을 보여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 중 논현동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들을 주요 유권자 집단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분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인종, 사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유권자입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박 후보는 “물론임. 우리 사회 구성원임”이라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 모두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유권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을 이야기했고 박 후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라는 벽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을 주장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지원 확대,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정착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약이나 선거캠페인 유무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는 선거 공보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공약이 없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일 대비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여성 공동 작업장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북한이탈폭력피해여성 상담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동겨레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우수시책사업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더욱 세밀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라고 밝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박 후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였고, 지역구에서 새터민 정착지원 공공센터를 건립

을 지원해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도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일자리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두 후보자 모두 북한이탈주민을 지역 유권자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문 후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박 후보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5. 선거 결과

선거결과, 50.58%의 표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승리하였으며 그 뒤를 33.15%의 지지율로 문대성 후보가 뒤따랐다. 박남춘 후보가 승리한 이유로는 남동구 갑 지역구의 특성 중 하나인 현역의원 지지 성향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남동구 갑 지역구에서는 15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이윤성 전 의원의 4선이 가능했으며 그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았다. 박남춘 후보 역시 19대 현역의원이었기에 남동구 갑의 이러한 특성이 적용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박남춘 후보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7위,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응답에서도 박남춘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구의 특성인 현직의원 지지 성향과 박남춘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박남춘 후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을 제시하여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도 당선을 도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남춘 후보는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와 관련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박남춘 후보의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타 후보에 비해 뛰어났고 유권자들이 이에 표로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달(Dahl 1971)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다(지병근 외 2014 재인용). 박남춘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실제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보다 큰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아래의 <표12>는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비교한 표이다.²⁶⁾ 정당득표율에

25) 박남춘 후보의 선거 공보를 참고함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정당득표율 자료에서는 남동구 지역을 선거구별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구 갑, 남동구 을 지역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있어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33.5%), 국민의당(26.74%), 더불어민주당(25.54%), 민중연합당(7.23%) 순으로 높았으며 인천광역시도 새누리당(33.42%), 국민의당(26.87%), 더불어민주당(25.43%), 민중연합당(7.49%) 순이었다. 한편 남동구 지역은 새누리당(32.34%), 더불어민주당(28.32%), 국민의당(25.74%), 민중연합당(7.20%) 순으로 높아, 전국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국 및 인천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11> 20대 총선 남동 갑 지역구 투표 결과

후보	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문대성	새누리당	37,212	33.15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56,857	50.58
김명수	국민의당	16,556	14.72
임동수	민중연합당	1,726	1.53
전체		112,351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표12>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남동구(갑, 을)	32.34	28.32	25.74	7.20
인천광역시	33.42	25.43	26.87	7.49
전국	33.5	25.54	26.74	7.2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참고하여 재구성

6.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최대 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진 남동구 갑 지역에서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분위기였다. 또한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공약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갑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지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현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 결과 역시 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동구 갑 지역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정책선거 문화 구현의 출발점은 후보자의 알찬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후보자의 공약은 지역구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박남춘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문대성 후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공약이 없었으나 당선된 박남춘 후보는 19대 총선부터 꾸준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구의 특성을 잘 살린 정책과 공약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 선거의 측면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은 이들이 당·정·군 간부 자녀 중에서 선발돼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국경제 2016/04/10). 또한 이번 귀순 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래로부터 동요하는 북한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연합뉴스 2016/04/10). 이에 덧붙여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유럽연합(EU)과 북한 간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더욱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연합뉴스 2016/04/20).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길 원하는 사항들 즉, 단기적인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수급자 입장에서 관리, 시민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후보자들이 공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을 우리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동구 갑 지역구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후보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유권자로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약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에 의한 지속적인 공약 제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공약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을 맞은 20대 총선에서 정책 선거는 한걸음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정희욱 2012, 152). 정당과 후보자들이 일반 유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소수자까지 대변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향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선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유성진. 2014.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 한계와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8(5): 97-117.
- 정희옥. 201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 정당학회보』 11(2): 125-155.
-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111-135.
- _____. 2012. “국회부의장의 무소속과 도전과 좌절: 인천 남동 갑 국회의원선거 참여관찰”. 한국정당학회 『19대 총선현장리포트』 서울: 푸른길.
- 지병근·신두철·정하운.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민주적 반응성 : 제6회 지방선거사례분석”. 『의정논총』 9(2): 189-209.
- 통일부. 2016. “통일문제 이해”. 1-313.
- 황아란. 2015.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1998년~2014년 통합자료 분석”. 『지방행정연구』 29(3): 3-26.
- Dahl, Robert.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aw.
- 『경인일보』, 2016년 3월 14일자.
- _____, 2016년 3월 29일자.
- _____, 2016년 4월 5일자.
- 『경향신문』, 2016년 4월 6일자.
- 『동아일보』, 2016년 4월 4일자.
- 『서울일보』, 2016년 4월 3일자.
- 『연합뉴스』, 2016년 3월 14일자.
- _____, 2016년 3월 26일자.
- _____, 2016년 4월 10일자.
- _____, 2016년 4월 20일자.
- 『인천일보』, 2016년 4월 5일자.
- 『중앙일보』, 2016년 4월 11일자.
- 『한국경제』, 2016년 4월 10일자.

9. 정책쟁점별 선거방송 보도내역

■ 총선 전 보도

1. 서론

선거 전에는 정책쟁점별 참여관찰 연구가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 참여관찰 지역구를 아우를 수 있는 함의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7개 지역구에서 여성,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입후보했다는 점에 착안해 정치적 소수자들의 총선과 정책 선거 부분을 분석해 보도했다. 리포트 2쪽지가 아래와 같이 뉴스9에 보도됐다.

4월 9일	4월 10일
제목 : 여성후보 10.4%...당선권에도 소수	제목 : 청년후보 7%... 장애인 후보도
	

리포트 기자 : 황진우	리포트 기자 : 황진우
<앵커 멘트>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를 살펴보면, 10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고 당선 안정권은 더 적습니다.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가해왔던 여성 의원수가 이번엔 줄어들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13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총선 후보자들, 등록된 지역구 후보자 935명 가운데 여성은 98명, 전체의 10.4%에 불과합니다. 국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후보자 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당선 안정권에 있는 여성 후보자들의 수는 더 줄어듭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당선 전망을 해 보면, 지역구에서 20명 안팎이 당선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47석이 걸린 비례대표에서는 여자, 남자 순서대로 추천을 하게 돼 있기에 24석 정도를 여성 후보자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 입성할 여성 의원은 44명 안팎, 비율은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의원의 수가 17대 40명, 18대 41명, 19대 45명으로 증가해 왔는데 20대 국회에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주현(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 관련된 인권, 다음에 복지 정책에 관련된 입법 제정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참여관찰 방식으로 여성 후보자와 20대 총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앵커 멘트> 한국 정당학회와 함께 정치적 소수자들의 이해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청년과 장애인, 대표적인 정치적 소수자인데, 이번 20대 국회에 진출할 후보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구 도전에 나선 총선 후보자 935명의 평균 연령은 쉰 다섯살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49.1%로 가장 많고 40대가 21.1%, 60대가 20%로 중장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청년층은 30대 5.3%, 20대 2.1%로 7.4%에 불과합니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당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대 국회에 입성이 유력한 청년 후보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비례 7번을 받은 신보라, 김수민 두 후보 뿐입니다. 더민주 16번 정은혜 후보와 정의당 6번 조성주 후보는 당선 근접권에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수당 등 각 당이 내 놓은 청년 정책들도 재원 조달 방안 부실 등 선거를 위해 급히 만들어진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수(청년이 만드는 세상 공동대표) : "청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를 위한 정책공약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이 4명, 더민주가 5명으로 두 당만이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 3명만 당선이 가능해 보이고 6명의 장애인 정치 신인들은 당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총선 후 보도

1. 서론

선거 후에는 참여관찰 정책 평가를 수행한 7개 지역구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구 2곳을 선정해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역시 선거 전에 한 차례 보도했던 정치적 소수자, 여성 후보의 선전 결과를 보도하기로 했고 또 다른 보도는 세대 별로 투표 행위가 달랐던 한 지역구의 참여 관찰 정책 평가 결과를 보도하기로 했다. 리포트 2쪽지가 아래와 같이 ‘뉴스광장’에 보도됐다.

5월 6일	5월 7일
제목 : 여성 당선인 역대 최다...배경은?	제목 : 국민의당 “광주 석권”...표심은 세대별‘로 갈렸다

리포트 기자 : 황진우	리포트 기자 : 김기홍
<앵커멘트> 지난달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KBS와 한국 정당학회가 서울 강남 을 지역에서 벌어진 남, 여 후보간 경쟁과 선거과정을 심층관찰한 결과 여성이라는 점이 과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고> 20대 총선을 통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성 후보자는 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의 17%가 여성입니다. 여성 의원은 17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게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당학회가 선거 기간 관찰한 서울 강남 을 지역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개포, 일원, 수서, 세곡동의 '강남 을' 지역은 남성인 여당 현역 국회의원의 압승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선거 전 실시됐던 세 차례의 여론조사 모두 여당 후보가 15%p 이상의 차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야당 여성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장관 출신의 여당 남성 후보는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굵직굵직한 정책형 공약을 내건 반면, 야당의 여성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강남을 만들겠다는 등의 생활형 공약으로 차별화했는데, 생활형 공약이 잘 먹혔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강주현/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배려하면서 지역구민 과 소통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의 프레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승리한 여성 후보는 강남이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했던 점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앵커멘트> 20대 총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압승을 한 건데요. KBS와 한국 정당학회가 광주 동남구 을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의 동별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유권자 표심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구 28곳 가운데 23곳에서 승리한 반면, 더민주는 3곳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광주에선 국민의당이 8곳 모두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유권자 표심은 달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당학회가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 동남구 을의 동별 득표율을 들여다 봤습니다 2030세대의 비중이 높은 동들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와 더민주의 후보간의 득표율 격차가 5060세대의 비중의 높은 동들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정치신인을 내세운 더민주는 '구태정치 청산'을... 현역의원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호남정치 부활'을 강조했는데 세대별로 공감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민희/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젊은층은 호남 정치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힘 들었던 것 같고 반면 호남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잘 전 달되지 않았나?"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세대별 유권자 표심이 다르게 표출된 만큼 호남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인 두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홍입니다.(끝)

10. 맺음말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특정 직업군과 학력의 연관성, 공천경쟁 구도, 문중대결, 사회경제 변화, 선거구 조정, 무상복지 대 지역개발, 여성 후보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제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방향 모색이 절실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정부기관, 언론, 학계가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관찰을 통해 다양한 선거구에서의 선거행태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물은 20대 총선을 넘어서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진단과 지향점 모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을 선거구를 참여관찰한 결과, 후보들이 과학기술 공약이라는 정책 쟁점을 통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환기해 다른 선거구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또한 정책 쟁점의 장기적 특성에서 여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율을 제고시켰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광주광역시 동남구 을 지역구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한국 선거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지역주의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로 안동시를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 신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문제, 문화·관광 발전 이슈를 언론 매체나 여론 주도 세력이 공론화하는 모습을 분석해 지역 현안의 문제가 정책 쟁점으로 어떻게 선거경쟁에서 부상하는지 살펴보았다. 넷째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지역구를 연구한 결과, 야당의 정책 공약은 정책 인식보다는 정치 논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반 여당 정책 위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당정치의 한계로 인해 공천 갈등, 야당 분당 등 중앙정치의 정치 현안이 주목받으면서 지역구 위주의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반감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지역구는 성남시 중원구로, 올해 초 가장 큰 정책 이슈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이었으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자 후보자들은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문제 해결 등으로 정책 쟁점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후보는 무상복지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우위에 설 수 없어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강남구를 선거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승리의 원

인으로는 전현희 후보가 철저하게 지역 민심을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공약을 설계하였으며 공약 실현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지역구 참여관찰에서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역 유권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유권자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들을 위한 공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선거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 선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선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로 후보자의 공약을 비롯한 정책들을 유권자들에 전달하는 것에 있어 언론의 기능을 확대해야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도 지적하였듯 2016년 총선보도감시연대의 분석에 의하면 선거 관련 기사 중 정책, 후보 검증에 대한 기사는 각각 약 8%, 3%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을 유권자들에 전달하는 측면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국민일보 2016/04/18).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는 정책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 강남구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같이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공약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후보자의 정책 선거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보았듯 유권자들은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남발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알찬 공약 위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행한 참여관찰은 주제별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지역구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소수자를 포함한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된 이번 20대 총선에서 한국 선거의 현주소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정책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김선영·김준석·길정아. 2013.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 47(1): 167-183.
- 박명호. 2003.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한국정당학회보』 . 2(1): 215-237.
- 송건섭·이곤수.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2006년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5(3): 49-71.
- 이호영. 2009.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장애요인과 실천적 대안”. 『21세기정치학회보』 . 19(3): 221-244.
- 이현출. 2006.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조진만. 2010. “2010 시민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 44(2): 113-134.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 2015

『국민일보』 , 2016년 4월 18일자.